2024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WWW.UNIKOREA.GO.KR



통일부

발 간 사



2023년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립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통일'이라는 이루지 못한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소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폭정과 탄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부정당하고,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질서의 유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기후변화·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신안보 위협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대내외 정세 속에서 2023년 통일부는 흔들림 없이 헌법적 책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담대한 구상」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우리 재산권 침해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인권 개선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과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취업, 의료,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혀 나가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며,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밝히고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힘을 모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일은 2,600만 북한주민도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민족사적 과업이자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하는 세계사적 과업입니다. 통일부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가 확장되는 통일 한반도,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통일은 결코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 국민들의 의지가 결집되고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로 가는 여정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 통일백서』 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장이 되고, 통일문제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살아 숨 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통일부장관 **김 영 호**

발간사 2

제1장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

제1절 통일·대북정책 16
[1] 추진 방향 16
[2] 정책기조 재확립 노력 19

제2절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 21
[1] 「담대한 구상」 추진 21
[2] 국내외 지지 확보 노력 27

제3절 남북관계의 정상화 30
[1]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 30
[2]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33
[3]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반영한 조직개편 실시 35

제2장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제1절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 42
[1]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42
[2] 국내외 공감대 확산과 시민사회 협력 43
[3]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47
[4]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추진 52
[5] 북한인권기록센터 활성화 54

제2절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57
[1] 이산가족 현황 57
[2]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 58
[3] 남북 간 인도적 사안 처리절차 개선 64

제3절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65
[1] 현황 65
[2] 문제 해결 노력 66

제4절 대북 인도적 지원 기반 개선 71
[1] 인도적 지원 제도 개선 71
[2]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 72
[3] 민관협업을 통한 정책공감대 형성 73
[4] 분야별 인도협력 방안 모색 75

제3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제1절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84

제2절 북한이탈주민 교육 및 지원체계 확충 86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개편·운영 86
[2] 건강증진 및 정서안정 93
[3] 화천 분소(제2하나원) 운영 96
[4] 북한이탈주민 이해제고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98
[5] 「하나원 프레스데이」 행사 개최 100
[6] 북한이탈주민 친정집 나들이 행사 개최 101
[7]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102

제3절 북한이탈주민 고용과 삶의 질 개선 104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104
2 북한이탈주민 경제 활동 지원 강화 105
3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111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114

제4절 위기·취약 북한이탈주민 보호 121
1 북한이탈주민에 특화된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121
2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125
3 하나센터 역량 강화 126

제4장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제1절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134
1 통일미래비전 구상 134
2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대 확산 137
3 지역별 통일+센터 단계적 설치 및 운영 145
4 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148

제2절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충 154
1 주요국 정부·의회 대화와 주한공관 소통 강화 154
2 국제회의 개최 및 통일공공외교 강화 159

제3절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향상 167
1 「북한정보포털」 시스템 운영 167
2 북한자료센터 서비스 확대 168
3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 171

제4절 통일법제 구축 173

제5절 남북협력기금 운영 내실화 175
1 남북협력기금 수입 175
2 남북협력기금 지출 176
3 2023년 사업비 집행 실적 178

제5장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제1절 통일교육 기반 확충 184
1 통일교육 방향 정립과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184
2 통일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185
3 통일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193
4 「제11회 통일교육주간」 운영을 통한 국민 공감대 확산 200
5 통일교육연구센터 활동 강화 202

제2절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204
1 참여·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 204
2 학교통일교육 모범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 향상 205
3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206

제3절 지역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209
1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한 통일교육 실시 209
2 통일교육위원 역량과 통일·대북정책 홍보 강화 212
3 통일관 운영 활성화 213
4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216
5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217

제4절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219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활동 현황 219
2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221

제6장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제1절 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질서있게 정비 232
1 법·제도 정비 232
2 중앙-지자체 교류협력 협의·조정 내실화 233
3 교류협력 안내 서비스 강화 235
4 남북출입사무소 운영 236

제2절 남북 협력기반 재정비 238
1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대응 238
2 남북 경제교류의 추진 기반 조성 239
3 주요 경협사업 주체 관리 241

제3절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243
1 문화유산 교류 243
2 종교 교류 245
3 체육 교류 246
4 DMZ 연계 사업 추진 247

제4절 대북협상 역량 강화 250
1 남북 연락채널의 정상화 촉구 250
2 남북회담 대비 역량강화 250
3 남북회담사료 공개를 통한 국민 알권리 충족 252

부록 APPENDIX

Ⅰ. 통일방안 관련 대통령 연설문 256
1 노태우 대통령 국회 특별연설 256
2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264

Ⅱ. 남북관계 주요 일지 269

Ⅲ.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 278
1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현황 278
2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 279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 280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282
5 남북 왕래 인원 현황 290
6 남북교역액 현황 291
7 개성공단사업 현황 292
8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293
9 남북회담 추진 현황 296
10 통일교육 및 연수 현황 297

Ⅳ.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298
1 기금 조성 실적 298
2 기금 사용 실적 300

Ⅴ.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302

찾아보기(INDEX) 304

01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

제1절 | 통일·대북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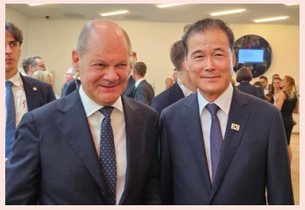
제2절 |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

제3절 | 남북관계의 정상화

통일부











제1장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

2023년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대외 강경노선 유지로 남북관계 교착 국면이 장기간 이어졌다. 북한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기회로 인식하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한편,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5월과 8월(모두 실패), 11월 세 차례 발사하였다. 9월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문화하는 등 핵보유 의지를 강화하였다.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12.26.~30.)에서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전선부 등의 기구 정리·개편을 결정하였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도모하는 종합적 접근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과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을 통해 압도적인 억제 역량을 확충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레짐을 계속 유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전략적 여건을 조성해 나갔다.

한편으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대남 위협 등 잘못된 행동에는 원칙에 입각하여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국격을 지키면서 보편적 가치가 구현되는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절 통일·대북정책

1 추진 방향

2023년 정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통일·대북정책 비전 아래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추진동력을 확충한다는 정책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대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

2023년 통일부 업무 추진 체계도

기본방향	①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 기조 견지 ②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 ③ 국제사회와의 협력·연대를 통한 추진동력 확충	
7대 핵심 추진과제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①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②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③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통일미래 준비	④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 ⑤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⑥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⑦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

우선,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해 「담대한 구상」의 억제·단념·대화의 종합적 접근을 제시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겠다는 과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통일미래 준비 차원에서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재정립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통일관과 대북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내외 통일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겠다는 과제도 제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제104주년 3·1절 기념사(3.1.)에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4.26.)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설립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8.15.)에서도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더 나아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8.18.)에서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함으로써,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일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점을 3국 정상 차원에서 최초로 확인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통일의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먼저 온 통일'로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통일담론을 기존의 남북관계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다양한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강조하였다.

2 정책기조 재확립 노력

통일부는 헌법적 책무와 보편가치에 부합하는 부처 본연의 정책 기조를 확립하고,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북한 실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통일관, 안보관, 역사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학교 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 차원의 북한인권 기능과 북한의 정확한 실상 파악 차원의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의 대화거부에 따른 남북관계 교착 장기화로 수요가 줄어든 남북대화, 교류협력, 출입경관리 등의 기능은 조정하고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4월, 9월)하였다.

우선,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큰 방향성 아래,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정부 최초로 공개 발간(3.30.)하여 북한인권 문제의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히 알리고 그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또한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총 20억 원 규모)을 최초로 실시하여 민간 북한인권 생태계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였다.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12.26.)하여 북한인권 정책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하였으며,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통령 제104주년 3·1절 기념사(3.1.)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4.26.)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 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8.18.)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3자 실무그룹 신설"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



한편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과 금강산 시설 무단 철거가 계속됨에 따라 2023년 4월 11일 통일부장관 성명을 통해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다. 나아가 북한이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하여 2023년 6월 14일 북한당국을 상대로 국유재산 피해액 약 44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다.

또한 그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단체와 사업자들의 불법과 일탈 행위들이 발생했던 전례들을 감안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주민과 접촉하거나, 접촉 결과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법률 위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건전한 민간 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개소(8.17.)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9.8.)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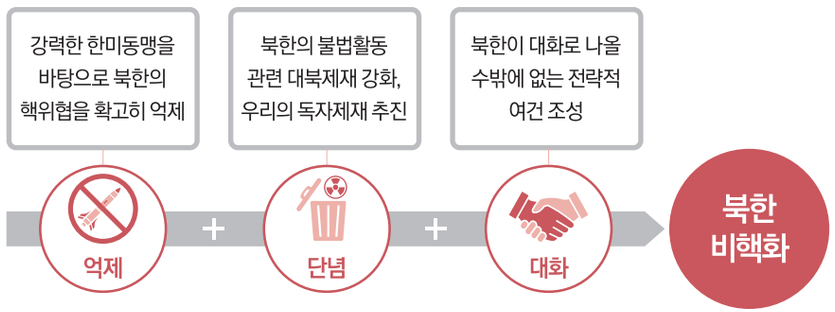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례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가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2020년 이후 동결(1인 세대 기준 800만 원) 되었던 정착기본금을 1천만 원으로 인상(2023·2024년 각 100만 원씩 증액)하였고, 각자 자신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구직 준비과정인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였다. 12월에는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기관으로서 '마음소리공감 상담센터'를 9월 인천광역시에 개설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 지원 정책도 보완하였다.

제2절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

1 「담대한 구상」 추진

정부는 2022년 8·15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한 이후, 2023년에도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구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천방안이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의 총체적 접근('3D'), 즉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담대한 구상」 '3D' 접근



아울러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경우 과감한 초기조치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고, 비핵화 단계별로 경제·정치·군사 분야별

상응조치를 망라한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이며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북한에 단순히 유인을 제시하고 북한의 호응에 기대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압도적 억제력을 갖추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켜 나가되,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경우 민생 개선사업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를 거듭 강조하였다.

대통령 8·15 경축사, "「담대한 구상」 흔들림 없이 가동"(8.15.)

"지난해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Deterrence)를 강화하였다. 한미 정상회담(4.26.)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정보공유, 공동 기획·실행, 협의체계 등 분야별로 구체화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신설·가동(7.18.)하였고, 한반도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 중이다. 이를 통해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워싱턴 선언」(4.26.) 주요 내용

- 확장억제 강화, 핵 및 전략 기획 토의, 북한의 위협 관리를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
- 한미동맹은 유사 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강화
-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
-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 양국 군 간의 공조 확대·심화

아울러 한미일 정상회의(8.18.)에서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자 안보협력 증진 기반도 마련하였다. 동 선언에 따라 한미일 3국은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한미일 3자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8.18.) 주요 내용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
-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3자 실무그룹 신설
-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
-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미 합동 사이버 보안 권고문 발표(2.9.)에 이어 사이버 분야 최초로 한미 동시 독자제재를 발표(4.24.)하는 등 북한의 불

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였다.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8.18.) 후속조치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 당국 간 실무그룹을 출범(12.7.)시켜 본격적인 한미일 공조체계를 가동하였다. 2023년 한 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여 핵·미사일 개발 및 금수품목 조달,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총 12차례 대북 독자제재를 시행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대화(Dialogue)의 장으로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4.26.),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8.18.) 등 계기 시마다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천명하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였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9.14.)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릴수록 한미일의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는 '올바른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통일연구원 학술회의(9.19.) 축사를 통해 "힘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 당국이 핵개발의 무용성을 깨닫고 「담대한 구상」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언제든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담대한 구상」의 방향이 2022년에 마련되었다면, 2023년에는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른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경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초기조치를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초기조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해당 대금을 식량·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 구입에 활용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협력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이후 비핵화 단계에 맞춰 사업을 확대

또한 북한 비핵화의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할 경제·정치·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기술 지원 프로그램 등 5대 경제 분야 상응조치, 미북 관계 정상화,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등 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구체화하고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향후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경우 동 이행계획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초기조치 + 포괄적 합의

-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 협상모멘텀 확보·유지

- **포괄적 합의 도출**
  - 비핵화 정의·목표
  -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조치 등 로드맵 합의

실질적 비핵화

[경제협력]
-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미북관계 개선]

[평화 구축]
- 평화체제 구축 논의

[군사적 긴장완화]
- 군사적 신뢰구축

완전한 비핵화

[공동번영]
-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
  - 전면적 투자·교역 확대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본격 이행

[미북관계 정상화]

[평화 정착]
-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군사적 신뢰증진]
- 군비통제 본격화

2 국내외 지지 확보 노력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여, 정책 추진여건을 개선하는 등 추동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정상외교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4.26.), 한미일 정상회의(8.18.)를 비롯하여 한·캐나다 정상회담(5.17.), 한·EU 정상회담(5.22.), 한·사우디 정상회담(10.24.), 한영 정상회담(11.22.), 한·네덜란드 정상회담(12.13.) 등에서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캐나다와 EU는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비전을 지지하였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 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

한영 정상회담 다우닝가 합의(11.22.)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목표를 지지"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대화와 노력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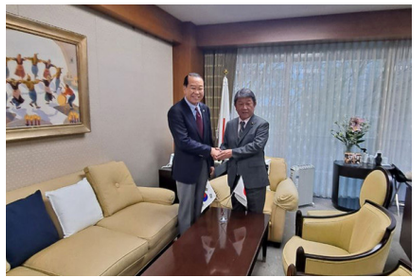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공동성명(12.13.)

"핵이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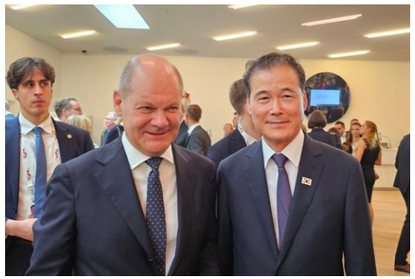


하였다. 영국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장관은 주요 외빈 면담 및 일본, 독일, 영국 등 해외 방문 계기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핵·미사일, 납북자 문제 등 한일 간 협력 강화를 논의(3.23.)하였다. 또한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개최된 「한반도국제포럼」(KGF) 유럽 세미나(9.29.),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33회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10.3.) 등에서 유럽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과 면담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핵문제는 한반도를 넘어 유럽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북핵과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과 유럽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통일부장관, 일본 방문(3.23.)



통일부장관,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 참석(10.3.)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 또한 중요한 행위자로 보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병행하였다. 대통령은 영국매체 텔레그래프(Telegraph) 인터뷰(11.19.)에서 "중국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 러시아와 3국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자국의 국제적 명성과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러북 간의 불법 무기거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장관은 「글로벌NK 국제회의」(5.10.)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뒷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정부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허용한다면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적으로도 통일부장관 연설, 인터뷰,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담대한 구상」을 상세히 설명하고,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담대한 구상」 발전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담대한 구상」을 통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담대한 구상」 경제분야 국제포럼을 개최(7.5.)하여 국내외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국제포럼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담대한 구상」'을 주제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였고, 국제기구의 개발협력과 투자, 민생개선과 그린데탕트 추진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담대한 구상」 공개 세미나'를 개최(12.18.)하여 전문가, 언론, 학생, 일반 국민들이 북한 비핵화와 북한인권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담대한 구상」 경제 분야 국제포럼(7.5.)



「담대한 구상」 공개 세미나(12.18.)

제3절 남북관계의 정상화

1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 비방 등에 단호히 대처하였으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아 남북관계를 정상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때마다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 또한, 2023년 대북 독자제재를 지정하여 우리 국민과의 금융 거래, 외환 거래를 금지하고 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 강력한 상응조치를 단행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한미일 동시 제재(3회)와 한미 동시 제재(2회) 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 협력을 강화하였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을 주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북한은 4월 7일부터 남북 간 정기적 소통 수단인 남북통신연락선에 불응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사용하는 등 재산권 침해를 지속하였다. 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내 우리측 시설 무단 사용은 우리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을 명백히 밝히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10년 만에 통일부장관 명의로 대북 성명을 발표(4.11.)하여 북한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개성공단 무단 사용은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였다.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통일부장관 성명 발표(4.11.)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행위였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는 2023년 6월 14일 북한을 상대로 국유재산 손해액 447억 원(남북공동연락사무소 103억 원,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344억 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시설을 철거하는 등 우리측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고 중단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발표(6.14.)

또한 북한은 수도권 지역 무인기 침범, 중부전선 GP 총격 도발,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완충구역 내 해안포 사격, 해안포문 개방 등 「9·19 군사 합의」를 3,600여 회 위반하였다. 11월 21일에는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여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을 심화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에 대해 '남북 간 신뢰관계 정착 시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하였다.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군의 정찰·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이다.

한편 정부는 '남북 간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지속 촉구하는 등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남북 간 연락채널이 단절된 상황에서, 가능한 계기와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있음을 강조하였다. 한미 정상회담(4.26.)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미일 정상회의(8.18.)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도 3국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함을 확인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5.22.)에서 '그 어떤 문제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음'을 밝히며, 북한은 '도발과 단절이 아닌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함'을 촉구하였다. 통일부장관 취임사(7.28.)를 통해서도 '북한과의 대화, 협력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임시 국무회의(11.22.)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언론 브리핑(11.22.)

2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북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제4차, 2023~2027)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비롯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42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부는 6월 20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8기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2006년부터 운영되었으며, 현재 제8기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위원장) 및 14개 부처 차관과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의 핵심 기조는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제4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다.

「제4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크게 비전, 목표, 추진원칙,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등 세 가지 목표를 수립하였다. 추진원칙으로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 국제 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모두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1차년도 계획인 「2023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도 수립하였다.

제4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추진방향

비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목표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관계 정상화** ①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②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③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추진원칙	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③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
중점 추진과제	①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②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③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④ 북한 정보분석 강화 ⑤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3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반영한 조직개편 실시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에 장기간 응답하지 않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4월, 9월)하였다.

우선 통일·대북정책과 전략 수립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기존 '통일정책실'을 '통일정책실'과 '통일협력국'으로 분리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 및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협력 기능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대북정책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하기 위해 '메시지기획팀'을, 북한 실상을 대내외에 제대로 알리고 통일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통일인식확산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북한 정보 분석 기능을 한층 개선하였다. 기존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함으로써, 국내외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및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 능력을 제고하였다. '사회문화분석팀'을 신설하여 북한의 사회·문화 변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고자 하였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조직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시켰다.

남북관계 교착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요가 줄어든 남북회담, 교류협력, 출입경관리 등의 기능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 조정하는 한편, 교류협력의 원칙과 질서를 확립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대북협상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기반한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대국민 통일역량을 확충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북한 실상을 대내외에 정확히 알리고 확산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통일관·대북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등 새로운 통일·대북정책 환경에 맞게 업무를 혁신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향후 남북 간 대화나 교류협력 수요가 발생하고 대내외 환경이 변화할 경우, 상황에 맞게 조직을 신속히 정비하여 통일부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조직과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 조직도



※ : 신설·확대 또는 통합·개편된 기구

02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제1절 |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

제2절 |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제3절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제4절 | 대북 인도적 지원 기반 개선











제2장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인권 증진을 통일·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 최초의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3.30.)하였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은 국내외에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편성하여 18개 민간단체에게 총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핵심 허브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북한인권 자료를 전시하고 북한 실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자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만큼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8.18.)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상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국회의 인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3.10.)하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12.26.)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분단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월에는 그동안 민간단체 차원에서 기념해 온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음력 8월 13일, 추석 전전(前前)날)하였고, 정부 주관의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9.27.)하였다.

특히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의 국가책무로 적극 인식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8.18.)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정부는 9월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원회」를 개최(11.14.)하여 그동안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여파로 백신, 식량 등 외부지원이 북한에 장기간 들어가지 못하였고, 북한은 여전히 평양에 상주하던 국제기구의 복귀에도 호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제1절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

1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해 왔다. 북한인권 실태 주요 조사결과는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에 포함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2023년에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3.30.)하였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로서,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인권 상황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1,600여 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목차는 「국제인권규약」을 기준으로 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로 구성되었다. '자유권'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사회권'은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여성·아동·장애인 인권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심각한 인권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도 '특별사안'으로 별도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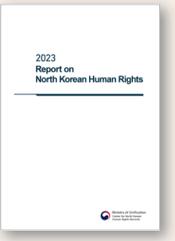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 당국이 생활총화, 각종 검열 등 다양한 통제 기제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인권 실태의 전반을 기록하였다. 특히 북한 당국이 체제유지를 위해 공개처형·고문, 강제노동, 사상통제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가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폭행, 강제낙태, 성폭력 등 강제북송자에 대하여 자행되는 다양한 가혹행위도 서술하였다.

정부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국문판을 3월 30일 통일부 누리집에 첫 공개하였으며 정부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민간단체 등에 3월 31일부터 배포하였다. 또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해외에 알릴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도 제작하여 주한외국공관·재외공관·국제기구·국내외 연구소 등에 7월 7일부터 배포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상세히 알리기 위해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 국문판(3.30.)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7.7.)

2 국내외 공감대 확산과 시민사회 협력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인권 조사기록의 의미 및 북한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4.24.)하였다. 동 토론회는 통일부와 김석기, 태영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이후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외신 기자단 및 주한 외교단 등을 초청하여 보고서 발간 의의 및 내용을 설명하는 좌담회를 개최(7.11.)하였다. 동 좌담회에는 관련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인권보고서』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계기 토론회(4.24.)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 계기 좌담회(7.11.)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 및 전시하였다. 북한인권 침해 사례와 실상, 국제사회의 노력을 담은 사진, 그림, 증언 등 26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외 행사 등 다양한 계기에 활용하였다. 5월(서울)과 9월(목포) 통일문화 공감 행사 시 '북한인권존'에 전시되었으며, 11월 한 달간은 대전 시민을 위한 북한인권 전시회에 활용되었다. 또한 7월 미국 워싱턴 D.C. 및 10월 독일 함부르크 재외동포 문화행사 시에도 활용되었다. 9월부터 전 군 장병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사업은 2024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문화를 활용한 북한인권 인식 확산 계기 마련을 위해 「2023 북한인권 영화 다시보기」(9.13.~15.) 행사를 개최하였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작품 「리멤버 미」(원제: 트루 노스)를 개막작으로 상영하고 이 작품의 감독인 시미즈



통일문화 공감행사 북한인권 전시(5.26.)



군 장병 대상 북한인권 전시(2023.9.~2024.4.)

에이지 한, 수용소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북한인권 관련 국제 민간단체 관계자와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1990년대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배경으로 한 「사랑의 선물」, 실제 탈북루트를 그린 「메콩강에 악어가 산다」, 북한 내부 상황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노스코리아 VJ」, 탈북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아리아」 등 총 5편의 작품이 릴레이 상영되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인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북한이탈주민 등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를 개최하였다. 9월에는 재중 북한이탈주민 북송 문제,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 국민 문제, 북한인권 피해 구제에 대해 토론하였고, 10월에는 북한인권조사기록, 북한이탈주민 역할 증대, 북한주민 외부정보 접근권에 대해 논의하였다. 11월에는 북한인권 교육과 인권-북핵 연계 포괄 접근방안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8차례 주제별 토론회 후 개최된 워크숍(11.30.)에서 10대 정책제언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동안 비공개로 개최하던 「북한인권 상호대화」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였다. 카드뉴스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대학에 홍보하는 등 젊은 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핵심 허브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260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완공할 계획이며,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건립될 예정이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구 분	개최일	주 제
토론회	9.7.	재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
	9.14.	국군포로, 납북·억류 국민 문제
	9.21.	북한인권 피해 구제와 북한 상대 소송 지원
	10.12.	북한인권조사기록, 정부-민간의 역할과 과제
	10.19.	북한인권 분야 탈북민들의 역할과 활동 증대 방안
	10.26.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 여건과 증대 방안
	11.9.	북한인권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11.16.	인권-북핵 연계 포괄 접근방안
워크숍	11.30.	종합 토론회



「북한인권 영화 다시보기」(9.13.)



「북한인권 상호대화」(4차, 10.12.)

북한인권 자료를 전시하고 북한 실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자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센터 운영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인권 영화제, 오페라, 음악회, 사진전 등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한 대관 지원체계도 마련하여 북한인권 커뮤니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인권뿐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적 인권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 공모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상반기 15개 단체, 하반기 3개 단체 등 총 18개의 단체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총 20억 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시민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 단체 역량강화 워크숍(4.27.) 및 교육(10.20.)을 실시하였다. 보조사업을 수행한 18개 단체는 총 29개의 사업(총 62회 행사 개최)을 수행하였는데, 14건의 컨퍼런스·세미나·역량강화 워크숍 등 학술행사, 7건의 국내외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오페라·연극·음악공연 등 5건의 문화행사, 방탈출 게임 등 1건의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 관련 국제협력 사업 2건 등이 있었다. 시민사회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3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만큼, 북한인권 문제 역시 남북 간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 이슈로 접근하고 있다. 국익을 증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급 외교에서도 북한인권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4.26.)에서 양 정상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8.18.)에서 한미일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한·캐나다 정상회담(5.17.)에서 양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침해와 복지 외면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영 정상회담 다우닝가 합의(11.22.)에서 양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제52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제77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데 이어, 제78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다.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는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되었고, 제78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는 당사국들이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관련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할 것과, 북한 당국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재검토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문안이 추가되었다.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OHCHR) 서울사무소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접견(9.11.)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통일부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 신설 등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관심을 표시하였다. 그 후에도 통일부장관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화상 면담(10.17.)을 통해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OHCHR 부대표 면담(10.30.)을 통해 OHCHR 서울사무소와의 북한인권 조사 역량 강화, 정보



통일부장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접견(9.11.)



통일부장관,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접견(10.17.)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통일부는 OHCHR 서울사무소의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대상 면접 조사를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미국, 영국 등 북한인권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였다. 2017년 이후 개최하지 않은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6년 만에 개최(11.15.)하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간 정책방향을 공유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접견(10.17.)하여 북한인권 관련 한미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적 의원그룹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을 수차례 면담(2월, 9월, 10월)하여 북한주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2월에는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방한을 계기로 '북한주민의 생명권 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2.10.)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동대응을 촉구하였다.

특히, 통일부장관은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가가 국제규범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미국 북한인권특사와 면담(10.17.)한 내용은 국제 전문가들의 성명 발표에 반영되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민 수백 명을 중국이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그 누구도 고문과 사형 등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10.18.)하였다.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의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관련 엄중한 입장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영국 의원들과 함께 영국 외교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우려 서한을 전달하였다.

정부는 주한외국공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설명회를 개최(10.19.)하였다. 설명회는 주한외국공관(22개국), 국제기구, 국제 민간단체 관계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 북한인권 실태조사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통일부장관,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화상 면담(10.17.)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국제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통일부장관은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이하 HRF) 대표단과의 면담(10.23.)을 통해 문화적 접근 방안 등 효과적인 북한인권 실상 전파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통일부차관은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 상임이사를 면담(5.26.)하여 북한인권 관련 정부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HRF 대표단과 후속 면담(10.24.)을 통해 북한인권 홍보 관련 협력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실제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를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상영(11.24.)하기도 하였다.




통일부장관, HRF 대표단 면담(10.23.)　　통일부차관, HRW 상임이사 면담(5.26.)

정부는 북한인권 논의 활성화 및 국제사회 관심 제고를 위해 국내외 저명 인사를 초청하여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12.18.)하였다.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사회로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태영호 국회의원,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를 포함하여 영국, 독일, 캐나다의 주한대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회의에서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의 의미를 새기고,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12.18.)

아울러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손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북한인권현인그룹'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11.28.)하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4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추진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시야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북한인권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담은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12.26.)하였다. 동 계획이 추구하는 비전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이다. 정책 목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와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 견인'으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역량 제고를 촉진하여 변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 개선 촉구와 원칙에 입각한 관여를 병행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 개선에 호응해 나오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 아래 3대 추진방향과 8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동 계획에 입각하여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북한인권 정책 추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체계

비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
목표	•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 •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 견인
추진방향	• 북한인권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확산 • 자유권 및 사회권의 통합적 증진 추구 •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상호보완적 협력체계 구축
추진과제	• 북한인권 실태 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강화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실질적 개선 •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회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어 온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국회에 이사 추천을 공식 요청(8.30.)하였고, 재단 출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및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 민간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3.10.)하였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총 5회의 전체회의를 개최(3.10, 4.13, 6.30, 9.22, 11.21.)하여, 『북한인권보고서』 홍보방안 및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국립북한인권센터」,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들은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언론 인터뷰와 세미나에도 참여하였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정책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4.10, 8.25.)하였다. 4월에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계기 북한인권 홍보방안을 논의하였고, 8월에는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는 「20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논의하였다. 「20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은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정책 추진 결과를 포함하였으며, 국회에 보고(9.7.)되었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출범(3.10.)


2023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8.25.)

5 북한인권기록센터 활성화

(1) 개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설립되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법령에 의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조사 원칙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는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문답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된 기록 원본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고 있다.

북한인권 조사 방법과 활용

전반적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구체적 인권침해 기록을 위한 문답서 작성	북한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보존

북한인권 조사항목은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등 인권실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항목 중 '자유권'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사회권'은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등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북한 내 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의 인권과 관련된 실태도 조사하고 있다.

(2) 북한인권 조사·기록 및 홍보 강화

정부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3,553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였고, 2023년에는 하나원에 입소한 141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여성 107명(76%), 남성 34명(24%)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신 지역별로는 평양시(14%), 함경북도(34%), 양강도(22%) 등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은 총 140건으로, 기록 원본은 향후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무부로 이관하였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 내 식량권, 강제노동 실태 등 사회권 분야 실태 관련 심층 연구용역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유튜브, 리플릿, 통일문화행사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외신 기자단 간담회(4.10.), 영문판 발간기념 전문가 좌담회



북한인권 정책 및 실태조사 브리핑(10.19.)



구동독 및 북한 정치범수용소 인권실태 설명회(12.19.)

(7.11.), 주한 외교단·국제기구·국제시민단체 등 초청 설명회를 2차례(10.19, 12.19.) 개최하는 등 정확한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널리 알리고 협력을 강화하였다.

제2절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1 이산가족 현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이하 「남북이산가족찾기」, reunion.unikorea.go.kr)에 등록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3만 3,984명이다. 이 중 9만 4,391명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3만 9,593명이다.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현황

①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합계
인원	11,657	14,233	7,449	3,854	2,400	**39,593**
비율	29.4	36.0	18.8	9.7	6.1	**100**

② 출신지역별 (단위: 명, %)

구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기타	합계
인원	8,096	4,166	2,374	3,614	1,179	1,240	594	18,330	**39,593**
비율	20.5	10.5	6.0	9.1	3.0	3.1	1.5	46.3	**100**

③ 성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24,215	15,378	**39,593**
비율	61.2	38.8	**100**

④ 거주지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인원	10,082	1,689	950	3,215	380	839	325	11,965	2,396	1,337
비율	25.5	4.3	2.4	8.1	1.0	2.1	0.8	30.2	6.1	3.4
구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해외**	**합계**	
인원	1,246	682	591	1,208	981	414	165	1,128	**39,593**	
비율	3.1	1.7	1.5	3.1	2.5	1.0	0.4	2.8	**100**	

2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

(1)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정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2년 9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안에 이어, 2023년 9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사 등 계기 시마다 북한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월에는 향후 3년간의 이산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이산가족 2~3세대 참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 기록·기념사업,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구체화하였고, 2021년에 실시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정책 수요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외이산가족들이 다수 거주하는 북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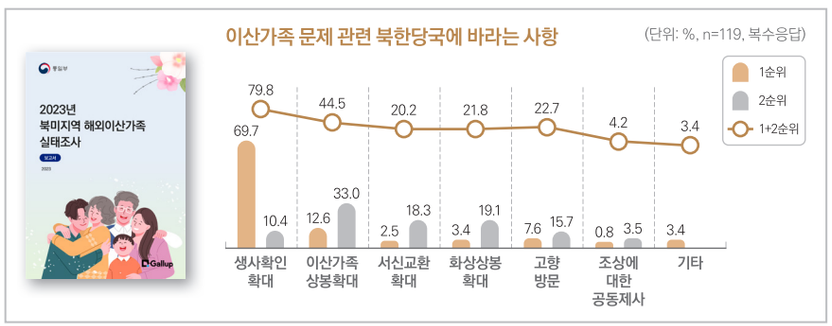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체계

비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목표	이산가족의 전면적 교류 / 이산가족 정책 추진 역량·동력 강화
전략	• 고령화 상황 감안,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 • 이산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 수립·시행 • 이산가족 정책 제도화 수준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과제	①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 ②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③ 이산가족 교류 기반 확대 ④ 이산가족 위로 및 공감대 확산

(미국, 캐나다)의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825명을 대상으로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 방문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소재가 확인된 147명의 이산가족에 대해 필수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각종 교류 시 활용될 이산가족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와 심층

북미지역 이산가족 실태조사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산가족 교류실태와 정책 인식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정부는 이산가족 사후에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하여 세 가지 검사(상염색체, Y염색체, 미토콘드리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112명의 유전자를 검사하였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검사 인원은 총 2만 7,794명이며, 유전자 검사 결과는 2015년 구축한 「이산가족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2017년에는 그동안 민간 검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유전자 검사 잔여 대상물(혈액, 타액, 모발 등)을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이관함으로써 유전자 검체 보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관사업」 착수보고회(7.26.)

정부는 2005년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영상편지 4,013편을 제작하였고, 2008년에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각각 2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여 시범 교환하였다. 이후,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환에 대비하고자 2012년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상편지 제작을 재개하였다. 2023년에 1,002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였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제작 편수는 2만 6,080편이다. 이중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영상편지는 「남북이산가족찾기」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일본·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청취 권역으로 하는 KBS라디오 한민족방송과 협업하여 2022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이산가족 영상편지의 음성을 송출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및 관계 공무원이 방송 등에 직접 출연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였다.



이산가족 영상편지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영상편지 송출

정부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와 함께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생사확인 시 300만 원, 상봉 시 600만 원, 서신 교환 등 교류 지속 시 80만 원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북 접경 지역의 통제가 강화되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2023년에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건수	96	231	314	279	287	466	303	289	201	151	103	54	23
지원금	67	163	279	349	440	692	364	252	235	172	114	76	22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22**	**'23**	**합계**	
건수	12	16	28	12	10	10	14	12	7	0	1	**2,919**	
지원금	12	16	51	23	16	18	34	21	15	0	3	**3,434**	

민간 차원에서의 생사확인 1건이 성사되어 30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산가족들과 일반 국민들이 이산가족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북이산가족찾기」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 사연을 담은 웹툰 및 영상물과 북녘 고향 사진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이산가족 위로사업 추진 및 국민 공감대 확산

정부는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3월에는 민간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음력 8월 13일, 추석 전전(前前)날)하는 「이산가족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픔과 그리움, 함께 나누고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 관계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9.27.)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동 행사의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였다. 또한 같은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1회 이산가족의 날」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이산가족 등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위로하고 기억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일부장관, 「이산가족의 날」 기념사(9.27.)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퍼포먼스(9.27.)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 이산가족을 초청·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령 이산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의 위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별·세대별 찾아가는 위로행사를 진행하였다. 2023년 추석과 연말에는 통일부장관·차관이 고령·취약계층 이산가족의 가정을 위로 방문하였고, 설 계기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경모행사에는 통일부차관이 참석하여 이산가족들을 위로하였다. 또한 4월부터 11월까지 대구·충남·인천·전북 지역의 이산가족들과 전후 납북자 가족, 2~4세대 이산가족을 초청하여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을 설명하고 이산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충남지역 초청행사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열쇠전망대 1박 2일 체험·견학 프로그램으로, 2~4세대 이산가족 초청행사는 오두산통일전망대, 남북산림협력센터 견학으로 진행하였다.


통일부장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위로 방문(9.26.)


통일부차관, 연말 이산가족 위로 방문(12.22.)


충남지역 초청위로행사(5.15.~16.)


2~4세대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9.22.)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 단체인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이산가족정책 세미나, 홍보 콘텐츠 제작, 불우이산가족 지원, 이산가족 소식지 발간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3 남북 간 인도적 사안 처리절차 개선

통일부는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례(2019.11.7.)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귀순여부를 직접 확인해오고 있으며 2023년에 해상으로 탈북한 북한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귀순의사 표명 확인을 2회(5.10, 10.24.) 진행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이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거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근거를 명시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2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개정안은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2020.9.22.) 관련 사건 초기 상황 전파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국회 등에 통일부의 최초 인지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대응했다고 지적한 2023년 12월 1일 감사원 감사결과를 유념하여 향후 남북관계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상황 전파 및 협의, 대북통지 등 구조 및 송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사체 2구를 북한에 인계하기 위해 남북 통신선 단절상황에서 통일부 대변인 언론브리핑(6.9, 9.21.)을 통해 사체발견 상황과 인계 의사를 밝히고 북한의 회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제 처리하였다.

제3절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1 현황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으로, 6·25전쟁 중 납북자(이하 전시납북자)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이하 전후납북자)로 구분된다. 2010년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부차원에서 작성된 납북자 명부 등을 토대로 전시납북자 전체 규모를 10만 명 내외로 추정하였다. 위원회에서 전시납북자로 최종 결정한 인원은 4,777명이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납북피해신고 홍보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신고 접수된 납북피해 사건은 5,505건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전후납북자 관련하여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인원은 총 3,835명이다. 그중 3,319명이 귀환하였다. 귀환자 중 3,310명은 북한이

전후납북자 현황(추정)

(단위: 명)

구분		어선원	대한항공(KAL)납치	군·경	기타	합계
피랍자		3,729	50	30	26	**3,835**
귀환자	송환	3,263	39	-	8	**3,310**
	탈북·귀환	9	-	-	-	**9**
미귀환자		457	11	30	18	**516**

송환하였고, 9명은 200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귀환하였다. 정부는 2023년 12월 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전후납북자를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귀환 국군포로는 6·25전쟁 중 생포되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군인을 일컫는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교환하였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천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여 절대 다수가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4년 조창호 중위의 탈북 귀환 이후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하여 귀환하였다.

북한은 2013년 김정욱 씨에 이어 2014년에는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억류하고 이들의 재판 과정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하였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북한이탈주민 3명을 포함한 6명이다.

2 문제 해결 노력

정부는 남북대화 및 국제협력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이들의 명예 회복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전시납북자 명예 회복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 내에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을 개관하였다. 기념관은 전시납북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었던 납북자들을 기억하며 납북 사건의 실상 및 인권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1종 전문 박물관인 기념관은 전시납북자 관련 유물 5천 5백여 점을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유물들은 주로 납북자 가족들로부터 기증받은 납북자 개개인의 사진·저작물·생활용품과 구입·복제 등을 통해 수집한 전시납북 관련 문서·신문·서적·사진·영상이다.

2023년에는 유물 379점을 새로 구입하는 한편, 「인권, 잊혀지지 않을 권리」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편하고, 기념관 소장 납북자 명부 12종을 종합한 연구자료집 『명부, 6·25전쟁납북자이름책』을 발간하는 등 납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6·25전쟁 및 납북 사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대면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족 기억상자」, 정전 70주년 계기 「잠시 멈춤, 함께 시작」 프로그램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카드로 만드는 납북자 가족 이야기」를 운영하였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파주도시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주한미군 등 외국인의 기념관 방문 확대를 통해, 납북 문제 관련 대외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약 14% 증가한 3만 6,684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은 19만 6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별전시 「인권, 잊혀지지 않을 권리」 포스터



유물 구입 「해방기념시집」


교육 프로그램 「잠시 멈춤, 함께 시작」


연구자료집 『명부, 6·25전쟁납북자이름책』

정부는 전시납북자의 명예 회복과 권익 신장을 위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으며 매년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동 협의회에서 개최한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6.28.)에 통일부장관이 참석하는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전시납북자 가족을 초청하여 기념관 개관 6주년 기념 「특별전시 개막식 행사」를 개최(11.29.)하는 등 납북자들을 기억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6.28.)



기념관 개관 6주년 기념 특별전시 개막식(11.29.)

2023년은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의 국가책무로 인식하고 남북관계를 넘어선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동 문제의 해결 의지를 적극 표명한 한 해였다.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8.18.)하였다. 정부의 납북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를 반영한 이 선언은 납북자 등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을 공동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함의가 내포된 것이었다.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성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통일부 내 납북자 관련 전담기구인 '납북자대책팀'을 설치(9.8.)하였다. 또한,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을 계기로 성명을 발표(10.8.)하였고, 북한에 강제 억류된 6명의 가족 중 납북피해사실 인정 및 보상을 신청한 5가족을 납북피해자로 공식 인정하면서 약 8,900만 원의 피해위로금도 지급(11월)하였다. 특히, 2012년 처음 개최된 이후 11년간 개최되지 않았던 「납북자대책위원회」를 재개(11.14.)하여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고 결정하는 동시에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동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동안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피해자 가족 위로를 위한 소통과 지원사업도 지속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김건희 여사의 납북자·억류자 가족 면담(4.12.), 통일부장관의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단체장 및 가족 면담(8.3.),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 유가족 면담(9.11.) 등이 있다.

특히, 이번 통일부장관과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 유가족 면담은 역대 정부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아울러 12월에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귀환납북자를 초청하여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통일부장관,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단체장 및 가족 면담(8.3.)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11.14.)

정부는 전후납북피해자의 권익 향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도 지속하였다.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2023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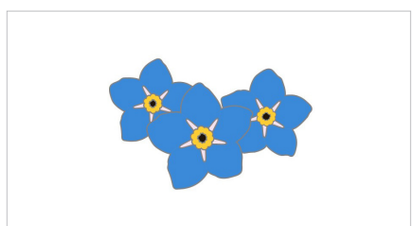
말까지 피해위로금 등 약 153억 원을 납북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법정단체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매년 1억 8,5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고령 납북피해자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단체장 면담, 납북자 가족 위로 방문 및 간담회도 연중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무주택 납북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귀환납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와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납북자·억류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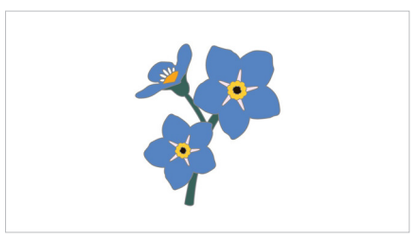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신청	지급 결정	지급액
피해위로금	443	431	13,300
정착금·주거지원금	9	9	1,773
보상금	14	3	261
합계	**466**	**443**	**15,334**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피해자 위로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물망초 상징사업을 추진하였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의 '잊히지 않을 권리'를 기억하고 송환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물망초 상징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을 최종 확정하고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망초 상징은 2024년 연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안(기본형)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안(줄기형)

제4절 대북 인도적 지원 기반 개선

1 인도적 지원 제도 개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을 4월, 11월 2차례 개정하였다.

4월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인도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정부는 민간차원 대북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그간 대북지원 환경이 달라져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 개정을 통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대북지원 사업자가 아닌 민간단체나 개인, 기관 등도 인도지원 물품 반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북한의 국경이 봉쇄되어 인도적 지원의 모니터링이 어렵게 되면서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도적 지원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사업내용의 투명한 공개,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 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11월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을 개정하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현장 접근과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는 여건하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시 지원 내역 등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 등과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앙-지방-기관 간 보다 조율된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가 재정의 중복 지원 방지 및 국민 세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과 기준을 조정하였다. 지자체의 경우는 자체적인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민간단체 간 형평성과 민간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기존 연 3회 70% 범위 내 지원에서 연 1회 50% 범위 내로 조정하였다.

2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

정부는 1996년 이후 2023년까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총 2억 6,677만 달러를 공여하였으며,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정부는 2020년에 유엔세계식량계획(이하 WFP) 및 유엔아동기금(이하 UNICEF)과 각각 5개년 업무협약(MOU)을 연장 체결하여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코로나19 상황 개선 이후에도 북한에 상주하던 WFP, 유엔식량농업기구(이하 FAO), 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국제기구는 복귀하지 못한 채 중북 국경 개방 동향을 지켜보며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엔 북한팀(UN DPRK Country Team)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복귀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방향 등을 협의하였다.

정부는 WFP 사무총장 및 UNICEF 총재와 면담(1.17.), WFP 사무총장과 서신 교환(10.6.) 등을 통해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입장을 같이하였다. 그 외에도 WFP, UNICEF,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백신연구소(IVI), 유엔 북한상주조정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한스자이델재단 등 국제기구 및 국제비정부기구(이하 INGO) 관계자 면담(25회) 등을 통해 다층적으로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전 지구적 기후환경 변화가 북한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하에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기후환경분야 국제기구 관계자와의 면담도 추진하였다. 또한,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11.30.~12.12,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참석하여, 기후환경 이슈와 관련된 국제사회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기구·INGO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3 민관협업을 통한 정책공감대 형성

(1) 전문가·민간단체와의 소통

정부는 전문가·민간단체 등과 소통을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상호인식을 공유하고, 공감대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다. 3차례 인도분과 정책자문회의를 개최(2.22, 6.2, 9.25.)하여 대북 인도지원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정책자문위원들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지원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북한 국경개방 확대 등에 대비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분야별 효과적인 사업추진 모델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를 개최(3.30, 4.27, 11.2.)하여 정부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간단체의 의견수렴 및 인도지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개별 민간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였다. 북한주민 접촉, 물자 반출, 유엔 대북제재 면제, 기타 대북지원 사업 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지속하였다.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도협력 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북지원정보시스템」(hairo.unikorea.go.kr)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을 통해 인도협력 관련 사업 절차, 국내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과 관련 통계, 국내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대북 인도협력 관련 보고서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청년대상 공감대 형성

정부는 통일미래 주역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후·환경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박 2일간의 남북 그린데탕트 청년캠프 개최(7.13.~14, 강원도 양구군)를 통해 '통일미래 준비 및 남북협력'과 '기후·환경 이슈'를 연계하여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동 캠프에 참석한 20여 명의 청년들은 두타연·DMZ자생식물원·평화의댐 견학, DMZ 및 접경지역 식물생태계 관련 강연 청취,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방안 관련 토론회 등에 참여하였다.

또한 기후·환경 변화가 북한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기후·환경 변화 대응 청년토크콘서트(11.7.)도 개최하였다. 동 토크콘서트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150여 명이 참석하여 기후·환경 변화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융합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북 그린데탕트 청년캠프(7.13.~14.)



기후·환경 변화 대응 청년토크콘서트(11.7.)

4 분야별 인도협력 방안 모색

정부는 향후 여건 조성 시에 대비하여 분야별 인도협력 의제 및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미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건의료, 물관리, 농업, 산림, 생태계 보전, 재난·재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의제를 발굴하여 대북인도협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산림분야에서는 남북산림협력 심포지엄(6.21.)을 개최하여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남북산림협력 필요성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였고 국제기구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북한과의 산림협력 사례와 남북협력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2022년에 추진했던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로드맵」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제기구별 전략적 협력방안'과 '재난·재해 관련 남북합의의 재평가 및 향후 협력과제 제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분야별 협력방안을 구체화 하였다.

통일부는 보건의료·농업·산림·수자원·기후환경 등 분야별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과 상시 협의를 통해 각 분야별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개별 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산림청,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FAO, 한스자이델재단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이 참가한 기후환경 관련

유관기관 워크숍(5.11.~12.)을 개최하였다. 북한 농업·환경 실태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북한 개발협력 사례를 청취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각 분야 관계자 상호 간 이해를 도모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 수해방지 시설(7.5, 군남댐)을 방문하여 장마철 대비 시설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에 앞서 6월 30일에는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에 댐 방류 시 사전통보를 촉구하는 등 공유하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대비 대응 조치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그 외에 남북 식수위생 협력 관련 소규모 수도시설(3.10, 인제), 남북산림협력센터(5.11, 파주) 등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공동대응 필요성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향후 대북지원이 중앙-지방 간 조율된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한 현황을 파악(7.30.~8.18.)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9.1.)하여 지자체가 자체 협력기금으로 대북 인도지원 추진 시 통일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통일부는 지자체에 반출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 관련 내용은 대북 인도적 지원 제도 정비(11.8.)를 통해 제도화하였다.



남북산림협력 심포지엄(6.21.)



기후환경 관련 유관기관 워크숍(5.11.~12.)

0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제1절 |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제2절 | 북한이탈주민 교육 및 지원체계 확충

제3절 | 북한이탈주민 고용과 삶의 질 개선

제4절 | 위기·취약 북한이탈주민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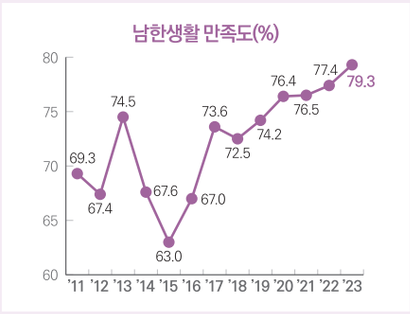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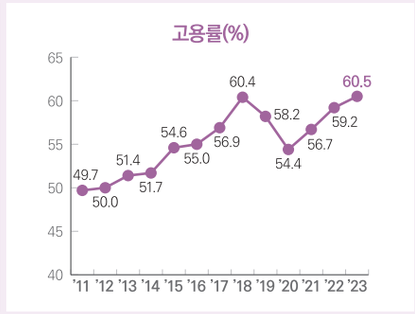
제3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에 '먼저 온 통일'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더욱 잘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가올 통일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정책 수혜자에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이자 기여자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왔다. 이를 위해, 정책 환경 및 북한이탈주민의 수요 변화 등에 맞춰서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강화하였고, 위기·취약계층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서 79.3%가 남한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이는 2011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경제활동지표도 상당 부분 개선되어 전국 평균과의 격차를 점점 좁혀가고 있는데, 특히 고용률은 60.5%로 이 또한 실태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 주요 지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결과

(단위: %, 만 원, 개월)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남한생활 만족도	72.5	74.2	76.4	76.5	77.4	79.3
경제활동참가율	64.8	62.1	60.1	61.3	63.0	63.4
고용률	60.4	58.2	54.4	56.7	59.2	60.5
실업률	6.9	6.3	9.4	7.5	6.1	4.5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189.9	204.7	216.1	227.7	238.4	245.7
임금근로자 근속기간	26.9	27.7	31.6	31.3	35.3	36.3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018~2023)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0년 이후 동결(1인 세대 기준 800만 원)되었던 정착기본금을 90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2024년 수령 정착기본금도 인상하여 1인 세대 기준 정착기본금 1천만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확대 및 트라우마 전문 상담·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피폭실태를 확인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길주군 인근지역 출신 8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피폭 검사와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강화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적 자립·자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개인별 관심과 적성에 맞는 구직준비과정인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9년 만에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하였다. 특히, 2023년부터는 하나원에서 수료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교육의 과정 수를 대폭 확대 운영하여 교육생들에게 직업선택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취업·창업·영농 관련 교육과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접촉하여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게 특화된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위기·취약계층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지원하고 있다. 위기·취약가구 발견을 위한 조사방식을 개선, 위기의심가구를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직접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여 더욱 밀착된 지원을 하였다. 특히 위기사례 발굴, 예방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12월에 시범 운영하였으며 2024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과정

보호신청 및 국내이송	• 보호신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국내 입국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	• 입국 후 국정원이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 실시 • 조사종료 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으로 이송
보호결정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 (세대단위 결정)
'하나원'에서 정착준비	• 사회적응교육(12주, 400시간) – 우리 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양성평등·법정교육, 정서안정 및 건강검진 등 • 초기정착지원: 가족관계 창설, 주거 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거주지 전입
거주지 보호 (5년)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 • 일자리 지원: 취업·창업·영농 관련 교육훈련, 취업 알선,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민간참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전국 25곳) 지정·운영 • 정착도우미 제도: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87명 –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제1절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2023년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196명이다. 2022년 67명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 개선으로 중국 내 및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외교관이나 주재원, 유학생 등 이른바 '엘리트층'의 탈북이 1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이며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대북 제재 강화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북한 당국이 재외공관들을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북한체제로 복귀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 탈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젊은 층인 2030세대 이른바 'MZ세대'의 탈북이 다시 늘어났다는 점으로, 2023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50% 이상이 'MZ세대'이다. 북한 체제에 반감이 크고 외부 영상물 등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 시청으로 외부 세계를 접할 기회가 많아, 이러한 사실들이 탈북 동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말까지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총 3만 4,078명이며, 이 중 여성이 2만 4,536명으로 전체의 72%이다. 국내에 들어온 때의 연령을 기준으로 30대가 29%(9,771명)로 가장 높고 20~30대가 전체의 57%(19,397명)이다. 북한에 있을 때 직업은 무직·부양자가 45%(15,200명)이고 노동자가 40%(13,472명)로 2개의 직업군이 전체의 84%(28,672명)이다. 북한에 있을 때 학력(재학·중퇴자 포함)은 중·고등학교가 69%(23,558명)로 가장 높고, 전문대 11%(3,565명), 대학 이상이 7%(2,363명)이다.

출신지역은 함경북도 59%(19,902명), 양강도 18%(6,046명), 함경남도 9%(2,892명) 순으로 함경도와 양강도 출신이 많다.

최근 10년간(2014~2023)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명)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남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35	32
여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32	164
합계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제2절 북한이탈주민 교육 및 지원체계 확충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개편·운영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개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 입소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코로나19 상황 개선 이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도 2023년에 144명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도 하나원 수료 현황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수료	7	4	13	6	1	3	17	15	16	21	34	7	**144**
남	2	3	9	4	1	2	3	3	3	6	11	2	**49**
여	5	1	4	2	0	1	14	12	13	15	23	5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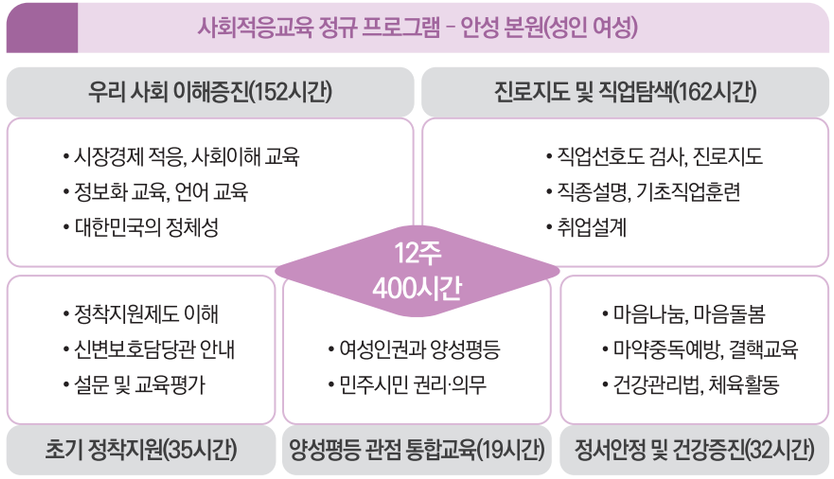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하나원 교육생과 수료 북한이탈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3년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자유민주주의 및 대한민국 역사 등 국가관 확립, 현장 체험학습 강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강화 등을 2023년 사회적응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개편된 기본계획에 따라 5개 영역, 12주 400시간으로 기초교육생 사회적응교육을 편성·운영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의 5개 영역은 ①우리 사회 이해증진 교육 ②양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③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교육 ④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교육 ⑤초기 정착지원 안내 교육이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본원, 강원도 화천에 분소를 두고 있다. 하나원은 나이에 따라 영아반, 유치반, 초등반, 청소년반, 성인반, 경로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성인반은 남녀를 분리하여 여성 성인반은 안성 본원에서, 남성 성인반은 화천 분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여성 성인반과 남성 성인반은 기본교육의 5개 영역은 동일하나, 직업훈련 과목, 양성평등 관점 통합교육의 세부과목 등에서는 교육내용에 남녀 차이를 반영하였다.

사회적응교육 정규 프로그램 – 안성 본원(성인 여성)



※ 자율참여형 보충 프로그램(372시간) : 언어, 운전, 컴퓨터, 공예교실, 부모교육 등

(2) 우리 사회 이해증진 교육 개편·강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사회 이해증진 교육을 강화하였다. 우선 '도시문화체험·봉사활동·가정문화체험' 등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현장체험' 과목을 재개하였고 자유·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본소양을 높이고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이해' 등 관련 과목을 신설·보완하였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여성인권과 양성평등', '성폭력·성매매 등 예방교육' 등 성인지·인권 관련 교육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기존 정보화 교육 중 스마트폰 기반 교육을 확대하여, 수료 후 실생활에서 모바일을 활용하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중점과 강의기법을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질적 교육 수요가 높은 언어교육을 '언어적응의 기본, 어휘·표현학습', '남한 사람과 소통하기, 표준화법 연습', '사회진출의 장애 극복, 발음·억양교정'으로 구분하고 각 주제별로 기초·집중과정을 운영하였다. 특히 지역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북한 사투리 교정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위해 「우리말상담실」과 「우리말어학실」을 이용하여 1:1 언어코칭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원 수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3 찾아가는 우리말교실」을 기획하고 북한이탈주민 성인을 대상으로 '2주 완성, 사투리 클리닉'(8개 반, 4월~11월, 비대면)을 운영하였다.

(3) 진로지도 및 심화 직업훈련과정 운영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인 취업능력을 높여 보다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하나원 내에 직업교육관을 개관하여 기초교육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교육관은 빠르게 변하는 고용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자격 취득과 기술 습득을 목표로 운영·지원하고 있다.

기초교육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적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직업교육」, 「진로상담」, 「직종설명」, 「기초직업훈련」(자격증반, 직종체험반), 「취업설계」(생애설계) 과정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합리적인 진로 의사 결정과 직장 적응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원내에 CBT(컴퓨터국가시험장)을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나원 단계부터 연계·시행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진입 초기부터 올바른 직업선택을 통한 취업연계까지 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 안정적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화 직업훈련과정은 2023년부터 기존 5개 과정을 15개 과정으로 크게 늘려 운영하고 있다. 동 과정은



한식조리 과정(2.27.~5.12.)



ITQ(한글) 과정(4.10.~5.13.)



도배기능사 과정(10.11.~11.21.)



애견미용사 과정(8.16.~12.15.)

실무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 직업교육이며, 2023년에는 총 216명이 참여하여 195명이 수료하였으며, 이 중 93%(실무과정 제외)가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아울러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북한이탈주민 취업관련 실태조사 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전문가 자문회의와 강사워크숍 등을 통해 수료생 참여율 제고 방안,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한 교육과정, 자격취득자 취업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심화 직업훈련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도 심화 직업훈련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교육과정	운영기간	참여인원	수료인원	자격 취득인원
바리스타	2.6.~2.24.	17	16	16
ITQ(엑셀)	2.6.~3.11.	13	13	13
헤어	2.13.~5.10.	14	12	11
한식조리	2.27.~5.12.	8	7	7
바리스타	3.6.~3.24.	11	11	11
ITQ(한글)	4.10.~5.13.	7	6	6
요양보호사	4.24.~6.23.	13	13	13
제빵	4.24.~6.30.	7	6	6
피부미용	5.1.~6.30.	8	8	8
대형면허	5.8.~5.15.	9	8	8
네일아트(필기)	6.1.~6.30.	8	8	8
네일아트(실기)	7.3.~8.4.	11	11	10
대형면허	7.3.~7.8.	9	9	6
헤어(실무)	8.7.~8.16.	5	5	-
요양보호사	8.16.~10.13.	10	9	8
애견미용사	8.16.~12.15.	10	5	5
떡제조(필기)	8.23.~9.19.	6	5	4
바리스타	9.4.~9.22.	14	11	11
대형면허	9.4.~9.9.	7	7	7
ITQ(엑셀)	9.11.~10.13.	8	7	7
도배기능사	10.11.~11.21.	6	5	5
바리스타	10.30.~11.17.	7	6	6
건축목공	11.27.~12.5.	8	7	1
합계		**216**	**195**	**177**

(4) 하나둘학교 운영

하나원 내에 있는 하나둘학교에서는 24세 이하의 탈북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치·초등반과 청소년반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반은 교육부 파견교사가 기본 커리큘럼에 근거하여 탈북학생 기초학력 증진 및 정서안정을 지원한다. 기본 커리큘럼(12주, 406시간)은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76시간), 우리 사회 이해(74시간), 기초학력 증진 및 학력결손 보충(231시간), 진학·진로 탐색 및 설계(25시간)로 구성된다. 코로나19 이후 교육생이 감소함에 따라 2023년에는 파견교사가 감축(9명→3명)되어 일부 비필수 과목(사회, 과학, 역사)은 인근에 위치한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주 1회 수업을 진행하였다. 유치·초등반은 예전과 동일하게 삼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후 하나둘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하나둘학교 교육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청소년	90	68	86	116	108	105	52	3	7	13
초 등	87	49	46	43	49	57	19	1	-	1
유 치	28	28	25	36	20	23	7	-	1	5
합 계	**205**	**145**	**157**	**195**	**177**	**185**	**78**	**4**	**8**	**19**

또한 하나둘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제동행 홈커밍 캠프'(7.21.~22.) 및 '힐링 프로그램'(11.3.~5.) 등을 운영하였다. 특히 2023년 하나둘학교 졸업생 통합수학여행을 통해 선생님은 물론 선후배 간에 진로·진학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도 하나원 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교사를 '하나교사'로 위촉하여 하나둘학교 졸업생과 결연을 통해 생활상담, 학습·진로지도 등을 진행하였다.



사제동행 홈커밍 캠프(7.21.~22.)



2023년 졸업생 힐링프로그램(11.3.~5.)

아울러 탈북학생 교육지원 및 하나둘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였다. 2023년 이후 하나원 교육생 숫자가 증가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감축된 교육부 파견 교사의 수를 다시 늘리기 위해 교육부·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탈북학생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탈북학생 교육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여 탈북학생의 학교적응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한편 영유아 교육을 위해 2020년 12월에 발간했던 「초보엄마 양육지원 안내서」 리플릿을 자녀 연령에 맞춰 양육지원과 교육지원 내용으로 재정리하는 등 지원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전국 25개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에 배부하였다.

2 건강증진 및 정서안정

(1) 하나의원 운영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하나원 내 하나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 의사, 간호사 등 24명의 의료전문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초기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안성 본원은 가정의학과·치과·한방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 6개 진료과목을, 화천 분소는 내과·치과·한방과·정신과 등 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입소 교육생 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회 정착초기 수료생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전국 하나센터 및 협력병원과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등 14개 의료 취약시설에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및 환자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다. 특히 부산과 강원도 지역 탈북청소년의 건강을 돌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건강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하나원-대한결핵협회



경기도 구리지역 북한이탈주민 대상
찾아가는 건강검진(3.17.)



부산지역 탈북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건강검진(3.31.)

간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자의 건강자료 데이터를 활용한 추이 분석을 통해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2) 마음건강센터 운영

하나원 마음건강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신과 진료 및 개인·집단상담, 심리·정서안정 교육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하나원에 입소하는 모든 교육생에게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검사(MHI-NKR)와 개별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시작되며, 이를 통해 하나원 입소 초기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생들이 하나원 생활 중 마음의 고충을 해결하면서 하나원의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심리치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서안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생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스스로 마음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 마음관리법을 소개하고 이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하나원 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또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25개의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와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과도 협력하고 있다.



마음건강센터 업무매뉴얼·지침서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6.1.)



의사소통프로그램 강사양성과정(10.16.)

하나원 입소 교육생에 대한 심리·정서안정 프로그램 외에도 2023년 마음건강센터는 5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마음건강센터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매뉴얼과 지침을 수립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소통능력 증진 등을 돕는 「의사소통프로그램 강사양성과정」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예방교육을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협업을 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2.0」 강사 양성교육(11.7.) 및 보수교육(6.29.)을 실시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77명의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 직원 등이 동 교육을 수료하였다.

마음건강센터는 대한명상의학회와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마음건강회복을 돕는 「마음명상프로그램」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1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였다.

하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하나센터 방문을 통해 상담자의 상담수행을 지도·교육하는 '수퍼비전'을 실시하여 하나센터 전문상담자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다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자살예방강사교육(11.7.)



정신건강전문의 '수퍼비전' (부산하나센터, 4.25.)

3 화천 분소(제2하나원) 운영

(1) 남성 성인반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하나원 화천 분소에서는 성인 남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초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시간 등 기본적인 틀은 안성 본원과 동일하나, 「폭력예방 프로그램」과 자동차 운전 및 전기·도배·타일·조적·미장·중장비 실습 교육 등 성인 남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라 그간 실시하지 못한 현장체험 학습을 재개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춘천 위주로 주 1회를 원칙으로 실시하였다. 대중교통·금융기관·공동주택 체험 등 수료 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함께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현충원·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하였으며, 향후 지역축제 참가, 영화·계절 스포츠 관람 등 현장체험 학습을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교육을 위해 2020년 원내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이후 1차 기능시험 합격률이 도입 전 63.7%에서 2021년 97.1%, 2022년 89.5%, 2023년 94.3%로 대폭 상승하였다. 2022년부터는 도로주행 시험까지 지원하여 2022년 78.9%, 2023년 85.7%의 교육생이 수료 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2023년에 전기·도배·타일·미장·조적 등 직종체험장을 화천 분소에 새롭게 조성하여 원내 실습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굴착기·지게차 등 중장비는 외부 전문 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참가자 전원이 수료 즉시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득하였다.

한편 하나원 화천 분소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힐링프로그램은 한부모 가정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정서안정과 가족 관계 회복 등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서비스로서 참여자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2023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직장인·청소년 등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참여지역도 충청·부산지역 등으로 확대하여 10회 진행하였고, 총 237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여하였다.

하나원 화천 분소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상담·치유,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건강한 자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마음+프로그램」을 10월에 개발하여 2차례 시범운영하였다. 1차는 서울지역 북한이탈주민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차는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상담센터 마음숲」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 15가족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24년에는 남북통합문화센터·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하나마음+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화천 분소를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 허브」로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1차 집단상담 프로그램(11.29.~12.1.)



2차 가족상담 프로그램(12.6.~8.)

(2) 정착지원 관계자 직무교육

하나원 화천 분소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신변·취업·거주지 보호담당관, 탈북학생 지도교사, 재외공관 북한이탈주민 담당관,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협의회 등 5개의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교육생 수강 편의와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과정 운영 횟수를 7회로 늘렸으며, 140명이 참여하였다.

2023년도 제2하나원 직무교육 운영 현황

과정명	기간		교육형태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1기	3.14.~17.	집합교육(3박 4일)
	2기	6.21.~23.	집합교육(2박 3일)
	3기	9.13.~15.	
탈북학생 지도교사	1기	8.8.~10.	집합교육(2박 3일)
재외공관 북한이탈주민 담당관	1기	12.4.	집합교육(1일)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협의회	1기	5.31.~6.2.	온라인 2일, 현장견학 1일
제2하나원 기초교육 강사	1기	12.13.	집합교육(1일)

4 북한이탈주민 이해제고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1) 하나원 방문 및 초청교육 프로그램

정부는 국내외 유관기관 및 일반 국민의 북한이탈주민과 하나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 하나원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나원 방문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진행하였으나, 2023년 위기경보 수준 하향 조정 이후 외부방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23년 하나원 본원과 분소를 합하여 총 84개 기관에서 1,836명이 하나원을 방문하였다. 해외에서는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미국인권재단 대표단 등 5개 기관이, 국내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적응센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등 79개 기관이 하나원을 방문하였다.

정부는 2023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8차례에 걸쳐 307명에게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하나원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방문(6.14.)



외교부 재외공관 담당관 방문(9.5.)



민주평통 상임위원 방문(10.12.)



미국인권재단 방문(10.27.)

(2)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은 인도적 측면이나 통일준비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 없이 이해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도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토대로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제2회 하나로 단편영화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7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단편영화 공모를 진행하였고, 총 62편의 단편영화가 출품되었다. 영화감독,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등 심사위원의 예선·본선 심사를 거쳐 「서울가스나 금희」 등 총 4개의 작품을 시상하였으며 수상작은 통일부 인터넷

통일방송(이하 Uni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하였다.



대상: 「서울가스나 금희」



금상: 「터닝포인트 ing」



은상: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동상: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신 분」

5 「하나원 프레스데이」 행사 개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수준 하향 조정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포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나원 프레스데이」 행사(7.10.)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내·외신 출입기자단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교육생 언론 인터뷰, 하나원 시설 견학 등을 진행하였다. 통일부장관은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육생 언론 인터뷰(7.10.)



통일부장관, 기자단 간담회(7.10.)

6 북한이탈주민 친정집 나들이 행사 개최

정부는 수료한 교육생들의 정착 노력을 격려하고 친정집 같은 하나원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하나원 친정집 나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3년 「하나원 친정집 나들이」 행사(11.18.)에는 하나원 제1기부터 제310기까지 여성 수료자 250여 명을 초청하여 친교마당, 체험마당, 어울림마당, 공연마당 등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통일부차관, 최고령 참가자 격려(11.18.)



참가자 노래자랑(11.18.)

7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1) 가족관계 등록 및 주거 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세대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1.10.21. 시행)을 통해 형제·자매가 포함된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하나원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희망하는 거주지에 임대주택을 배정받아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후 배정받은 주택에 즉시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정착금 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기본금을 비롯한 각종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착금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한 후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착금은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 그리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가산금, 안정적 취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장려금 등으로 구분된다.

정착금 중 정착기본금은 세대를 단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하나원 수료 시점에 초기 지급금을 지급하고, 거주지 전입 3개월 후부터 3회로 분할하여 분기별로 잔여금을 지급한다. 2023년에는 1인 세대 기준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대원 수가 증가하면 지원금액도 증가한다. 주거지원금은 주택 임대에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후 입주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다. 1인 세대 기준 1,600만 원을 지급하며, 세대원 수가 증가하면 지원금액도 증가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방거주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거주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착기본금을 세대당 100만 원 인상하였고, 2024년에도 100만 원을 추가로 인상하여 1인 세대 기준 정착기본금 1천만 원 시대를 열었다.

가산금은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자녀 양육 등의 사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고령가산금과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가산금은 하나원에서, 그 밖의 가산금은 남북하나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에 동일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3년차까지 지급하고 있다.

취업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만 원)

구 분	동일업체 취업기간	금액	
		수도권	지방
취업 장려금	6개월	200	250
	1년차	500	600
	2년차	600	700
	3년차	700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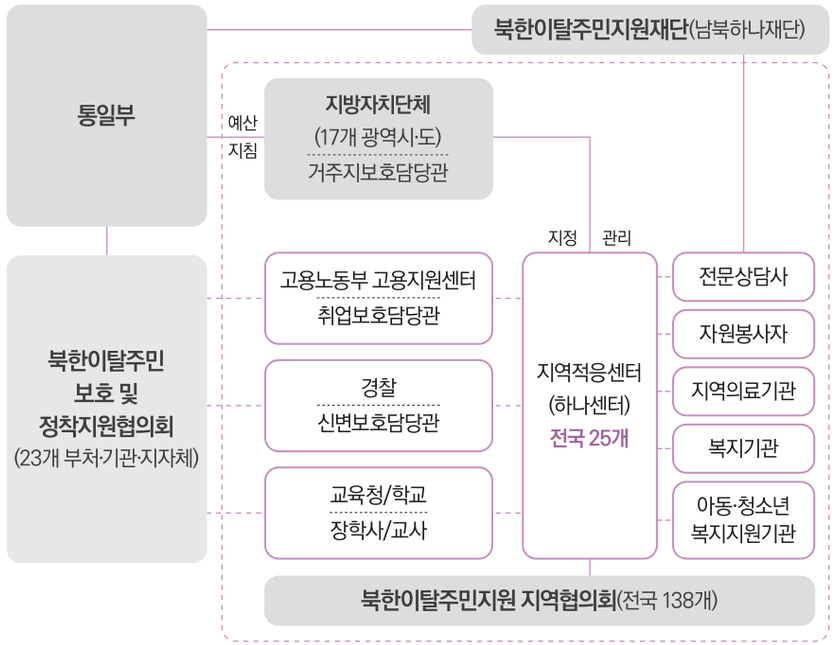
제3절 북한이탈주민 고용과 삶의 질 개선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 정착지원 제도를 수립·총괄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하나센터를 지정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심리 상담,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착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공무원, 보호담당관,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의회(전국 138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이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2 북한이탈주민 경제 활동 지원 강화

정부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당면 최우선 과제가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인식 아래, 맞춤형 구직준비과정인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고, 기업 및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창업 및 영농 정착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취·창업 등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행복통장을 운영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개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에 가장 필요한 취업문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이후 9년 만에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12.1.)하였다. '일잡고(JobGO), 내일로 함께!(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남북하나재단 등 유관기관 협조로 개최했으며, 141개 유관기관 및 기업체가 참여했고 1,2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박람회를 찾았다. 기업채용부스와 관심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체험관, 기업 면접 등을 도와주기 위한 취업지원관 등으로 운영되었으며, 대안학교 학생 등도 함께 참여하여 미래 일자리를 탐색하였다.



개막식



좌담회



취업 상담



하나원 직업교육 체험

(2) 개인별 맞춤형 구직지원체계 신설

정부는 개인별 관심과 특성에 맞는 구직과정을 맞춤형·단계별로 지원하는 취업 준비과정인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단계인 상담 및 진단 단계에서는 적성검사, 개인별 일자리 준비정도 진단, 심층상담 등을 진행하며 2단계인 일자리 준비 단계에서는 발음진단,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스피치교육, 입사지원서 및 면접 클리닉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3단계인 일자리 탐색 단계에서는 일자리 체험 및 실습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가고 마지막 4단계인 취업 성공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취업·창업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성공 패키지」 단계별 과정

1단계 상담 및 진단	2단계 일자리 준비	3단계 일자리 탐색	4단계 취업 성공
① 종합상담실, 취업상담사 심층상담 ② 일자리정보 제공	③ 언어·스피치교육 ④ 일자리 클리닉 ⑤ 멘토링 지원	⑥ 채용설명회, 코칭 ⑦ 일자리체험 지원	• 취업, 창업, 영농 등 각 사업과 연계

(3) 기초 및 심화 직업역량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개인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초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온·오프라인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취업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하나원 교육과정과 중복되는 직업훈련 자격취득과정을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 선호도 및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회계실무자양성, 버스기사 및 전기기능사 양성 등 7개의 취업연계 직업훈련과정을 새롭게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재북·재남 경력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의 전문직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과 함께 국내 대학

(원광대, 연세대 등)과 협업하여 의사·치과의사 등 국가시험 대비 실기실습도 지원하였다.

이밖에 기업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탐색 및 직장 경험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연수생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연수비를 지원하는 단기연수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2023년에는 142개 기업에 총 94명이 연수를 수료하였고 수료생 모두 연수기업에 채용되었다.

(4) 창업 지원 확대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창업 희망자뿐만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기존 창업자를 대상으로는 연 200만 원 3년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경영개선자금을 2023년부터 연 300만 원 3년간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경영컨설팅을 다변화하여 일반 창업 컨설팅 외에 마케팅, 특허, 공공조달, 회계 등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민간단체인 아산나눔재단과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청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인 '아산상회'를 운영하여 글로벌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등을 실시하였고 재정을 지원(최대 1,500만 원)하여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창업 유관기관 공동사업으로 「2023 통일 리-스타트업」을 개최(11.18.)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창업사례를 발굴하고 생산품 판로를 지원하였다. 「2023 통일 리-스타트업」 행사는 남북하나재단, 아산나눔재단, 아시아재단, 열매나눔재단, 사단법인 더 브릿지, 이화여대 통일교육선도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북한이탈주민 창업 유관기관간 상호협력 증진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창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3 통일 리-스타트업」 쇼케이스(11.18.)



창업사례 발표대회(11.18.)

(5) 귀농 및 영농 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 농촌진흥청·지자체와 협업하여 영농교육(4주) 및 현장실습(4개월), 영농 창업비 지원, 판로 확보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귀농교육뿐만 아니라 귀어에 관심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실시하여 기초이론교육 및 실습 합숙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수료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작목별 선도 농가와 연계해 최대 4개월간 영농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 협조로 영농분야 전문가가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및 농촌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작목 컨설팅도 실시하였다.

(6) 미래행복통장 운영 및 정착 지원 제도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의 목적으로 매월 저축할 경우 정부가 그 저축금액만큼을 1:1로 매칭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월 최대 50만 원(소득의 30%) 한도로 저축하면 이와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매월 적립하여 만기 시 총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수혜자 확대를 위해 신청자격요건 확대 및 각종 제한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존 근로소득자 외에 특수형태고용노동자 및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등)도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출산, 병역, 장애 및 학업수행 등의 사유발생 시 거주지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가입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일시 중지 횟수(총 3회→6회) 및 기간(1년→1년 6개월)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자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미래행복통장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가입 인원	10	182	380	458	510	559	406	351	162	**3,018**
만기지급 인원	-	-	-	17	49	169	398	433	453	**1,519**

3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정부는 탈북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습능력을 높여 우리 사회에서 통일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 없이 국내에 들어온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생활지원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다.

(1)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및 학습 지원

정부는 탈북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2023년 3월 기준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전국 23개 정규(초·중)학교에 20명의 통일전담교육사를 배치하였다. 통일전담교육사는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1 상담과 기초학습 등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탈북아동과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1:1 온라인 화상영어교육과 방문학습지·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일미래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탈북청소년 장학금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2) 교육 지원

정부는 탈북청소년을 위해 특화된 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학교(1개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을 희망하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인가(학력 인정) 대안학교(4개교)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6개소)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상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에 남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탈북민 자녀의

교육기회와 그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규 수업 이후 학업 보충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7개소) 등도 지원하고 있다.

(3) 대학 진로·진학 지원 및 통일미래인재 양성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탈북청소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례입학을 할 수 있으며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2001년도부터 학비도 지원(국·공립대 전액 면제, 사립대 50% 지원)받고 있다.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2017년부터 남북하나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활용해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대학 입시제도 및 학과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여 진로탐색과 진학 등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4학년도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입시자료집(일반대학·전문대학) 및 핸드북을 발간하여 탈북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하나센터 등에도 제공하였다.



2024학년도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입시자료집(일반대학, 전문대학, 입시핸드북)

또한 2024년 진로·진학 지원 사업으로서 진로진학지원단(7명) 구성과 전문기관의 적성검사 분석·상담 및 진로·진학캠프 운영 등을 통하여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탈북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도 하였다.

한편 탈북대학생의 학업수행 능력과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탈북대학생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기관(대학과 민간단체 4개소)을 지정하여 어학, 컴퓨터 등 다양한 교육과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해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국내 외국어 교육기관을 통해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탈북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4) 무연고 청소년 지원 확대

무연고 청소년은 국내에 들어온 후 하나원에서 보호결정을 받을 때 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정부는 무연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보호지정을 하고 있다. 또한 무연고 청소년들이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학교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룹홈 시설(15개소)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업, 심리 상담, 교육지원, 임대주택 알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23년 탈북 무연고 청소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외에 매월 일정 금액(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여 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연고 청소년 보호현황조사(10~11월)를 실시하였다. 언어·문화적 차이, 사회관계망 부족, 경제적 부담 등으로 우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 청소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탈북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신설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5)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아니지만,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만 16세 미만 아동을 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금의 일종인 양육가산금(1인당 4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무료입학, 방문 학습지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2024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부터는 제3국 출생 자녀가 '사회배려자 전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3국 출생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남북 출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남북통합문화센터의 남북 생애나눔대화 및 통합문화 프로그램, 개관 3주년 행사 등을 통해 남북 주민들의 상호 교류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남북하나재단에서 개최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경험 사례발표대회, 사회통합주간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들을 기울였다.

(1)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2020년 5월 개관한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관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하여 방문 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2023년 센터 방문 인원은 약 6만 7천여 명으로 2022년 방문 인원 4만 5천여 명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인 '남북 생애나눔대화' 및 심화프로그램 '1박 2일 생애나눔대화'를 진행하였으며, 난타·아코디언·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취미교실 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5월 개관 3주년 행사(5.9, 5.12.~13.), 8월 '한여름밤의 꿈' 행사(8월 매주 토요일), 11월 문화 행사(11.4.~25.) 등을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들이 남북의 문화를 함께 체험하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5월 개관 3주년 행사에는 탈북작가 북콘서트, 통합문화포럼, 토크콘서트 '함께 꾸는 꿈' 등을 개최하였으며, 8월 '한여름밤의 꿈' 행사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창작뮤지컬 '그때 그순간 그대로', 재즈밴드, 키즈 마술, 남북음악인밴드 '고향의 노래' 등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11월에는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연극 '동행', 남북청소년 연합공연 '가을음악축제', 콘텐츠 창작지원 연합공연, 남북통합문화센터 수강생



토크콘서트
'함께 꾸는 꿈'(5.13.)



창작뮤지컬
'그때 그순간 그대로'(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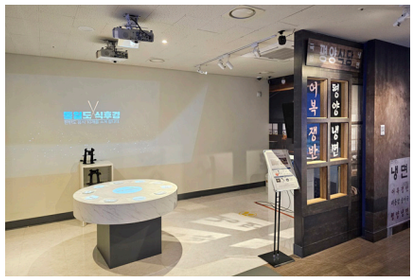
남북청소년 연합공연
'가을음악축제'(11.11.)

활동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들 간 문화 교류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는 기획전시관과 통합문화체험관을 운영하여 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전시관은 '남북 분단의 아픔', '고통 치유의 노력', '북한이탈주민', '통일미래' 등을 주제로 하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합문화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하여 이산가족의 고향을 체험하고 북한음식 만들어 보기, 평양인민대학습당 앞 광장에서 활쏘기, 서울 경복궁 앞에서 투호놀이 등 남북의 다양한 문화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통일시대 자동차여행 VR



통일도 식후경 요리대전 VR

(2)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확산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과 남북 주민 사회통합 사례 등을 발굴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온·오프라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격월간 소식지인 『동포사랑』을 책자와 웹진,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채널로 구독자에게 배포하였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5개의 누리소통망(SNS)을 운영하며 온라인 소통을 지속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인식개선을 목표로 '1사1인 캠페인'을 새롭게 추진하여 언론매체(뉴스, 신문 지면 등) 및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광고를 통해 홍보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를 '남북한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10.30.)로 확대하여 정착 우수사례 및 남북주민 사회통합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1사1인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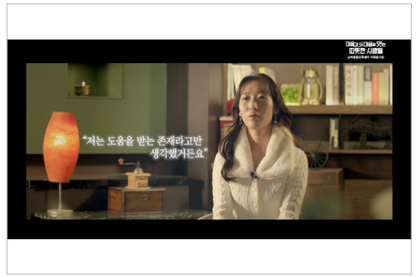
남북한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10.30.)

한편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통합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벽을 넘은 인(人)터뷰',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로 인한 갈등과 오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를 위한 대화법', 남과 북의 갈등을 음악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남북문화 갈등해결 강좌'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남과 북의 문화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문화공감 버스킹'을 3회(3.31, 9.23, 10.21.),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4회(1.23, 5.19, 6.10, 11.18.) 개최하여 대상과 지역을 넘어 남북통합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남북통합문화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대중성 있는 유튜브 채널과 협업하여 센터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센터 자원봉사활동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여 센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친근한 이웃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노래자랑'(8.19, 9.16.), 탈북 예술인들의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탈북예술인 창작음악회'(11.25.) 등을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문화를 보다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 예술인을 발굴하여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통합문화콘텐츠 창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분야 유공자(9명)를 선정하여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자원봉사활동 홍보 영상



북한이탈주민 노래자랑(9.16.)



탈북예술인 창작음악회(11.25.)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유공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식(12.6.)

(3)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교류 확대

남북하나재단은 2015년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착한(着韓) 봉사단'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2023년에 16개 단체로 구성된 제7기 '착한 봉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남북주민을 포함하여 200여 명이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묘역 환경정화활동, 꽃화분 헌화 등 봉사활동(6.17.)을 했다. 한편 전국 각지의 북한이탈주민 3,000여 명이 함께 모인 「2023 북한이탈주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10.14.)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착한봉사단' 국립서울현충원 봉사활동(6.17.)


「2023 북한이탈주민 어울림 한마당」(10.14.)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는 남북주민이 함께하는 연합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취약계층 겨울 온기나눔 생필품 키트 제작 등 '정성나눔 자원봉사'를 4회,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등 '음식나눔 자원봉사'를 5회 진행하였으며, 남북통합문화센터 '대표 봉사단'을 창단·운영하여 농촌지원 자원봉사 등 8회를 진행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전국의 남북주민 자원봉사 단체가 한데 모이는 '자원봉사 페스티벌'(9.23.)을 개최하여 남북주민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와 자원들을 공유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성나눔 봉사활동(3.25.)



농촌지원 자원봉사단 활동(6.10.)



자원봉사 페스티벌(9.23.)



음식나눔 봉사활동(10.28.)

제4절 위기·취약 북한이탈주민 보호

1 북한이탈주민에 특화된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1) 신속한 파악 및 대응 체계 마련

그동안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원인은 생계·심신건강 등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위기정보들이 통일부와 정착지원 유관기관에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신속한 위기파악 및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통일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유관기관(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지자체 등) 협업을 위한 조직인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2022년 신설하였고, 2023년 4월에는 '안전지원과'로 조직을 강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징후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공유·관리하고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긴급한 위기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이 안전지원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상시 직통 업무전화(010-4548-5701)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안전지원 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의 상시 관리

통일부는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위기정보를 공유받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연 2회 실시하였다. 그런데 동 전수조사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조사와 중복되고, 효과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위기 발굴 및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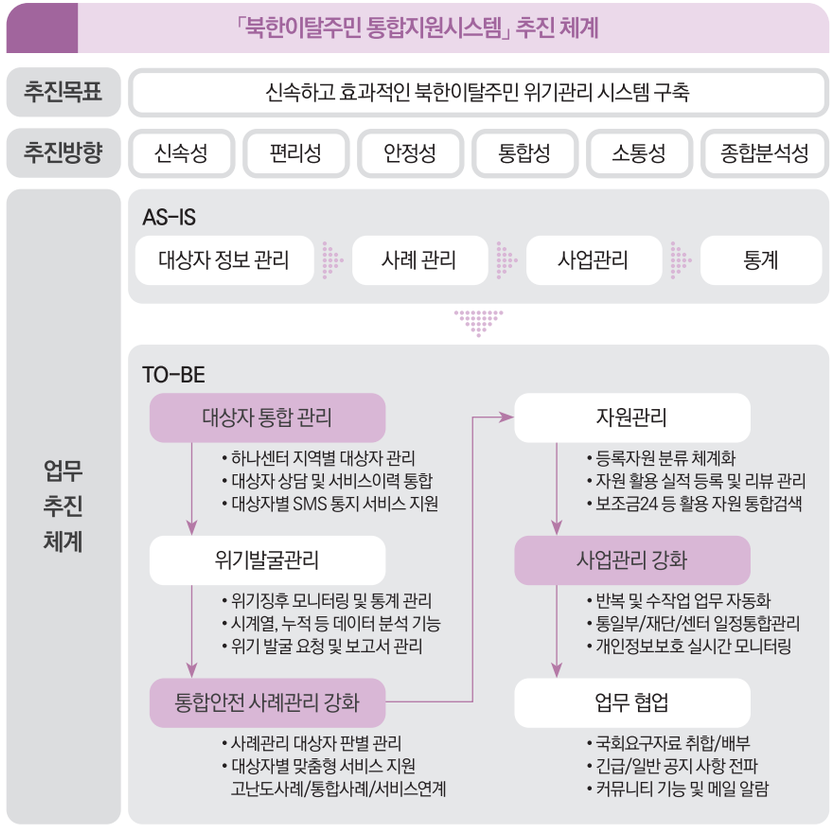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조사결과를 공유받아 지자체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방식을 변경하였다. 또한 위기의심가구 발굴을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보건복지부가 통일부에 격월단위로 공유한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2년간 다수의 위기지표가 중첩되면서 장기간 포착되는 위기의심가구(총 7,200명)를 별도로 선별하였고, 이들에게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중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위기 대응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남북하나재단과 전국의 하나센터가 상담 등을 통해 포착하는 위기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기존의 「통합사례 이력 관리시스템」을 현장 사용자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은 12월 15일부터 시범운영 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위기 북한이탈주민을 신속히 발굴하여 대응·지원하고 이력도 함께 관리하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로서 위기상황의 북한이탈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추진 체계



(4)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활성화로 지자체의 안전지원 책무 강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하나센터 관계자, 지역 내 종교·복지단체·기업 등 각종 민간지원기관 관계자, 동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지 정착과 자립 등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지원 자원 발굴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설치·운영되었다.

전국 138개의 각급 지자체에 동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동 성과'를 반영하여 동 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동 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지자체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3.6.)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동 협의회 심의·의결 범위 중 취업지원 관련 사항을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정착·교육 지원 등으로 확대, 동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실무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모임·토론회·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및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판문점 등 통일안보현장 방문(5.9.), 거주지보호담당관 워크숍(6.8.)을 실시하는 등 동 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지역협의회 담당자 통일안보현장 방문(5.9.)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관 워크숍(6.8.)

2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정부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의심가구 발굴 및 무연고자 장례 지원, 태풍피해가구 지원, 가정폭력 법률 지원 등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긴급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연고가 없이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지자체 주관 무연고 장례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여 가족 없이 홀로 우리 사회에 정착한 고인의 장례에 예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을 위하여 이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각 분야(취업, 생활, 경제 등) 전문상담사가 전화 및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탈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인권침해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전문 상담·치료기관인 '마음소리공감 상담센터'를 인천광역시에 개설(9.18.)하였다. 앞으로 민간 전문심리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음건강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서비스 지원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심리치료비 지원범위를 기존 북한이탈주민 개인에서 그 가족까지 확대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독거 어르신 반찬나눔 봉사(9.25.)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위로방문(12.27.)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정서 안정 및 치유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와 북한과 제3국에 체류할 때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다방면으로 의료지원을 강화하였다. 일반 의료비를 연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만성·중증·난치성질환은 연 7백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또한,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을 신설하였고 심리치료비도 북한이탈주민 본인에서 그 가족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생계 곤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우리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전국의 하나센터 및 신변보호기관 등에서 선정하여 통일부 직원이 직접 방문해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12월까지 111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총 5,476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였다.

한편 남한의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법무부와 협업하여 위촉변호인 및 지원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하나센터 역량 강화

정부는 하나센터를 통해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의 빠른 적응과 정착을 위한 초기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센터의 초기 집중교육은 8~9일간 50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진로 및 취업교육, 실생활 및 지역사회 이해,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하나원에서의 교육과 달리 현장체험 중심이다. 지역 적응지원 사업으로서 교육 및 진학, 진로 및 취업, 생계, 의료, 심리·정서, 주민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

하나센터 초기 집중교육 내용

지역적응교육	수료 후 첫 1주간	하나센터 운영	
하나원 수료 (지역전입 지원)	• 주민등록/입주신고 • 신변보호 담당관 상견례	지역사회 이해 및 생활교육	• 경제교육 • 구청, 은행, 마트 등 주요기관 및 시설 방문
지역사회 안내	• 하나센터 소개 • 교통/시장 안내	진로탐색과 직업준비 교육	• 취업욕구 파악 및 상담 • 취업 기본교육 •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장 방문
고용지원센터 출장교육	• 직업훈련 정보 제공 • 구직/구인 정보 제공	진학지도	• 지역 내 학교 소개 • 학부모 교육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 인감증명 등록 • 주민등록증 발급 • 통장 실명 변경	건강증진 및 개인역량 강화교육	• 기본건강 관리 • 정신건강 예방 교육 • 지역의료기관 이용방법 안내 및 방문 • 여가활동 안내
		인생설계	• 인생계획서 작성 및 공유



전국 하나센터 중간관리자 워크숍(1.4.)



울산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지원(5.11.)



서울북부하나센터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5.15.)



강원남부하나센터 지역주민 인식개선 캠페인(10.17.)

이탈주민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 조사 및 지원 등을 통해 위기 의심자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하나센터는 거주지 현장 최일선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하나센터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징후를 포착·발굴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등의 통합안전지원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하나센터 업무매뉴얼을 개편하고 종사자 역량을 높이고자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전국 16개 시·도에 25개 하나센터(서울 4개소, 경기 6개소, 강원 2개소 외 광역시도별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할 지역 범위가 넓어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하나센터에서는 지역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하나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보안 및 외부의 사이버 위협 등으로부터의 사고 예방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하나센터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나센터 종사자들에게 보안 업무폰을 지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하나센터에는 남북하나재단 소속의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들이 배치되어 하나센터 직원(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는 심리 또는 취업 분야의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정착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87명(심리 50명, 취업 37명)의 전문상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취업·건강·심리 등 정착생활 전 분야에 걸쳐 상담 등 각종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2023년 지역별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16	3	2	4	2	3	2	27	4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3	3	3	2	3	3	2	5	**87**

* 마음소리공감 상담센터(인천 남동구), 남북통합문화센터(서울 마곡) 배치 전문상담사

04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제1절 |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제2절 |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충

제3절 |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향상

제4절 | 통일법제 구축

제5절 | 남북협력기금 운영 내실화

UNIFICATION WHITE PAPER

통일부











제4장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정부는 헌법 제4조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통일준비 노력을 전개하였다.

국내적으로는 한반도 내외부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미래비전의 구상을 위해 통일부장관 직속의 민간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발족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통일인식을 높이고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통일문화행사 「통하나봄」(「통일로 하나된 미래를 봄」)과 「통일로가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폭넓게 국민들과 만나고 소통하였다.

이 밖에 권역별 통일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 센터인 인천통일+센터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첫 정규 센터인 호남권 통일+센터를 개관(9.8.)하였으며, 순차적으로 권역별 통일+센터를 설치해 나가기 위한 절차들도 추진하였다. 한편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한반도 통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하였다. 4월 한미 정상회담과 8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견인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동력으로 삼아 여러 외국 정부, 의회,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연대 기반을 강화해 나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통일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한반도국제포럼」(Korea Global Forum: KGF) 등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해외 한반도 전문가, 청년들의 한반도 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과 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한미동맹 70주년, '독일 통일의 날' 등과 연계하여 재외 동포와 현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통일·대북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국민 북한정보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와 정비 작업을 지속하였으며, 남북 관계 진전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편성·운영하였다.

제1절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1 통일미래비전 구상

김영삼 정부가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 아래 1994년 8월 15일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2024년으로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세계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고 있으며,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분단이 장기화되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면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변화된 한반도의 내외부 상황을 반영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비전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 2월 28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통일부장관 직속 민간 자문기구이다.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통일미래비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국제협력대화」를 추진하였다. 6월에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5명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 국무부,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정부·의회·연구기관·언론사·재외동포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미래비전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12월에는 북한과 접촉 경험이 많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우리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정부는 국민들의 통일인식을 높이고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론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젊은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23 청년대화」를 시작으로 종교계, 교육계, 법조계 등 각계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통일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3 통일미래 공모전」을 개최(6.9.~7.21.)하였다. 텍스트, 미술, 음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78건의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3.15.)



통일부-「통일미래기획위원회」 원탁회의(5.3.)



미국 국제협력대화(6.5.~11.)



베트남 국제협력대화(12.14.~16.)

작품이 출품되었고, 심사를 통해 24건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에도 「부산국제영화제 토크콘서트」(10.6.),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정책토론회」(11.27.), 「북한인권 국제 전문가 회의」(11.27.), 「통일보건의료 학술대회」(12.1.) 등을 통해 통일미래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을 개선하고 우리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2023 통일미래 공모전(6.9.~7.21.)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정책토론회(11.27.)

한편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통일·대북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 정책 자문기구인 「2030자문단」을 11월에 구성하였다.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들로 구성된 2030자문단은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통일정책·홍보 등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2차례 회의(11.17, 12.6.)를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하였다. 청년세대들이 제안한 의견들은 향후 통일·대북정책에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고 통일부 조직문화에도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대 확산

(1) 북한 실상 알리기 사업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정부는 북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올바른 대북관과 통일관 확립에 기여하였다.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는 주제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패널을 섭외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북한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처음 개최하였던 서울 토크콘서트(9.20.)에는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개최 현황

일자	지역	주제	장소	북한이탈주민 패널
9.20.	서울	장마당세대	남북통합문화센터	2030 세대
10.6.	부산	표현의 자유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영화감독
11.13.	대전	입시, 취업, 한류	KW컨벤션	2030 세대
11.25.	목포	무상의료	호남권 통일+센터	의사
12.6.	춘천	무상교육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원





통일부장관 주재 토크콘서트,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서울 행사」(9.20.)

통일부장관이 패널로 참석하여 젊은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보는 북한 실상('북한 MZ 세대는 이렇습니다')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토크콘서트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목포를 거쳐 춘천까지 5개 도시에서 개최되어 지역사회의 통일인식을 확산시키고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이 문화공연,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북한 실상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별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 행사와 연계하고 통일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진행하였다. 이는 북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네트워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에서는 「통일공감대화」 및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였으며, 대전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목포에서는 호남권 통일+센터, 춘천에서는 탈북청소년학교(해솔직업사관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행사 진행방식을 다변화하였다.



부산(10.6,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대전(11.13, KW컨벤션)



목포(11.25, 호남권 통일+센터)



춘천(12.6, 해솔직업사관학교)

(2) 통일문화행사 「통하나봄」

정부는 국민들의 통일인식을 높이고 문화를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해 왔다. 2022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행사 브랜드명 「통하나봄」을 활용하여 2023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총 3회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일공감대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였다.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며, 가족 단위의 참여가 많아 부모와 자녀세대가 통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이 되었다.



「광화문에서 통하나봄」



「목포에서 통하나봄」



「부산에서 통하나봄」

수도권에서 개최된 「광화문에서 통하나봄」은 '광장에서 자유, 인권 그리고 통일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광화문광장(5.26.~27.)에서 진행되었다. 행사 개막식에는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제사회(주한영국대사), 시민단체(민족통일협의회 의장)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통일을 염원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 실상과 인권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와 토크쇼('북한에서 문화예술인으로 살아가기')를 기획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광화문에서 통하나봄」(5.26.~27.)

호남권에서 개최된 「목포에서 통하나봄」은 호남권 통일+센터 개관과 연계하여 진행(9.8.~9.)하였으며, 호남지역의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다. 전남도립국악단 등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들과 협업하여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지역통일문화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춤을 통해 자유와 평화, 통일을 표현해 보는 '청소년 통일댄스 콘테스트'를 개최해 참가 학생들과 관객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통일'이라는 주제를 색다른 방식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영남권에서 개최된 「부산에서 통하나봄」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피란 수도였던 부산을 찾아 부산시민공원과 남포동 비프광장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10.7.~9.)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와 협업하여 영화를 통해





「목포에서 통하나봄」(9.8.~9.)

분단의 아픔과 북한의 실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영화 상영 후 진행한 관객과의 대화는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부산 시내 곳곳에 있는 '통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서울학생 통일이의 부산기행」을 기획전시하여 부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부산국제영화제」 협업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자	장소	내용
동네방네비프	10.7.~8.	부산시민공원	분단의 아픔을 담은 영화 상영(4편) 및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비프 (올데이시네마)	10.9.	남포동 롯데시네마	북한 실상 관련 영화 상영(3편) 및 관객과의 대화 시간
커뮤니티비프 (커비로드)	10.7.~9.	남포동 비프광장	통일토크쇼 '스크린에 펼쳐진 통일' 및 기획전시, 포토존 운영





「부산에서 통하나봄」(10.7.~9.)

(3) 통일·대북정책 분야 사회적 대화

정부는 2018년부터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통일·대북정책 추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일·대북

정책 분야 사회적 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3년에는 일반 국민, 시민단체 활동가, 재외동포, 통일·대북정책 전문가, 청년세대 등을 대상으로 총 24회 행사를 개최하여 2,221명이 참여하였다.

일반 국민 대상 사회적 대화는 성별, 연령, 이념성향 등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는 국민 참여단 863명을 대상으로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각 권역에서 총 6회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권역별 대화에 참여한 2030세대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합의형 시범대화를 2차례(온라인 및 대면) 진행하였다.



수도권 사회적 대화(9.9.)



합의형 시범대화(11.11.)

시민단체 활동가 대상 사회적 대화는 서울·인천·부산·경남·충청·경기·전북 등 7개 지역에서 활동가 568명을 대상으로 총 7회 진행하였다.

재외동포 대상 사회적 대화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세계한인회장단 대회」에 참석한 재외동포 285명을 대상으로 진행(10.3.)하였다. 재외동포청과 협력하여 진행한 이번 행사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론화 대상을 재외동포까지 확대하였다.

전문가 대상 사회적 대화는 통일·대북정책 분야 학자, 연구자 등 1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수도권 전문가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서울·광주·제주·강릉·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지역별 전문가 토론회를 총 8회 개최하였다.

「청년대화」는 통일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참여를 높이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 90명을 대상으로 진행(5.23.)하였으며,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과 청년이 묻고 답하는 토크콘서트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수도권 전문가 대토론회(6.27.)



광주 지역 전문가 토론회(9.15.)





2023 청년대화(5.23.)

(4) 통일문화콘텐츠 공모 「통일로가요」

정부는 2015년부터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해왔으며, 2023년에는 제9회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2023 통일로가요」(4.10.~5.27.)를 개최하였다. 「2023 통일로가요」에는 '다시 듣고 싶은 통일노래' 리메이크곡과 창작곡 모두를 공모하였는데 리메이크곡은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의견 수렴 온라인 창구)을 통해 국민들의 다시 듣고 싶은 통일 노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저작권 협의를 거쳐 최종 5곡('이승철'의 「그날에」, '패티김'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강산에'의 「라구요」, '설운도'의 「실향민의 한」, '소향·박완규'의 「평화의 바람」)을 선정하였다.

「2023 통일로가요」 참가팀 공모결과 총 107개 팀이 신청하였으며, 1차 동영상 예심과 2차 실연평가(5.12, 강남구 엠팟홀)를 통해 결선에 진출할 12개 팀을 선정하였다. 최종 결선공연을 통해 'G.I.F.T.'의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등 총 7곡의 수상곡을 선정하고 수상자 전원에게 통일부장관상을 수여하였다. 결선공연은 「통일교육주간」, 통일문화행사 「통하나봄」과 합동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5.27.)하였다.

「2023 통일로가요」 수상곡

구분	곡명	팀명
대상	우리 꼭 다시 만나요	G.I.F.T.
우수상	강을 건넜다오	김경민
	사랑하는 그대여	이유카와 악사들
장려상	Growling	ode
	가나다라마바사	국악전자유랑단
	새하얀 도화지	트러스트
	바람(Wish)	이웃사람들





「2023 통일로가요」 결선(5.27, 광화문광장)



대상팀 독일 공연(10.3, 함부르크)

대상팀 'G.I.F.T.'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2023 독일통일 기념행사(10.3.)에서 축하공연 및 버스킹 공연을 하였다. 또한 대상팀 뮤직비디오와 결선 영상 및 특집 프로그램 등을 UniTV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수상곡 앨범을 발매(7.31.)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음원사이트에 등록하였다.

3 지역별 통일⁺센터 단계적 설치 및 운영

정부는 서울에 편중된 통일 관련 인프라의 지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통일⁺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통일⁺센터는 지역 내 하나센터, 통일관 등 통일 인프라를 통합·연계하여 지역 주민에게 통일정책 홍보, 통일교육 등



통일부-전라남도 업무협약 체결(9.8.)



호남권 통일⁺센터 개관식(9.8.)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부터 인천통일⁺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며, 2023년에는 첫 정규센터인 호남권 통일⁺센터(이하 호남센터)가 전라남도 목포에 개관(9.8.)하였다. 2024년에는 강원권(춘천), 2025년에는 경기권(의정부) 및 충청권(홍성)에 권역별 통일⁺센터를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9월 진행된 호남센터 개관식에는 김영호 통일부장관,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관식에 앞서 통일부장관과 전남도지사는 업무 협약식을 갖고 호남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관식 후 통일부장관은 목포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족(9명)을 초청하여 위로와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전북·전남 지역을 아우르는 호남센터는 지상 3층 건물에 통일전시체험관, 통일정보자료실, 요리교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등도 입주하여 지역의 '작은 통일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호남권 통일⁺센터 전경



목포지역 북한이탈주민 초청 간담회(9.8.)

호남센터에서는 개소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통일부와 협업하여 「목포에서 통하나봄」(9.8.) 및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11.25.) 행사를 연계 운영하였고, 호남센터의 미션과 비전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주민 사회적 대화」를 추진(9.23.)하였다. 또한 시범운영 프로그램으로 남북한 주민 교감 프로그램인 「통일이 무르익는 쿠킹클래스」 운영(4회)과 차별화된 통일 명사초청 특강 「내 삶에 통일 더하기」를 개최(3회)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이 무르익는 쿠킹클래스」(11.17.)



「내 삶에 통일 더하기」(11.24.)

시범센터인 인천통일⁺센터는 다양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우선 청소년 통일현장 문화체험, 인천 지하철 역사를 활용한 북한인권 전시, 통일어울림한마당 등 인천지역 맞춤형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인천지역 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인천 시민들이 참여하는 통일문화 행사를 다수 개최하였다.

「통일한마음 체육대회」, 「남북 생애나눔 대화」 등 인천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통·통합행사도 개최하였다. 아울러 인천시 공무원



청소년 통일현장 문화체험(4.22.)



통일어울림한마당(10.14.)

통일 공감 프로그램, 인천 시민과의 대화, 유관기관·시민단체 통일현장 문화체험, 국제기구 종사자 가족 통일현장체험 등을 통해 지자체, 지역 내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일인식을 확산시키고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통일한마음 체육대회(9.2.)



국제기구 종사자가족 통일현장체험(10.6.)

정부는 통일+센터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을 제정(10.12.)하였으며, 지역적응센터의 통일+센터 입주 시 사용료 면제 특례 규정 반영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4 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1)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운영

정부는 국민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등 5개의 누리소통망을 운영하여 국민 소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 현황

구분	주소
대표 누리집	https://www.unikorea.go.kr
유튜브	https://www.youtube.com/@mounikorea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inistry_of_unificatio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unikorea
X(구 트위터)	https://twitter.com/uni_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unikorea

대표 누리집 메인화면에 통일 소식을 알리는 카드뉴스 등 직관적 이미지를 배치하여 정부의 핵심정책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메뉴를 구성하여 국민이 언제든지 통일·대북정책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다. 국민 이용률이 높은 유튜브를 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 영상 시리즈 및 숏폼(short-form, 60초 이내 짧은 영상) 영상을 게시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이용해 주요 정책 포럼 및 학술회의의 온라인 국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X(구 트위터)의 경우, 통일부 정책을 시의성 있게 전달하고 국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접점으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블로그는 통일부 청년 기자단이 작성한 통일과 남북관계, 북한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게시하여 통일 담론 형성에 기여하였다.

(2)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정부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제작하여 통일부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통일·대북정책, 북한 관련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였다. 또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포토뉴스



캐릭터 활용 카드뉴스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주요 정책과 보도자료를 시의성 있게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또한 정책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포토뉴스, 숏폼 영상 등의 형식을 적극 활용하고 친근감 있는 캐릭터를 도입해 정책 설명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도모하고 이해를 높였다.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및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콘텐츠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이산가족 영상편지에 기반한 「소원이가 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납북자 유물에 기반한 「잃어버린 이야기」,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경험에 기반한 「증언」 콘텐츠를 기획하고 시리즈로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보급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과정을 「안녕, 나의 이웃」 웹툰 시리즈로 제작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우리 사회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국민 인터뷰 콘텐츠 시리즈 「모두의 OO를 듣다」, 「소통이의 길거리 무물」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각계각층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일상 속에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잃어버린 이야기」



「증언」



「안녕, 나의 이웃」



「모두의 OO를 듣다」



「소통이의 길거리 무물」

(3) 통일방송 UniTV 운영

정부는 2011년부터 인터넷 방송국인 UniTV를 운영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통일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UniTV는 통일·북한문제를 주제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통일부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네이버TV캐스트, 카카오TV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다.

2023년 UniTV는 「통일브리핑」, 「통일담담」, 「통일현장」, 「통일로그인」 등으로 구성된 정규 프로그램 「통일NOW」를 총 49편 제작하였다. 「통일브리핑」은 남북관계, 통일부 소식 등을 전달하였고, 「통일현장」은 정부와 민간의 통일 관련 활동을 소개하였다. 「통일담담」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시사 토크쇼로서 통일·북한 관련 주요 인사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통일로그인」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통일·북한 관련 인물을 발굴해서 알렸다.



「통일브리핑」



「통일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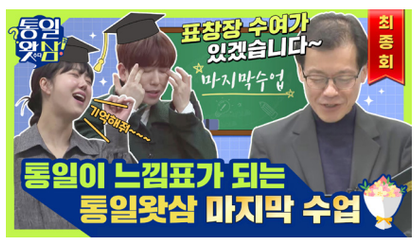


「통일현장」



「통일로그인」

또한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국민이 통일·북한문제에 대해 보다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 이슈를 문화적 측면에서 유쾌하게 살펴본 「통일왓삼」(12회),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향토음식으로 풀어 낸 「통일식객」(12회),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드라마 형식으로 짚어 본 「잇는 필름」(10회)을 신규 제작하였다. 이외에도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남북이야기2」(13회), 「피스뮤직레스토랑 '여행'」(10회) 등 기존 프로그램도 국민적 관심과 최신 방송 추세에 맞게 새롭게 단장하였다.



「통일왓삼」



「통일식객」



「피스뮤직레스토랑 '여행'」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남북이야기2」

아울러 UniTV는 국민과의 소통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 채널을 통해서도 영상을 송출하였다. 「통일NOW」 등이 매주 KTV국민방송, 아리랑국제방송TV, 국방TV, MGTV 등을 통해 방송되었다. 2023년에는 소상공인TV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콘텐츠의 전파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기관 등이 UniTV 영상물을 통일교육 교재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하였다.

제2절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충

1 주요국 정부·의회 대화와 주한공관 소통 강화

(1) 주요국 정부·의회 대화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정부 당국자 및 의회 관계자들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며 우리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3년에는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대북 공조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추진하였다.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대북정책 공조에 있어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굳건한 3국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인권 증진 및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자회의로는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3.22.~25.)하여 정·관계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통일·대북 정책 관련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3월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북한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양국의 공통 현안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의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통일부와 일본 정부 간 정례화된 협의 채널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일본 자민당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 및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도 면담하여 한반도 문제 관련 한일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통일부장관은 4월 7일에는 성 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접견하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 능력 강화를 통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인권,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미일 외에도 유럽 국가 등을 대상으로 통일·대북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확산시켜 나갔다. 통일부장관은 1월 다보스 포럼 계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 셰이크 나얀 빈 무바라크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UAE) 관용공존부 장관을 면담(1.15.)하여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캐서린 러셀 UNICEF 총재와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연이어 면담(1.17.)하여 우리 정부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입장을



통일부장관, UNICEF 총재 면담(1.17.)



통일부장관, 일본 관방장관 면담(3.23.)

설명하고, 북한 영유아를 비롯한 아동 백신 접종과 영양 지원, 북한 식량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독일 정부의 초청으로 독일 통일 제33주년 기념식에 참석(10.3.)하였다. 올라프 숄츠 총리, 페터 첸처 연방 상원의장 등을 만나 한반도 통일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되르테딩어 연방대통령실장을 면담(10.2.)하여 러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독일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연방대통령실장은 우리 정부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방독 계기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최초로 구 동독 정치범수용소와 슈타지 문서고를 방문하여, 정치범 수용소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동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0월 30일 한국을 방문한 한독의원친선협회 하이케 베렌스 회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독일 의원들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독일 연방하원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명하였다.

통일부차관은 10월 10일 피터 셈네비 스웨덴 한반도 특사, 12월 12일 데이비드 모리슨 캐나다 외교차관 면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가 유럽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양국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통일부장관, 독일 연방대통령실장 면담(10.2.)



통일부장관, 독일 슈타지 문서고 방문(10.2.)

(2) 주한공관 소통 강화

정부는 대한민국과 해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각국 주한공관과 한반도 문제 협력을 위한 소통을 더욱 확대하였다. 2023년 통일부장관은 주한공관장을 대상으로 3회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3월에는 주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를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3.29.)하였으며, 11월에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계기로 통일부 최초로 6·25전쟁 유엔참전국 주한공관장들을 초청(11.21.)하였다. 주한공관을 두고 있는 21개국의 유엔참전국 주한대사 또는 대사대리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유럽연합(EU), 아세안국가연합(ASEAN) 내 회원국들의 주한공관장과 국제기구 한국사무소장 등 30명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진행(12.14.)하였다.

아울러 각국 주한공관과의 양자 면담도 활발하게 실시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주한영국대사(3.8, 10.25.), 미국대사(9.22.), 독일대사(10.18.), 캐나다대사(11.13.)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북한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주한



유엔참전국 주한공관장 대상 정책설명회(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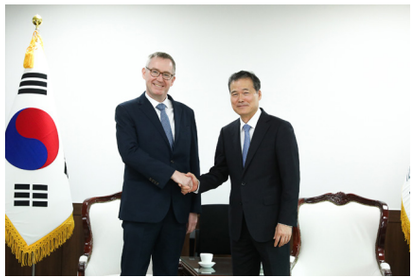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 초청 정책설명회(12.14.)

대사들과 북핵, 북한인권, 한반도 통일 등 제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주한대사들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 공감을 표명하며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통일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9.22.)



통일부장관, 주한영국대사 접견(10.25.)

(3) 유엔군사령부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8·15 경축사를 통해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핵고도화를 계속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유엔사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부-유엔사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통일부장관은 11월 20일 평택 캠프험프리스에서 유엔군사령관을 면담하며, 유엔사 및 유엔사 회원국들과 협력파트너로서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통일부-유엔사 간 정기적 소통체계 구축, 상호 강의 및 방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통일부-유엔사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담대한 구상」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통일부장관은 12월 11일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는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을 통일부로 초청하여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이 정전협정의 관리와 유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통일부-유엔사 간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한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엔사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통일부장관, 유엔군사령관 면담(11.20.)



통일부장관, 유엔군부사령관 감사패 수여(12.11.)

2 국제회의 개최 및 통일공공외교 강화

(1)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

정부는 2010년 체결한 독일 내무부와의 양해각서(MOU)에 기초하여 2011년부터 매년 한국과 독일을 번갈아가며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3년에는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양일 간 독일 연방총리실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 측은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독일 측에서는 카스텐 슈나이더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겸 구동독특임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0명의 자문위원과 6명의 발표자가 참석하는 등 총 3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진단과 함께 지정학적인 도전을 평가하면서, 독일 통일·통합 과정과 남북관계에서의 민족동질성 유지를 위한 사회문화 정책, 비정부 접촉 현황과 의미 등과 관련하여 양측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12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5.22.~23, 독일 연방총리실)

제12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주요 내용

일자		회의 내용
5.22.	세션1	• 독일통일 현황 • 최근 한반도 정세
	세션2	• 대동독지역 문화·통합정책
	세션3	• 통일 전 서독의 민족동질성 유지를 위한 문화정책 • 남북 민족동질성 유지를 위한 사회문화교류 현황
5.23.	세션4	• 동서독 선린관계 이정표로서 동서독기본조약 • 역대정부 통일정책 변화 및 현정부 정책방향
	세션5	• 동서독 비공식접촉이 독일통일에 있어 갖는 함의 • 남북 간 비정부 접촉 및 교류 현황
	세션6	• 동아시아에서 독일의 지정학적 역할 및 도전 • 한반도의 지정학적 도전: 북핵 및 신냉전 흐름
	세션7	• 통일 후 동독의 전문인력 과소대표 문제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진출 현황 및 평가

(2) 「2023 한반도국제포럼」 개최

정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통일 담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2010년부터 「한반도국제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 「한반도국제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국제회의로서 매년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세계 각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국내 행사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도 2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다.

국내에서는 8월 30일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통일부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의 기조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북한 비핵화, 북한인권 증진,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온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북한 실상을 증언했던 탈북청년 김일혁 씨가 연사로 참여하여 탈북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들려주며 북한의 인권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9월 29일에는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케임브리지대학교 지정학센터와 함께 해외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내 한반도





「2023 한반도국제포럼」 국내 세미나(8.30.)



「2023 한반도국제포럼」 영국 세미나(9.29.)



「2023 한반도국제포럼」 미국 세미나(11.6.)

「2023 한반도국제포럼」 주요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국내 세미나(8.30, 서울)	
개회식	• 개회사 : 이동선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 서면축사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기조연설 및 강연	• 기조연설 : 김영호 통일부장관 (차관 대독) • 기조 및 특별 강연 –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 김일혁 한국외대 학생
주요 논의내용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통일을 위한 유관국 및 국제사회 협력 필요성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북한인권 정책 추진 필요성
국외 세미나 1(9.29, 영국)	
개회식	• 개회사 : 존 닐슨 라이트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 축사 : 윤여철 주영국대사 • 환영사 : 마이크 랜드 영국 케임브리지대 다윈칼리지 학장
기조연설	• 기조연설 : 김영호 통일부장관
주요 논의내용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 유지 및 새로운 대북전략 모색 필요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자로서 유럽의 역할 수행 필요성
국외 세미나 2(11.6, 미국)	
개회식	• 개회사 : 이동선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 축사 : 세스 존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기조연설	• 김영호 통일부장관(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대독)
주요 논의내용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및 한미일 협력 제도화 필요성 △북한인권과 안보 문제의 연계성

전문가들이 모여 북핵 및 북한인권 등 주요 현안을 다뤄나가는 데 있어 유럽의 역할과 관여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이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8.18.)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설명하고, 무기거래 등 러북 간 군사협력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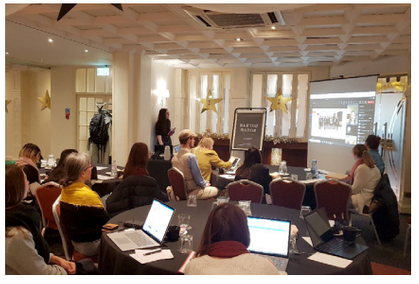
11월 6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미국 내 다양한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교수들이 참가하여 한미동맹의 역할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세미나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및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참석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3) 통일공공외교 강화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였다. 해외의 한반도 문제 연구자들을 한반도 통일 전문가로 위촉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일·북한 문제의 공론화를 추진하였다. 전문 분야와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존 에버라드 전 주북영국대사 등 6명의 전문가를



해외 한반도 통일 전문가 지원 사업
(북한인권 실상 세미나, 9.23,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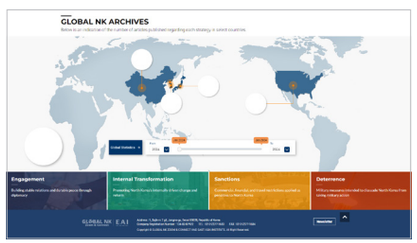


차세대 통일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
(한반도 통일 세미나, 12.1.~2, 영국)

선정하였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각 활동 지역에서 개별 강연,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2030 청년 세대의 참여를 통한 차세대 통일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K-Unification Friends)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 북한인권,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한 공론화 활동을 추진하였다.

통일·북한 문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내 한반도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해외 학술교류 사업도 지속하였다. 통일·북한학 학위 과정과 펠로우십 과정을 국내 교육·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2023년에는 학위 과정 4명, 펠로우십 6명을 선발하였다. 또한, 해외 연구자들의 학술연구 지원도 병행하였다. 2023년에는 미국, 호주, 중국 등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6건의 연구를 지원하였다.

정부는 통일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 영문 웹저널」(www.globalnk.org)을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의 한반도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연구 성과들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해외 전문가 및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23년에는 총 57건의 한반도 문제 관련 분석, 연구, 인터뷰 등을 게재하였으며, 특히 통일부장관 특별대담을 영상으로 게재(12.13.)하여 정부의 통일 비전을 홍보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였다.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 영문 웹저널」(www.globalnk.org)





통일부장관, 민주평통 영국(9.29.) 및 독일(10.1.) 협의회 자문위원 간담회

정부는 재외동포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영국 및 독일 방문(9.28.~10.3.) 계기로 민주평통 영국 및 독일협의회 자문위원들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있어 자문위원들을 비롯한 재외동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관해 재외동포들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외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행사를 개최(7.29.)하고, 이산가족 영화 및 다큐멘터리 상영, 북한인권 실상을 담은 시각자료 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6·25전쟁 미국 참전용사 추모를 위한 특별 전시전도 함께 운영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7.29, 미국)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10.3, 독일)

하였다. 이어 '독일 통일의 날'(10.3.)을 계기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현지 기념식과 연계하여 재외동포 문화 행사를 개최(10.2.~3.)하고, 한독수교 140주년 영상을 비롯한 분단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밖에 재외동포 현지 언론사(5개사) 칼럼 게재 지원을 통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통일·북한 관련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대상 지역을 기존 카자흐스탄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으로 다변화하고, 국가별로 칼럼 주제를 차별화하여 동포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3절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향상

1 「북한정보포털」 시스템 운영

정부는 2011년부터 북한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구축해왔다. 2013년에는 「북한정보포털」(nkinfo.unikorea.go.kr) 시스템을 구축하여 북한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였고, 2014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 이후 자료와 DB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

주요 콘텐츠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일일·주간·월간 단위의 동향,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분야별 현황, 그리고 인물, 사전, 통계, 간행물, 영상 등 참고 자료가 있다. 부가 서비스로 북한 TV프로그램 편성표, 권력기구도, 북한 주요행사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한지형정보를 기반으로 약 30만 건의 지명과 시설명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북한지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북한정보포털」 시스템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북한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12월 29일부터 시범운영을



「북한정보포털」 시스템 개편 화면

시작하였다. 이번 개편에서는 공개 가능한 북한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빅데이터화하고 사용자 환경(UI)을 편리하게 개선하여 일반 국민이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접근·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2 북한자료센터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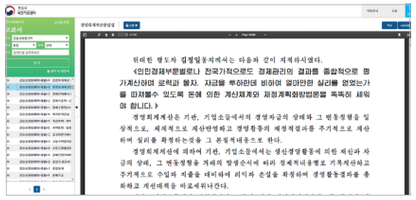
정부는 1988년 7월 7일 「7·7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자료를 수집·축적하고 이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9년 5월 22일 북한자료센터(이하 센터)를 개관하였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5층에서 운영 중인 센터는 북한 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북한 정보 서비스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통일·북한 관련 단행본 8만 4,000여 권, 정기간행물 1만 4,800여 권, 비도서 자료 1만 6,100여 건, 통일부 발간 도서 7,200여 권 등 총 12만 2,311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북한에서 발행한 자료는 총 4만 1,892건을 소장하고 있다. 이는 2022년 3만 7,000여 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써 최신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를 감안하여 새로운 자료를 대폭 확충한 결과이다. 센터는 2023년에 『경제학연구론문집』 등 단행본 840점,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등 정기간행물 4,549점 등 총 5,389점의 전자 자료를 입수하였다.

센터는 2010년부터 방문 이용자들이 통일·북한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새로 입수한 통일·북한 전자 자료 및 센터에서 소장 중인 종이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동 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동신문」 등 신문 5만 8,061호, 잡지 1만 240호, 교과서·단행본·연감 5,655권, 영상 3,697편 등 총 7만 7,653건을 서비스 중이다. 특히 생생한 북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조선중앙TV」 등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최신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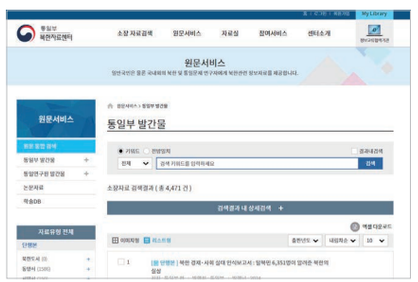


「디지털 아카이브」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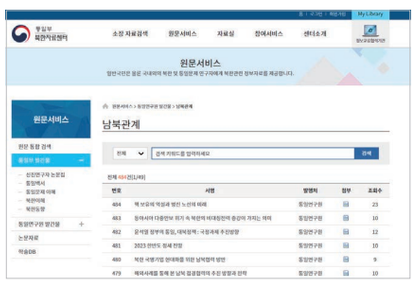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 화면

2023년에는 센터가 소장 중인 구형 마이크로필름 자료(305롤) 등 1만 2,000여 점을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에 등록하였다. 그 밖에 소장자료 관리 및 보수에도 힘을 기울여 파본이 되거나 노후화된 자료 69권에 대한 자료 수선, 재질 강화 등 복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아카이브와 별개로 센터 누리집(unibook.unikorea.go.kr)에서도 소장 자료 및 기사 목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 영화 소개와 북한 교과서, 북한



통일부 자료 원문 연계 화면



통일연구원 자료 원문 연계 화면

북한 발행 자료 보유 현황

(단위: 건)

구분	단행본	정기간행물	비도서자료	합계
보유건수	24,996	5,007	11,889	**41,892**

만화 소장 목록뿐만 아니라 통일부 발간 자료 7천여 건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3천여 건의 원문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센터는 7,100여 편의 북한 제작 영상을 소장하고 있으며, 북한 실상 이해를 돕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 대학교의 북한관련 강의 연계, 통일 유관기관·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시 상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는 센터 소장자료 외에도, 통일·북한 관련 학술DB 6천여 종,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원문DB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센터에서 추진한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개선 노력 결과, 센터 이용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5,611명의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2022년에 비해 1,278명이 증가하였으며, 센터 누리집 접속자 수도 528만 명으로 전년 401만 명에 비해 127만 명 증가하였다. 또한 센터는 국민의



「통일을 읽다」 행사(부평기적의도서관, 9.1.~20.)



「통일을 읽다」 행사(마포중앙도서관, 11.1.~30.)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조감도

북한 이해 제고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인식 개선 프로그램인 「통일을 읽다」 행사를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인천·경기지역 5개 공공도서관과 협업하여 통일문고 운영, 통일그림동화 원화 전시, 남북회담사진 전시 등을 진행하였다.

현재 북한자료센터는 장기간 지속되어온 임차 문제를 해소하고 부족한 열람 공간 확충 및 이용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축할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인근에 건립될 예정이며, 2027년 상반기 중에 개관할 계획이다.

3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

정부는 2010년부터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경제활동, 주민생활, 주민의식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왔다.

2023년에는 북한의 실상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적해 온 조사결과를 집대성한 보고서의 공개 발간을 최초로 추진하였다. 통일부는 연구진이 작성한 공개보고서 초안을 전문가 감수와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한 후 2024년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서론, 북한 경제 실태와 변화, 북한 사회 실태와 변화, 주민의식, 결론 등의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조사의 통계와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실상의 변화 모습과 지역 간 차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곳곳에 북한이탈주민의 심층면접 결과를 덧붙여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경제난과 식량

위기는 도외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함에 따라, 주민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북한 내부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계획경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주거·의료·교육 환경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 의존하여 의식주와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으며, 시장화에 따른 계층 분화로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가 누적되고 있었다. 또한 북한 정권의 통제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습통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 및 개인주의적 성향도 증가하고 있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분단 상태에서 북한 내부 사정을 접할 수 있는 자료집으로서 의미가 있다. 통일부는 동 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경제·사회 실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의 발전적 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홍보 리플릿

* 북한실상알기 누리집(http://unikorea.go.kr/nk_realities/)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제4절 통일법제 구축

정부는 헌법 제4조에 따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및 법치에 기반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 법제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 대비한 다양한 법·제도 연구 및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민간 법제 전문가 및 법무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통일법제 연구 노력을 공유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2009년 구성하여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시기별로 필요한 정책연구 과제를 논의하는 등 통일법제 체계화 사업의 추진방향을 실질적으로 조율하였다. 2023년에도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4회 개최(3.24, 6.21, 9.26, 12.18.)하여 통일법제와 관련한 민간 전문가들과 유관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지난 10년간 통일법제 연구성과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9월 통일부 조직개편에 따라 '통일기반조성과'를 신설하여 통일법제의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통일부·법무부·법제처 공동학술회의(12.8, 한국프레스센터)

또한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통일법제와 관련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구과제 발굴 및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3년에도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통일법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12.8.)하여 통일법제 업무의 부처 간 협업을 증진하고, 각 부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통일법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계 내 통일법제 연구 생태계 조성 및 신진연구자 육성 차원에서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와 함께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매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2023년에도 법조계 박사급 연구진의 참여하에 '통일을 준비하는 법체계 구축'을 세부 주제로 통일부-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12.1.)하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함께 '통일법·북한법 연구 30년: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12.29.)하여, 지난 30년간 북한 및 통일법 연구의 연구토양 및 성과를 평가·성찰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더불어 그동안 각 부처·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통일법제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민관이 협력하여 보완·발전해 나갈 통일법제 분야를 찾기 위하여 '기존 통일법제 연구성과 분석·평가 및 향후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도 실시하였다.



통일부-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공동학술대회
(12.1, 서울법대 서암홀)



통일부-통일과 북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12.29,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제5절 남북협력기금 운영 내실화

1 남북협력기금 수입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면서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1991년 정부출연으로 250억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최초로 조성하였고, 그 이후 남북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2023년 남북협력기금 수입은 6,629억 원이다. 경수로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이자 상환 및 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572억 원을 출연 받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300억 원을 예수하였다. 여유자금에서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2억 원과 증권사 등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623억 원 등 총 1,625억 원을 회수하였고, 자체수입은 사업비 정산 환입 등 132억 원이다. 한편

2018~2023년 남북협력기금 수입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정부출연금	637	1,000	1,500	1,000	1,000	57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784	2,030	5,486	2,370	1,055	4,300
여유자금 회수	2,789	846	624	1,419	1,763	1,625
자체수입	201	132	331	140	95	132
합 계	**6,411**	**4,008**	**7,941**	**4,929**	**3,913**	**6,629**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2023.12.8. 국회 의결, 2024.1.9. 공포 예정) 남북협력기금에 기탁된 민간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별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부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 남북협력기금 지출

정부는 2023년 총 1조 8,004억 원(사업비 1조 2,101억 원 포함)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제328차~제330차, 총 3회) 및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제193차~제198차, 총 6회)를 개최하여 총 291억 원 지원을 의결하였고, 224억 원을 집행(2022년 이월 예산 없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1.9%)하였다.

사업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남북 사회문화교류」 항목에서는 총 34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왔던 교육학술 협력사업인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에 23억 5,800만 원, 문화유산 협력사업인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관련 디지털 복원 및 디지털 기록관 운영 지원에 5억 9,100만 원,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 전시」 사업 지원에 5억 700만 원 등을 집행하였다.

「이산가족교류지원」 항목에서는 총 9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남북관계 소강 국면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에 대비하여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 비용 등으로 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북미지역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 지원에 1억 9,300만 원,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 교류 경비지원 등에 8,400만 원을 집행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 항목에서는 총 7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대북 인도지원사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 업무지원 및 대민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대북지원 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지원(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7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다.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 항목에서는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사업(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32억 200만 원,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운영 지원에 13억 3,100만 원, DMZ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7억 5,000만 원,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운영비 지원에 4억 1,400만 원, 'DMZ 마을 실태조사 및 재현' 용역비 지원 등으로 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이외에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사업에 2억 6,900만 원,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복원 사업' 지원에 4억 1,000만 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에 2,500만 원 등을 집행하였다.

「개성공단지원」 항목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개성

2018~2023년 남북협력기금 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사업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41	70	32	31	29	34
	남북 사회문화교류	100	37	43	35	34	35
	인도적 문제 해결	78	358	151	40	44	17
	남북경제협력	1,760	197	128	122	325	67
	개성공단지원	138	88	88	84	347	71
	소 계	**2,117**	**750**	**442**	**312**	**779**	**224**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3,420	2,610	6,056	2,831	1,486	4,748
여유자금 운용		846	624	1,419	1,763	1,625	1,634
기금 운영비		28	24	24	23	23	23
합 계		**6,411**	**4,008**	**7,941**	**4,929**	**3,913**	**6,629**

공업지구지원재단에 5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비 지원에 20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아울러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항목에서는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33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이 밖에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에 4,300억 원, 예수이자 상환에 448억 원 등 총 4,74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 운영비는 2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다.

3 2023년 사업비 집행 실적

2023년 남북협력기금은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지원' 등 253건의 사업에 총 224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다.

2023년 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 원)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 65건	3,357	통일정책 (65건, 3,357)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지원 4건	2,358	남북 사회문화교류 (17건, 3,456)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지원 6건	507	
개성 만월대 디지털복원 지원 3건	487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 지원 4건	104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지원 3건	84	인도적 문제 해결 (13건, 1,745)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을 위한 지원 2건	269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을 위한 지원 3건	447	
북미지역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지원 1건	193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지원 4건	752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4건	25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158건, 13,875)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지원 4건	3,202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개선」 사업 지원 6건	269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 지원 11건	410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지원 80건	1,331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운영비 지원 29건	414	
DMZ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12건	750	
「DMZ 마을 실태조사 및 재현」 용역비 지원 4건	33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지원 4건	5,11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지원 4건	2,027	
합계	**22,434**	**총 253건**

※ 사업별 집행액의 합은 반올림으로 총 집행액과 다를 수 있음.

05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제1절 | 통일교육 기반 확충

제2절 |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제3절 | 지역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제4절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제5장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정부는 자유·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기본교재에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 내용을 강화하여 발간하고, 국립통일교육원의 원내 교육과정과 학교·지역사회 통일교육, 이러닝 과정 등 다양한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에 북한인권 실상 등 내용을 강화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교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2030세대 대상으로는 통일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2030 자유통일 문예클래스」, 「2030 자유통일광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제11회 통일교육주간」(5.22.~28.)에는 대통령의 통일 휘호 「자유 평화 통일」을 전수받고, 「글램핑 토크쇼」와 같은 미래세대 체험형 프로그램도 새롭게 실시하였다. 이 밖에 전국 일선 학교와 지역 통일교육 거점에서 자체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지역통일관을 중심으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및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고, 이와 함께 건전한 안보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제23기 통일교육위원들은 주민들을 찾아가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홍보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직접 설명하는 '통일부스'를 운영하였다.

특히 북한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학교·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상 알리기를 활발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도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한편 교육대상별로 통일과 안보를 주제로 한 다양한 도서와 함께 TV·유튜브 채널과의 협업 영상, 애니메이션 및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유아·어린이, 장애인, 재외동포 등을 위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여 통일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3년간 중단되었던 체험연수를 본격 재개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정상적 입소형 체험연수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소년, 대학생, 유관기관 종사자 등 각계각층 국민들이 참여하는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였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통일미래체험 페스티벌」(11.3.~4.)을 개최하는 등 통일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건전한 역사관·통일관·안보관 정립을 위한 새로운 참여·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통일안보 관련 장소를 견학하는 '통일안보 견학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2024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 등을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였다.

제1절 통일교육 기반 확충

1 통일교육 방향 정립과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2023년 통일환경 변화에 맞춰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개편을 추진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국립통일교육원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사회통일교육 저변 확대, 학교 통일교육 지원 강화, 수요자 맞춤형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제고, 통일교육 추진 기반 확충 등을 기본계획의 6개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한편 정부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을 개편하여 발간하였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과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에 따라 통일교육의 목표와 중점방향을 설정하였다. 통일교육의 목표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신설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통일교육의 내용으로서 통일의 이해, 북한의 이해, 통일환경과 통일정책, 통일 비전과 과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반영하였다. 특히, 『북한인권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북한 주민이 침해받고 있는 시민·정치적,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소개하였다.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고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편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지원법」에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통일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2023년 한 해 동안 국립통일교육원은 5개의 전문과정과 5개의 단기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내교육 과정에 참여한 인원은 4,693명이었다. 사이버 통일교육은 공공과정, 교원과정, 시민과정, 2030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총 45만 7,842명이 참여하였다.

2023년 통일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 과정	전문과정(5개)	단기 과정(5개)					이러닝 통일교육과정	합계
		공직자 통일교육과정	학교통일 교육과정	사회통일 교육과정	글로벌통일 교육과정	특별 교육과정		
인 원	261	1,727	1,075	1,033	285	312	457,842	**462,535**

전문과정으로는 통일정책최고위과정, 통일정책지도자과정, 통일미래기획과정,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등 5개 과정, 총 261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통일정책최고위과정은 사회 저변에 통일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각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교육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범정부적 통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통일정책지도자과정과 함께, 4~5급 상당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미래기획과정을 운영하였다. 차세대



통일정책최고위과정(4.13.~7.20.)



통일정책지도자과정(1.26.~12.1.)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2.16.~11.9.)

통일전문가과정은 2030 대상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52명을 교육하였다.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은 일선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 현장에서 북한·통일 문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2023년에는 북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강사 양성 과정'(6월~8월)을 개설하여 통일교육 강의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교수기법 등 강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단기과정으로는 공직자통일교육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육과정, 글로벌통일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총 4,432명을 교육하였다. 공직자통일교육과정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통일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통일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1,727명을 교육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광역지자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을 통해 통일교육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학교통일교육과정은 각급 학교 교사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으로 1,075명을 교육하였다. 동 과정은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초·중등학교 교장(감) 및 교사, 교직을 희망하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통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과정은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통일교육위원, 통일단체 및 종교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1,03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글램핑 토크&콘서트」는 2030 세대가 선호하는 글램핑 형식과 소통·체험 중심의 통일교육을 결합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2023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글램핑 토크&콘서트」는 5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국립통일교육원 잔디마당에서 진행하였는데, 어린이 동반 가족, 2030 청년 및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정책고객 등 약 200여 명의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여 통일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0월 행사에서는 '통일텐트 꾸미기'와 북한이탈주민 김치 명인과 함께하는 '북한 김치 담그기' 및 북한이탈주민 '콘서트와 토크쇼'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유와 인권 및 통일에 대해 성찰하고, 북한주민의 열악한 삶을 이해하며 '자유'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기회를 가졌다.


글램핑 전경


북한이탈주민 심층 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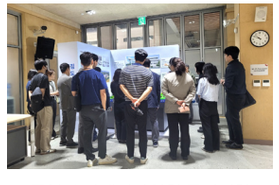


기념촬영

2020년 11월 판문점 견학지원센터가 개설되어 2023년까지 우리 국민 1만여 명이 판문점을 견학하였다. 2023년에는 7월 18일 주한미군 월북 사건으로 견학이 중단되기 전까지 3,754명이 판문점 견학에 참여하였다.

한편 9월 8일 판문점 견학지원센터의 소관이 남북회담본부에서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이관되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약 4개월여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기 위해 유엔사와의 협의를 지속한 끝에 11월에 특별견학을 우선적으로 재개하게 되었다. 11월 22일에는 통일부 정책고객이 참여하는 특별견학을 실시하여 우리 사회 내 통일·안보의식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일반시민 견학
(2.14, 자유의집)


통일부 자체평가위원 특별견학
(6.30, 임진각 견학안내소)


통일부 정책고객 특별견학
(11.22, 군정위회의실 앞)

하지만 이후 북측의 판문점 내에서의 무장 등으로 긴장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하여 11월 말 다시 견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해외초빙교수 사업은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교육을 추진하여 국내외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통일공감대와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2013년에 시작되었다. 해외의 역량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북한·통일 분야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적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3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에서 3명의 전문가가 국내 전문가 및 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23회의 특강과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총 790명이 참여하였다.

해외초빙교수 사업 운영 실적

구분	강사	기간	강의주제	참여자수
1차	미무라 미쯔히로 (日 니가타현립대학 동북아연구소 교수)	5.9.~18.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의 특징과 북한경제 실태 △일북 경제관계 등	9회, 288명
2차	데이비드 맥스웰 (美 아태전략센터 (CAPS) 부원장)	7.26.~8.3.	△한미동맹 과거, 현재, 미래 △정전협정 70주년: 국제 사회의 통일·대북 접근법	6회, 226명
3차	안나 카민스키 (獨 독재청산재단 사무처장)	9.19.~26.	△독일통일 교훈과 북한인권 △1945년 및 1990년 이후 독일 전환기 정의 함의	8회, 276명



제2차 해외초빙교수 중앙대 특강(8.3.)



제3차 해외초빙교수 (사)한백통일재단 특강(9.25.)

정부는 해외 신진학자 통일 아카데미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차세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문제의 실상을 설명하고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전달하였다.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동 프로그램에는 13개국에서 학자, 공무원, NGO 활동가 등 13명이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 인사, 주한 외국유학생, 해외 외국대학생,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총 9회의 단기 글로벌 통일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 285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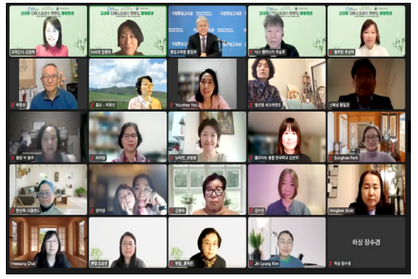
이러닝(E-learning)을 활용한 통일교육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공공과정, 교원과정, 2030과정, 시민과정, 방북교육과정, 경남교육청과정(2023년 2월 종료)의 6개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공공과정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통일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등 40여 개 과목 이상을 운영하였다. 교원과정에서는 '남북선생님과 함께하는 통일 TALK', '콘텐츠와 사례로 보는 통일교육 길라잡이', '음악선생님과 함께하는 통일



해외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 현장견학(7.19.)



주한 외국인유학생반(1.17.)



온라인 재외동포반(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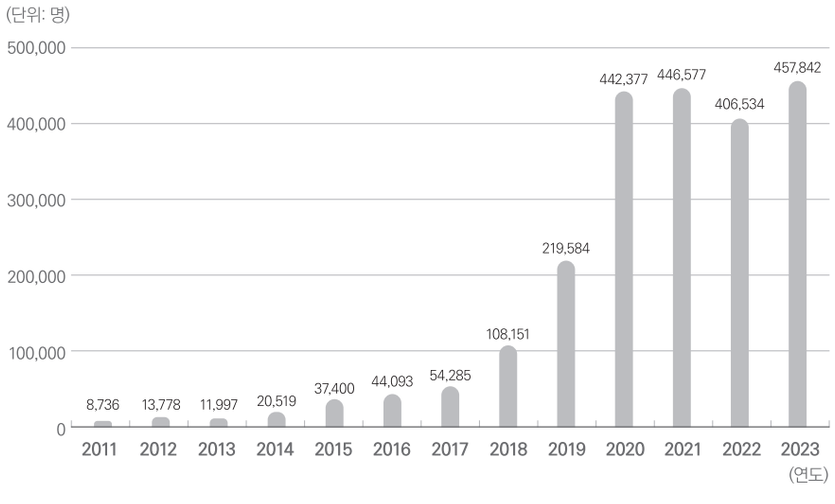
베트남 해외주요 인사반(10.24.~27.)

이야기' 등 학교 통일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소개하는 과목을 운영하였다. 2030과정과 시민과정은 하나의 주제를 담은 짧은 영상 형태로 북한, 통일, 국제정세, 인문교양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과목을 구성하였다. 방북교육과정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서, 방북 절차, 북한 방문 시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닝은 2020년 44만 2,377명, 2021년 44만 6,577명, 2022년 40만 6,534명이 이수한 데 이어 2023년에는 45만 7,842명이 이수하여 4년 연속 40만 명 이상의 이수인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2000년부터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이래 최초로 2023년에는 45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는 이러닝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과 품질관리, 모니터링 및 이수자 관리, 우수 교육생 현장체험, 온라인 이벤트 실시 등 이수인원의 양적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교육 운영에 초점을 둔 결과이다.

한편 정부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통일 관심 유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참여·체험형 콘텐츠를 제작

연도별 이러닝 통일교육 이수 현황



하였다. 2023년에는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이산가족을 주제로 메타버스 게임을 개발하였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이산가족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고향을 메타버스 공간에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재현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의 이산가족이 실제로 갈 수 없어 생각 속에만 있던 고향을 가상공간에서나마 가볼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분단 및 6·25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문제를 가상현실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2년에 개발한 메타버스 콘텐츠인 '통일 한반도, 또 하나의 세계'를 활용하여 2023년 통일교육주간에 어린이·중학생 기자단이 참가한 메타버스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진대회를 통해 참가 학생들이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통일 한반도 자유여행을 체험하고, 북한 지역 주요 도시에 대한 역사·지리적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북한 사회 및 주민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23년 통일교육주간 계기, 메타버스 경진대회



본선 진행



결선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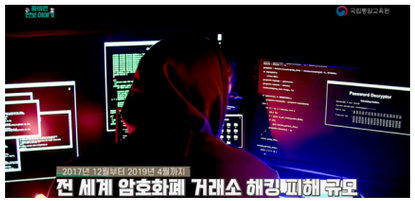
정부는 이러닝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교육생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이러닝 수강과 연계한 다양한 통일교육 홍보 이벤트 및 우수교육생 현장체험 기회 제공,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러닝 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또한 '스마트러닝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이러닝 교육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과 함께,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북한인권,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문제 등의 내용을 확산시켰다. 북한이탈주민 자서전 및 소설, 이산가족을 주제로 한 그림동화 등의 도서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 책방」, 미술·조형물로 분단과 통일을 표현한 예술인들과 소통하는 「국립통일미술관」, 이산가족·북한 도발 유형·북한 사이버 범죄를 내용으로 한 교육 콘텐츠 등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확산시켰다. 또한 인기 웹툰작가와 협업하여 북한 장애인, KAL기 납북 사건, 자유의 다리 등을 주제로 웹툰을 제작하였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X(구 트위터)·



통일교육 뉴미디어 영상
「통일 책방」, 「함께 읽는 통일」



통일교육 뉴미디어 영상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통일교육 웹툰 「포대기로 건넌 압록강」



통일교육 웹툰 「이산가족」

카카오톡 등 5개 뉴미디어 채널을 운영하였으며 영상 45편, 숏폼 영상 22편, 웹툰 16편 등을 제작하여 공개하였다. 국립통일교육원의 5개 뉴미디어 채널 총 구독자 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6만 1,005명이었으며, 유튜브 콘텐츠의 총 조회 수는 16만 1,906회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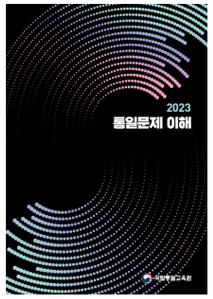
3 통일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통일문제와 북한의 실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도서·영상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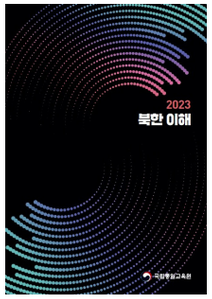
국립통일교육원은 1972년부터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해 오고 있다. 2023년에도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기본교재 2종을 3만 부씩 발간하여 전국의 초·중·고 일선학교와 대학교, 공공도서관, 통일교육 단체 등 1만 4천여 개 기관에 배부하여 기본교재 또는 참고 도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및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국제 사회 지지 제고를 위해 기본교재 2종을 영문판으로 발간하여 국내외 한반도문제 연구소, 주한 외국 공관, 해외 공관 등에 배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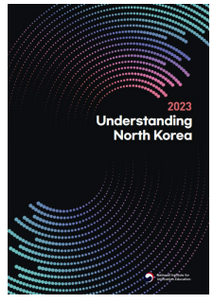
2030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도서 『전선에서의 증언: 외교 현장에서 본 북한인권』(8월)과 『우주에서 본 한반도』(12월) 등 일반도서 2종과 대북·통일 전문가의 통일특강 도서 『미래세대 통일 특강』(12월) 등을 제작하였다. 또한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통일 그림동화 『똑똑!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12월), 초등학생용 보드게임 「통일한국 시간여행」(12월), 재외동포 아동용 『통일아 안녕』(영문판, 12월) 등을 제작하여 통일교육 콘텐츠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2023년 개발 주요 통일교육 도서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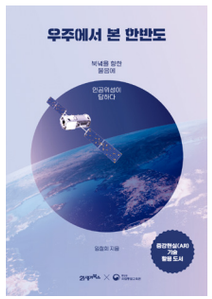


기본교재(『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기본교재 영문판



『우주에서 본 한반도』



『똑똑!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통일한국 시간여행」

2023년 개발 도서자료 현황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기본 교재	『통일문제 이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 △남북관계의 전개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환경 △통일방안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과제	대학생, 일반성인 등
	『북한 이해』	△북한 이해의 관점 △정치체제와 통치이념 △대외정책 및 관계 △군사전략과 군사력 △경제 현황과 변화 △교육과 문화 △사회와 주민생활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영문판(2종)	국문 기본교재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영문 번역 도서	재외동포, 외국인
학교 통일 교육	『똑똑!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통일 그림동화)	남과 북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 :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동물이 은혜를 갚는다는 남북한의 정다운 옛 이야기	유아 초등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학교 통일 교육	「통일한국 시간여행」 (보드게임)	한반도 지형의 보드판 위에서 각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특성을 퀴즈로 풀면서 통일 한반도를 염원	초등
	『통일아 안녕』 영문판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	재외동포
통일 교육 참고 도서	『미래세대 통일 특강』 (통일특강)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학자, 외교관, 전·현직 관료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제시	대학생, 일반성인 등
	『전선에서의 증언 : 외교현장에서 본 북한인권』	외교 현장에서 접한 북한인권에 관한 유엔, 유럽연합, 미국 등의 국제적인 시각과 평가	
	『우주에서 본 한반도』	한반도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하여 북한의 사회, 환경, 군사·정치에 대한 정보 전달	

더 많은 국민들이 쉽게 통일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TV 방송사와 유튜브 채널 협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방영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였다. EBS 클래스e 「통일을 바라보는 4가지 시선」(5.22.~5.25, 통일교육주간 방영)에서는 통일미래·북한실상·북한인권·국제정세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강연 형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이산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도서 만화 「내 어머니 이야기」를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학생은 물론 전 연령대 국민들이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감해 보는 영상 콘텐츠를 보급(12월)하였다. MZ세대를 대상으로 통일·안보교육 캐릭터(대한, 수율)를 개발하고 「안보, 힘에 의한 평화」와 「북핵 개발 자금 원천은 암호화폐 해킹」이라는 주제로 관련 영상 2종을 제작(11월)하였다.

이외에도 초·중·고 교과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클립 영상」(3~10분 분량)과 교사용 활용 가이드 자료(PDF)를 개발해오고 있다. 동 자료를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과 유튜브, 교사용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에 게재하여 일선 학교 교사들이 현장에서 쉽게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 시작한 증강현실(AR) 활용 도덕 교과 통일교육 교재에 이어 2023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가상현실(VR) 기술을

2023년 개발 주요 통일교육 영상 콘텐츠



「통일을 바라보는 4가지 시선」
('왜 세습체제가 문제인가')



「통일을 바라보는 4가지 시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 힘에 의한 평화」



「북핵 개발자금 원천은 암호화폐 해킹」





「내 어머니 이야기」 애니메이션



통일·안보교육 캐릭터(대한, 수율)

2023년 개발 영상자료 현황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TV	「통일을 바라보는 4가지 시선」 (EBS 클래스)	통일교육주간(5.22.~5.25.) 계기로 통일미래·북한실상·북한인권·국제정세 등 통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제공	전 국민
애니메이션	내 어머니 이야기	1927년생 어머니가 겪은 일제강점기, 6·25전쟁, 분단의 현대사를 통한 이산가족의 평범하고도 특별한 이야기	전 국민
공공영상	북한의 이해	△북한의 정치체제 △북한 경제 상황 △북한의 대남 전략과 대외 전략의 변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성인 등
	국제정세	△글로벌 국제질서 변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한반도 문제와 통일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 대담	
유튜브	북한인권 그게 정확히 뭔데? (윤설미TV)	북한이탈주민 유튜버가 북한에서 실제로 겪은 북한인권의 현실, 북한주민 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명	전 국민
	자유 없는 북한 민주주의 실상 (윤설미TV)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실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환기	전 국민
클립영상	과학으로 보는 통일미래 등 5편	△통일미래 △핵·미사일 △연평해전 등 서해 도발 △천안함 폭침 등	전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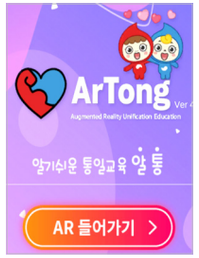
활용한 에듀테크 콘텐츠를 제작하여 통일교육 몰입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증강현실(AR) 콘텐츠로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수업용 교보재 3종(「한반도 통일기행 지도」, 「북한인권 교보재」, 「교과통합 교보재」) 및 「알통」 앱을 개발하고 교재에 포함된 시청각 자료 등을 「알통」 앱을 통해 구동하도록 제작하였다. 「한반도 통일기행 지도」는 통일 역사와 관련된 강화도와 파주 지역 현장의 실제 모습 및 정보 등을 담았고, 「북한인권 교보재(인권 어디까지 알고 있니?)」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영상들을 탑재하였으며, 「교과통합 교보재」는 중학교 과학 교과 속에서 통일과 북한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동 자료들은 통일교육주간 개막식(5.22.), 통일문화행사(5.26.~5.27, 광화문 광장) 등 여러 계기에 시연·배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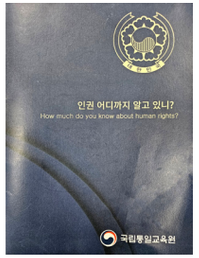
혼합현실(MR) 콘텐츠는 터치인식, 동작인식 등의 기술을 적용한 체험형 게임으로 제작하였다. 상반기에는 통일미래를 주제로 한 「통일기차여행 : 서울역에서 런던역까지!」 게임을 제작하고,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통일문화행사, 학교현장에서 체험존을 시범운영했으며, 약 1,000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한반도 그린데탕트를 주제로 한 「숲퐁! 어드벤처」 게임을 제작하고 총 27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 시연을 2회 진행하였다.

가상현실(VR) 콘텐츠는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HMD) 장비를 착용하고

2023년 개발 통일교육 주요 에듀테크 콘텐츠



「알통」 앱





북한인권 AR 교보재





한반도 통일기행 AR지도





교과통합 AR 교보재





통일 기차 여행 MR 콘텐츠

2023년 개발 에듀테크 자료 현황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증강현실 (AR)	한반도 통일기행 AR지도	통일역사와 관련된 강화도, 파주 지역의 역사현장을 AR 앱을 활용하여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	중고등학생
	AR 북한인권 교보재 (인권,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인권정의 △국제사회 시선으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 알아보기(구금시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호상비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의 노력	중고등학생
	교과통합(도덕-과학) AR 교보재	중학교 과학교과 내용(생물, 화산, 환경)에 통일교육 주제 접목, AR「알통」앱을 통해 시청각 학습자료 구동	중학교 교사·학생
가상현실 (VR)	「밝혀진 오늘의 북한 (도로편)」	자동차를 운전하며 낙후된 북한 도로 상태를 체험하고, 통일 한국의 도로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해서 상상	아동·청소년
	「밝혀진 오늘의 북한 (주택편)」	드론을 조정하며 북한 주택의 열악한 현실을 파악하고, 통일 한국의 주택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해서 상상	아동·청소년
	「북한의 하루」	북한의 청소년이 되어 고단한 일상을 눈과 귀로 체험하고 인권 침해 상황을 경험	아동·청소년
혼합현실 (MR)	「한반도-유라시아 통일여행」(게임)	MR 기술을 활용한 유아, 초등학생 대상의 체험·실감형 통일 교육 콘텐츠(터치인식 방식)	어린이
	「숲퐁 어드벤처」(게임)	한반도 그린데탕트에 대한 게임 형태의 콘텐츠 (동작인식 방식)	

가상현실 속에서 북한의 실상(도로, 주택)과 통일미래, 인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전국 10개 초·중학교 학생 1,600명을 대상으로 동 콘텐츠를 활용한 「찾아가는 VR 통일교육」을 실시(12월)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현실감 있는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통일교육주간에 일선학교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년 수준별(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등용, 고등용, 일반·공공용) 「통일교육 표준강의안」 등을 개발하여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uniedu.go.kr)에 게시하여 다수의 다운로드 및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

4 「제11회 통일교육주간」 운영을 통한 국민 공감대 확산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미래세대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미래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다수 기획하고, 온·오프라인 연계방식으로 진행(5.22.~28.)하였다.

「제11회 통일교육주간」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휘호, 「자유 평화 통일」을 전수받아 정부의 통일 철학 및 가치를 부각하였다. 개막행사는 '자유로운 상상, 평화통일 바람'을 슬로건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통일교육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유튜브로 중계하였다. 특히 새로운 미래세대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글램핑 토크쇼」, 「한반도 메타버스 경진대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학술회의와 50초 숏츠 영화제 시사회를 열고, 에듀테크 통일교육 콘텐츠 체험부스도 운영하였다.

정부는 통일교육주간 전용 누리집(5.1.~6.30, 8주간)을 통해 학습강의안, 클립 영상 등을 제공하고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10만여 명이 방문하였다.

통일교육주간 계기로 통일부 장관, 차관, 국립통일교육원장이 직접 일일 통일교사로 나서 학생들과 소통하였고, 통일교육 선도대학과 통일교육 연구학교는 통일교육주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9개교는 북한알기 퀴즈대회, 국내 현장체험 학습, 통일박람회, 대학생 통일세미나 등 다양한 대학생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 연구학교는 지역 유관기관 연계 및 교과 연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주간을 전·후로 자체 통일교육주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


대통령 휘호 제막식



통일부장관 기념사



대통령 휘호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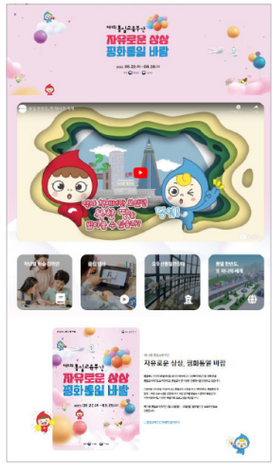
메타버스 경진대회



숏츠 영화제 감독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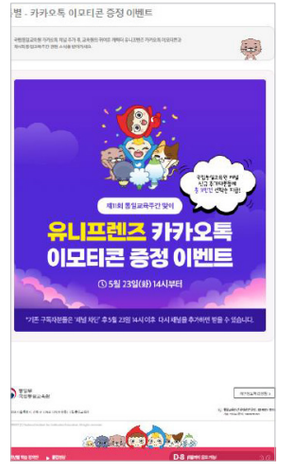
AR·MR 통일교육 콘텐츠 체험부스



누리집 메인 화면



참여 이벤트



이모티콘 증정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다.

전국 10개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는 통일교육주간에 맞춰 광화문광장 통일문화축제, 경인지역 남북작가 특별전, 충북 평화통일문학축제, 전북지역 대학생 평화통일박람회, 강원 동해안 통일걷기대회, 제주지역 청소년 통일염원 한마당 축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일교육을 추진하였고,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지역통일관은 북한인권 전시회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서울통일교육센터와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통일공감 평화통일 축제를 개최하고, 통일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서울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5 통일교육연구센터 활동 강화

정부는 통일교육 연구 기능 활성화를 통한 통일교육 방향성 정립 및 장기적인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해 국립통일교육원 내에 원내교수(센터장 1명, 분과장 3명) 중심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연구센터(이하 센터)를 2020년 12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23년에 통일교육 관련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대내외 협업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등 연계 학술행사 개최, 저널 『통일과 담론』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미래세대의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을 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미래세대를 위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내용체계」, 「북한이탈주민 활용 통일교육 실태와 발전방안」)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친화적인 인공지능(AI) 기반의 효과적·창의적인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과 이의 지속적인 확산·발전을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AI시대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구축방안」)를 진행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와 공동으로 협업연구를 추진하였다.

센터는 학술교류 및 연구성과 공유를 위해 관련 학계·교육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상·하반기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5월에는 「제11회 통일교육주간」과 연계하여 '글로벌 질서 재편과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을 주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 동향과 자유민주주의, 그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의 방향 및 내용 등에 대한 학술회의를 진행(5.24.)하였다. 7월에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여 정전협정의 법·제도적,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전협정 70주년 :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하반기 학술행사를 개최(7.28.)하였다.

한편 센터는 통일, 남북관계 등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저널 『통일과 담론』 상·하반기호(5월, 12월)를 발간하였다. 저널에는 정전협정 70주년(5월), 북한인권(12월) 관련 주제의 '특집기획', 해외 전문가의 국제정세 관련 이해와 분석을 담은 '글로벌 인사이트', '일반논문'과 '이슈·리뷰' 등 학계와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담론과 연구들이 폭넓게 담겼다.



「제11회 통일교육주간」 계기 상반기 학술행사(5.24.)


정전협정 70주년 계기 하반기 학술행사(7.28.)

제2절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1 참여·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

정부는 2023년에는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사업을 통해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1,528회 강의를 실시하고 5만 7,919명의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전문 강사들이 개별학교를 방문하여 놀이와 문화를 접목한 교구재 등을 활용한 참여형·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별 수요와 자율성을 반영한 체험형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통일 체험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총 254회 운영하여 체험교육 경비를 지원하였다. 특히 2023년은 수능시험 후 자기계발 시기에 있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최초로 추진하였으며, 총 4회 68명이 참여하였다.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어린이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을 통일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6.15, 서울 은로초)



학교통일 체험교육(11.22, 순천 제일고)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제12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133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어린이 기자단은 발대식(5.22.)을 시작으로 월별 기사 작성, 통일 관련 견학, 여름캠프, 합창단 및 방송반 운영 등 통일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을 매개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10회 청소년 평화통일 문화 경연대회」도 개최하였다. 2023년에는 「어린이 창작 통일동요제」(9.22.), 「50초 평화통일 숏츠 영화제」(5.26.) 등 2개 부문으로 운영하였다. 「어린이 창작 통일동요제」에는 118곡이 응모하여 9곡을, 「50초 평화통일 숏츠 영화제」에는 241편이 응모하여 18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어린이 기자단' 여름캠프(8.10.~11.)



「어린이 창작 통일동요제」 경연대회(9.22.)

2 학교통일교육 모범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 향상

학교통일교육의 지역 거점학교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 통일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전국 32개의 초·중·고교를 '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로 지정하고, 학교별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신규로 지정한 학교에 대한 컨설팅 실시, 통일교육 학습콘텐츠 및 자료 지원 등 연구학교 운영 지원에 노력하였다.

또한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우수 지도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제11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를 개최(11.17.)하였다. 전국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30편이 출품되어 6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2023년 대회에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작품이 다수 출품되었으며, 학생 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통일감수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장학사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와 함께하는 「학교통일교육 발전워크숍」을 총 3회 개최하여 학교통일교육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고 각급 학교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통일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와 학교 통일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 현장견학(6.15.~16, 태인고)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발표심사(11.17.)

3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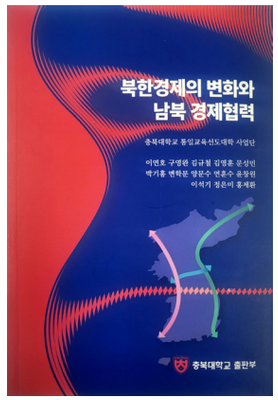
국립통일교육원은 대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대학(원)생 통일논문·홍보영상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주요 권역별로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육성하여 대학 통일교육의 우수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6개 대학(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 경남대, 광주교대)으로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수도권 4개교(경기대, 대진대, 국민대, 이화여대), 비수도권 4개교(충북대, 전북대, 강릉원주대, 동아대), 교육대학 1개교(서울교대) 등 총 9개 선도대학을 운영하였다.

선도대학들은 전공개설, 교양필수 도입, 교양·전공 교과목 운영, 교재 개발 등 대학 통일교육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교과 이외에도 각종 공모전과 토론대회 등 다양한 참여·체험형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교재 개발(국민대)



교양과목 개설 및 교재 개발 (충북대)



제9회 전국대학생 통일 토론대회 (동아대)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사업은 대학생의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통일·북한 관련 특강 및 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29개 대학에 45개 사업(통일특강 17개, 통일강좌 28개)을 실시하여 약 7천백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참여 대학 간 연합학술회의 등을 통해 대학 통일교육 정보공유 및 확산에 노력하였다.

통일·북한문제 관심 제고와 대학생·대학원생의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논문·홍보영상 공모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2023년 「제42회 대학(원)생

통일 논문 및 홍보영상 공모」에는 논문 15편, 홍보영상 9편의 응모작이 접수되어 논문 4편, 홍보영상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12.8.)되었다. 논문 수상작은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학술회의(12.21.)



통일교육 대학연합 학술회의(7.11.~12.)

제3절 지역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1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한 통일교육 실시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3에 따라 2004년부터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국 10개 권역(서울·경인·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제주)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지정기간: 2022.3.~2024.2.)

권 역	센터명	지정 기관
서울	서울통일교육센터	총신대학교
경인(경기, 인천)	경인통일교육센터	아주대학교
경남(부산, 울산, 경남)	경남통일교육센터	경남대학교
경북(대구, 경북)	경북통일교육센터	대구대학교
전남(광주, 전남)	전남통일교육센터	동신대학교
전북	전북통일교육센터	전북겨레하나
충남(대전, 세종, 충남)	충남통일교육센터	단국대학교
충북	충북통일교육센터	서원대학교
강원	강원통일교육센터	한라대학교
제주	제주통일교육센터	제주대학교

2023년 각 지역통일교육센터는 권역 내 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교육 연구학교, 지역 통일관, 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인 「지역통일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출범시키는 등 통일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여 통일교육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방향하에 기본·특화·연합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통일문제 이해, 북한인권 개선, 건전한 안보관 정립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본사업'으로 열린통일강좌, 통일순회강좌, 통일 체험학습,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통일순회강좌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전문강사, 통일교육위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북한 주민의 삶과 북한인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정전 70년,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농어촌 소외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북작가특별전, 통일힐링스쿨 등 통일교육 모델을 개발한 '특화사업'을 진행하였고, 연합사업으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통일문화행사와 북한인권 등 북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주민들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한편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문제에 관심이 적은 초중고·대학생 등 통일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소통·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학생들이 스스로 기획·진행하게 하는 대학생평화통일 박람회와 통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리더십 스쿨 등 청년 세대 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2023년 한 해 동안 11만 2천 명의 지역주민들이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서울센터 「통일교육 서울협의회」 출범식(3.31.)



경북센터 「통일순회강좌」(6.15.)



충남센터 「다문화·북한이탈주민 통일힐링스쿨」(7.10.)



경남센터 「자유통일한마당 통일포럼」(10.6.)


전북센터 「대학생평화통일박람회」(5.25.)



충남센터 「백범통일리더십 스쿨」(5.25.)

아울러 정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점으로서 원활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지역통일교육 생태계 구축 지원, 통일교육 전문강사 풀(pool) 제공, 통일순회강좌 표준강의안 배포, 2030 청년강사 양성·명단 제공 등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였고,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 추진방향과 예산 집행 기준을 담은 센터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지역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

2 통일교육위원 역량과 통일·대북정책 홍보 강화

정부는 1987년부터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들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해 왔다. 제23기 통일교육위원 723명은 2022년에 위촉되어 임기 2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통일공감대 형성 및 통일교육 활성화 등 통일기반 조성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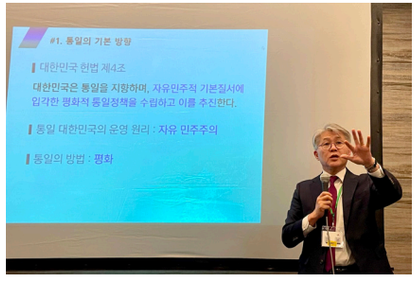
2023년에는 국내 통일교육위원들이 지역축제 현장에서 '통일교육위원이 알려주는 북한 이야기'를 주제로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통일부스를 운영(15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설명, 『북한인권보고서』 소개, 북한 전통놀이 체험, 통일 퀴즈 풀기, 통일 메시지 작성 등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해외 통일교육위원들이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인식 확산과 통일공공외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중국·독일 등 4개국 6개 해외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부스(11.10.)



해외 통일교육위원 연찬반 환영식(9.18.)



한국학교 교사 대상 통일교육(7.21.)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대상 통일교육(7.22.)

협의회 해외위원 26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4박 5일간(9.18.~22.) 국립통일교육원 원내교육 및 접경지역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재외동포, 한국교사, 해외위원 대상으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북한인권 등에 대한 통일교육도 진행(3회, 현지)하였다.

특히 통일교육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3차례의 온라인 명사특강을 실시(10.26, 11.15, 12.7.)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위원들이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 발간 도서와 자료, 뉴스레터 등을 제공하였고 해외위원이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에서 이러닝통일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2000년에 설립된 민간 통일교육 단체들의 협의체로 2023년 말 기준 72개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정부는 20개 회원단체의 통일교육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동 협의회는 2023년 제5회 대학생 기자단 통일안보기사 경진대회, 회원단체 실무자 통일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청소년·시민 분과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하여 「제8회 통일공감 평화통일 축제」(5.22.~28.)를 개최하는 등 회원단체 간 연대사업도 실시하였다.

3 통일관 운영 활성화

통일관은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북한·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일교육·전시 공간으로서 전국에 12개 통일관이 운영 중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통일부에서 설치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 통일관은 민간·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국 통일관 현황

통일관명	위치	운영 주체
오두산 통일전망대	경기도 파주시	통일부
서울 통일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부산 통일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총연맹 부산지부
인천 통일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유총연맹 인천지부
광주 통일관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위탁: (사)우리민족)
대전 통일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관광공사
고성 통일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양구 통일관	강원도 양구군	양구군
청주 통일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충남 통일관	충청남도 공주시	자유총연맹 충남지부
경남 통일관	경상남도 창원시	자유총연맹 경남지부
제주 통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유총연맹 제주지부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통일 문제를 주제로 패널 및 체험형 콘텐츠 등을 전시하여 전망대를 방문한 국민들에게 다양한 통일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등 통일교육 현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통일비전 설명과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이미지화 패널로 제작하여 전시하였으며, '풍선아트', '통일가훈 써주기', 북한인권 영상 상영 등 상·하반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외부 활동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고령자를 초청하여 위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1992년 개관 이래 유료로 운영해 왔으나, 통일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전국 12개 통일관에 통일정책·남북관계·북한 실상 관련 다양한 전시



상설전시(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상설전시(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하반기 기획전시(2023.9.~2024.2.)



경기도 파주 탄현면 어르신 초청 위로 행사(11.29.)

자료와 체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작가의 삽화를 담은 북한인권 실태 홍보 전시를 개최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또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보이는 북한 전경을 통일관에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경 지역이 아니라도 북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더불어 충남 통일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통일교육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통일관에서 상·하반기 체험프로그램으로 '안보통일 4행시 공모전', '찾아가는 통일관', '통일 염원 석고방향제·핀버튼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학교 단위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였다. 2023년 통일관 관람객은 2022년 126만여 명에 비해 5만여 명이 증가한 약 13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북한인권 실태 홍보 전시회



리모델링한 충남 통일관 모습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6월~11월, 35회)

4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14일 시행되면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대상 통일교육이 의무화되었다. 동 법률에 따라 교육대상 기관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에게 매년 1회(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기관의 준비를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통일교육이 실시되었다.

정부는 교육대상 기관들이 통일교육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사이버 교육과정 제공, 전문강사 명단 제공, 교육용 도서·영상 자료 등 콘텐츠 제공, 공공부문 통일교육 누리집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5년이 되면서 교육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공부문에 대한 통일교육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통일교육 이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통일교육 의무화 대상 약 122만 명 중 108만 명(약 89%)이 이수하여 최초로 100만 명에 달하였다.

2023년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가 선정되었다. 17개 광역지자체는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통일공감대 확산 행사 개최, 통일공감대 확산 단체에 대한 지원·협력 사업을 이행함으로써 지역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꾀하였다.

5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정부는 2030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3년에는 청년들의 문화예술 취향을 고려하여 흥미, 소통,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2030 자유통일 문예클래스」(글쓰기·음악, 8~9월), 「2030 자유통일광장」(10.6.)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문예클래스」는 젊은 세대들이 자유통일에 대해 글을 써보는 글쓰기 클래스와 작사·작곡과 보컬을 체험해보는 음악 클래스로 구성하였다. 글쓰기 클래스에서는 국립통일교육원장과 북한이탈주민 인권활동가의 인사이트 강의를 시작으로 이지성·정여울 베스트셀러 작가와 함께하는 글쓰기 실습이 총 4회 진행되었다. 음악클래스에서는 국립통일교육원장과 북한이탈주민 피아니스트의 인사이트 강의와 음악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자유통일 가사 창작, 통일 주제곡 발성과 보컬 등 강의가 총 4회 진행되었다.

이어서 문예클래스 참가자들이 만들어 낸 창작물을 청년 북한이탈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유통일광장」 발표행사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서는 문예클래스 참가자 소감 발표, 베스트 글귀 및 악보 전시, 음악클래스 참가팀 공연, 북한이탈주민이 꿈꾸는 통일 토크, 청년들과 통일부차관과의 통일대화를 진행하여 통일 미래세대인 2030 청년들과 자유통일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문예클래스에서 창작한 글을 엮은 문집을 참가자들에게 배부하여 문예클래스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글쓰기 클래스
(8.21, 채그로 북카페)



음악 클래스
(8.31, SAMS 실용음악학원)



자유통일광장
(10.6, 언더스탠드 에비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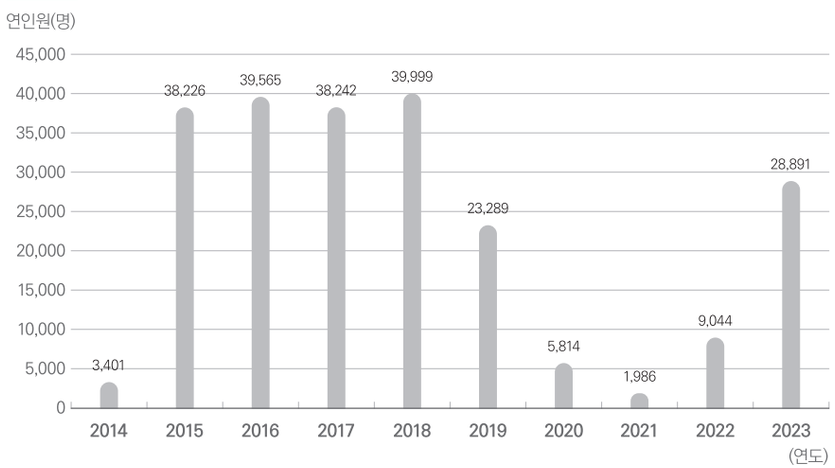
제4절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활동 현황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센터)는 국내 유일의 정부 직영 통일체험연수 기관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 입소형 연수를 비롯하여 비대면 연수, 각종 행사 계기 통일미래체험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여간 중단되었던 센터 입소형 체험연수가 2023년에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통일체험연수 연인원 현황



교육대상 발굴 및 맞춤형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는 한편 센터와 연천군이 「제1회 연천 통일미래 체험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하여, 센터 시설과 통일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개방하였다. 또한 2022년에 이어 청소년 대상 '비대면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접경지역 및 도서벽지 거주 청소년들에게 통일체험연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3년 통일체험연수 연인원은 118개 학교·단체의 2만 8,891명이다.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후 2023년 12월까지 총 1,065개 학교·단체, 누적 연인원 22만 8,457명을 대상으로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였다.

한편 체험연수 본격 재개 및 센터 개관 9주년을 계기로, 향후 10년간의 통일체험연수 운영 및 센터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직원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센터 슬로건, 비전, 미션을 새로이 정립하고, 상징물도 개선하였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슬로건·비전·미션

슬로건	비 전	미 션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 그 꿈을 키워가는 곳	통일 미래세대 양성과 소통·공감·화합의 가치실현	1. 분단현실과 북한실상에 대한 인식 제고 2.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상징물



■ : 자유 ■ : 평화 ■ : 통일 ■ : 희망

- 네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바람개비
-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희망이 바람처럼 일어나는 것을 형상화

2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센터의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은 전국의 초·중·고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일반 연수'와 북한이탈주민, 소외계층, 재외동포, 외국 청소년을 비롯하여 일반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1) 청소년 대상 일반 연수 프로그램

2023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21회, 약 3,600여 명이 참여하는 '일반 연수'를 진행하였다. '일반 연수'는 전국 초·중·고 대상 사전조사·신청을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다. '일반 연수'는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인증한 표준 프로그램(14개 단위 프로그램)



도전! 통일 골든벨(인천제일고, 5.4.)



통일 탐정사무소(오성중, 5.9.)



통일 ON(방이중, 6.7.)



뭉쳐야 뜬다(우산초, 6.29.)

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표준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개관 이후 3회('16년, '18년, '20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통일체험연수 단위프로그램(14개)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대상	주요 내용
1	여는 마당	공통	입소식, 생활·프로그램·시설 안내, 안전사고(화재, 지진, 유해 곤충 등) 예방교육, (성)폭력예방 교육 등
2	통일로 가는 길	초·중	분단 현실, 북한 실상, 남북관계 등을 이해하고, 통일나무를 키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통일 ON	중·고	퍼즐게임 방식을 활용하여 분단의 역사적 배경, 북한실상, 남북관계 등 통일 필요성 이해를 위한 기본 지식을 학습
4	통일미래체험	공통	KTX 통일호를 타고, 통일 7년 후 통일한국의 문화·관광·물류·자원 등 다양한 영역을 가상기기를 통하여 체험
5	나는 캐릭터 디자이너	초	통일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물(캐릭터)을 미니블록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
6	유니빌리지	초	통일시대의 건축물과 마을을 카프라 블록을 활용하여 제작, 이를 통해 통일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7	통(通) 엔터테인먼트	공통	통일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변화를 상상해보고, 이를 방송을 통해 제작하여 통일시대를 준비
8	통일 탐정사무소	중·고	추리활동을 통해 통일, 북한 관련 지식을 익히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
9	도전! 통일 골든벨	공통	분단, 북한의 분야별 실상, 남북관계, 통일편익 등을 주제로 한 퀴즈를 통해 통일 관련 지식을 습득
10	톡톡톡 통일세대	공통	북한이탈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실감나게 이해하고, 통일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11	통일달력 만들기	중·고	남북한의 기념일 차이를 알아보고, 통일 이후 의미 있는 기념일 지정을 통해 통일 상상력 제고
12	뭉쳐야 뜬다 -통일탐사단	공통	남북한 도시의 지리적 특징과 문화적 배경 등의 다양한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주제로 통일 이후 여행계획을 수립
13	그곳을 가다	공통	오두산통일전망대, 태풍전망대 등 통일·안보현장 방문을 통해 분단 현실을 이해
14	맺는 마당	공통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일체험연수 전체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평가

또한 센터의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 전문연수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국 청소년 지도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 지도자 대상으로 총 3차례의 통일체험연수 지도자 전문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16개 초등학교, 총 908명을 대상으로 센터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인 '통일로 가는 길' 체험키트 및 수업 지도 영상을 제공하였다.

(2) 특화 연수 프로그램

2023년에는 통일체험연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대,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연수'를 확대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체험연수(11.15.~17.)를 진행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가족 힐링 캠프를 개최(8.1.~2.)하였다. 또한, 지역 공무원·군인



북한이탈주민 가족 힐링 캠프(8.1.~2.)



군장병 연수(28사단, 12.14.)



국가간 청소년 교류(오스트리아, 9.20.)



비대면 연수(대청초, 5.30.)

대상 체험연수도 총 12회 실시하였다. 「국가간 청소년 교류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10개국 국외 청소년 186명을 대상으로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였다. 해외대학 연계 사업으로는 미국 머서대 대학생과 교수 등 자원봉사자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인 우리들학교에 재학 중인 30명을 대상으로 창의공학·영어캠프를 진행(5.30.~6.1.)하였다.

청소년 대상 비대면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인지역 도서벽지·접경지역 6개 초등학교 137명 및 사회적 배려계층 가족 1,5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2023년에는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한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근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협업을 통한 접경지역 청소년과 주민의 통일인식 제고에 노력하였다.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센터와 연천군은 센터 개관 9주년 기념행사와 연천군 제7회 통일평생교육 박람회를 통합하여, 「제1회 연천 통일미래 체험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하였다.

「제1회 연천 통일미래 체험 페스티벌」에서는 통일미래체험관 견학, 통일교육 체험부스, 동아리 활동 발표회, 남북음식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청소년 및 지역주민 등 총 3,8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8월 8일부터 12일까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멕시코 대표단 326명을 대상으로 통일체험연수도 실시하였다.

(3) 연수 인프라 개선

2023년에는 통일체험연수 전문기관으로서 효과적이고 쾌적한 통일체험연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센터 통일미래체험관 시설



통일미래체험 페스티벌(11.3.~4.) 개회식


통일미래체험 페스티벌 '통일 캐릭터 만들기' 체험(1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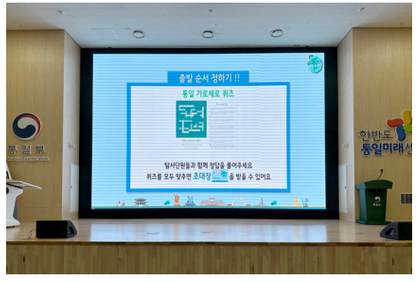


잼버리 멕시코 대표단 현장견학(철원 평화전망대, 8.9.)



잼버리 멕시코 대표단 센터 내 문화 공연(8.10.)


미래체험관 로비 시설 개선



대강당 대형 LED 설치



야외 전시 홍보물(통일·대북정책)


야외 전시 홍보물(북한인권 실상)

개선 및 대강당 대형 LED 설치 등을 통해 효과적인 통일체험연수 진행 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야외 전시장 구조물을 설치하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북한인권 실상 등 홍보물을 게시하였다.



06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제1절 | 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질서있게 정비

제2절 | 남북 협력기반 재정비

제3절 |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제4절 | 대북협상 역량 강화











제6장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북한은 2019년 2월 미북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대화뿐만 아니라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비협조와 거부로 일관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7일에는 남북 당국 간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3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질서 있게 관리하는 한편, 남북 대화·교류협력 관련 국내 기반 조성 등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하였다.

정부는 남북 간 연락채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하에 북한의 무응답에도 남북 간 합의에 따라 매일 2차례 정기적으로 통화를 시도하며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남북대화 재개 상황에 대비하여 분야별 회담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남북 회담사료를 2차례 공개하여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정비하였다.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 규정」을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교류협력 관련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 등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남북협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종교·체육·학술·문화예술 분야 민간단체,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사회문화교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경제교류 분야에서는 남북 간 경제협력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경협 기반을 유지하고 주요 경협 사업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관련 국제포럼」,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경협 기업·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맞춤형·재도약 지원금 지급, 판로 개척 등의 지원도 병행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우리측 재산권 침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단호히 대응하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사용·금강산관광지구 우리 시설 철거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 성명 등을 통해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였다.

제1절 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질서있게 정비

1 법·제도 정비

정부는 2023년 한 해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있는 남북교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각의 위법 사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이에 따라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회의체를 운영하고 규정을 정비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있다고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처분을 시행하였다. 2019년 이후 4년 만인 2023년 3월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재개하고, 12월 말까지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6건을 부과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을 제정(9.8.)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제28조의2(과태료)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제화하였다. 훈령의 주요 내용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과태료 부과 가능 사유를 추가하고, 법 위반 전력자에 대해 일정기간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10.19.~11.29.)를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의원 발의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지원하였고, 법률·정책전문가,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류협력 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교류협력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였다. 국민들에게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내용을 알리고, 법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8월 17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동 위반신고센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상담, 절차안내, 위반신고 접수 및 회신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2 중앙-지자체 교류협력 협의·조정 내실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주요한 협력대상인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9월 1일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자체 교류협력이 책임성을 바탕으로 질서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조치계획을 협의하였다. 우선 지자체 교류협력사업 사전·사후 협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통일부 예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을 정책협의회에 제출하고, 매 분기별로 사업 추진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2021년에

실시한 지자체 대상 '협력사업 사전 승인제'는 그간 사업 실적과 향후 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12월 유효기간 만료 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6.8.~9.)하여 통일·대북정책 추진 전반에 걸쳐 중앙-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6.8.~9.)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9.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회차	일자	방식	회의 안건
제328차	1.19.	서면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위한 기금 지원(안)
			2023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 기금 지원(안)
			2023년 「DMZ 통합시스템 관리 운영」을 위한 기금 지원(안)
			2023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안)
			2023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기금 지원(안)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
			2023년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기금 지원(안)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개선」을 위한 기금 지원(안)
			2023년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기금 지원(안)
제329차	2.27.	서면	2022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
제330차	3.15.	서면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한편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3회 개최하여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위한 기금 지원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3 교류협력 안내 서비스 강화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각종 민원신청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다. 2023년에는 민원 안내 카카오톡 채널을 도입하여 민원인과의 소통 채널을 확장하고, 대북 반출입 물자 UN제재 사전검토 절차를 시스템 내에 구축하여 수요자가 제재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실무절차 상담(1,041건), 남북 간 교역·경협 관련 컨설팅(3회)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11.7, 11.27.)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질서있는 남북교류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11.23.)하여 남북교류 관련 법률 위반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대북제재 톺아보기』, 『우리 정부 대북 독자제재 현황 참고집』 등 대북제재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남북교류질서 설명회(11.7.)



질서있는 남북교류 방안 모색 세미나(11.23.)

'북한 바로알기 아카데미'(8.16, 8.23.), '청년 통일이해 아카데미'(11.1.~2.)를 개최하는 등 민간의 교류협력 역량 강화 노력도 전개하였다.

4 남북출입사무소 운영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출입경 중단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남북출입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를 위해 군·관세청·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원 및 차량심사, 검역, 남북관리구역 호송 등 모의훈련을 실시해왔다. 특히 2023년에는 출입경 매뉴얼 숙지, 전산장비 점검, 유관기관 연락망 현행화 등을 통해 출입경 재개에 대비하였다.

또한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4회) 및 실무협의회(4회)를 개최하고, 모의훈련 계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하였다.



동해선 차량심사 모의훈련(11.22.)



경의선 검역 모의훈련(12.7.)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20주년을 맞아 남북출입 20년의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인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을 11월 21일 개관하였다. 역사관에는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과정,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통한 출입 절차, 그리고 육로 개통을 위한 남북 간 합의문서 등 총 250점의 자료들을 전시하였다. 또한 관람객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 지역, 방문 목적 및 일자 등을 입력하여 방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접 체험공간도 마련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 개관식 행사(11.21.)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 내부 전시

남북출입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경의선)와 강원도 고성군(동해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통일전망대(도라·고성통일전망대), 제3땅굴(파주), DMZ 박물관(고성) 등 일반 국민들이 많이 찾는 관광시설이 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출입시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주요 인사, 청소년, 외국인 등 총 1만 2,005명(경의선 7,511명, 동해선 4,494명)이 방문하였다.

제2절 남북 협력기반 재정비

1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대응

북한은 2023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공장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였다. 개성공단 내 차량 및 인원 출입 움직임이 관측되고 야간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공장 안팎에 불빛이 켜져 있는 등 북한이 무단으로 우리 기업 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정부는 통일부 부대변인(2.17.)·대변인(12.8.) 명의 정부입장 발표, 통지문 발송(4.6.), 통일부장관 성명 발표(4.11.) 등을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이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경고하였다.

또한 북한은 2022년 3월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에 대한 무단 철거를 시작한 이후 2023년에도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관련시설에 대한 철거를 지속하였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 15주년(7.12.), 금강산관광 25주년(11.18.) 등 주요 계기 시 북한이 일방적 철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로 나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정부는 2023년 북한의 불법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 6월 14일 북한당국을 상대로 최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소송은 원고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피해액 447억 원(남북공동연락사무소 103억 원,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344억 원)에 대해 청구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재산권 침해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국가채권을 보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북한이 남북합의나 국제적 보편규범을 어기는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알게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조치였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배당되어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2 남북 경제교류의 추진 기반 조성

(1)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 기반 조성

정부는 2022년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상응한 남북 경제협력 추진 계획으로, 북한 비핵화 단계에 따른 호혜적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해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유관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분야별·단계별 추진개요를 마련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또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의 추진 필요성과 북한 경제의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 11월 1일 「담대한 구상 관련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북한 경제 대진단 :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 북한경제의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중장기적인 북한경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 공식 포스터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11.1.)

(2)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발의된 후 2023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13일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정부는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8.31.~9.11.), 입법예고(8.31.~10.10.), 법제처 심사(10.19.~11.28.), 공포(12.12.)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12월 14일 「평화경제특구법」이 시행되었다.

「평화경제특구법」의 주요 내용은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특구를 조성·운영하는 것이다. 법률과 시행령에서 특구대상지역, 지정 절차, 관련 지원,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였다.

특구 대상지역은 DMZ 남방한계선 또는 NLL 인접 시·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 15개 시·군으로 정하였다. 특구 지정·개발을 위해서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통일부), 개발계획 수립(시·도지사), 개발계획 승인 및 특구지정(통일부, 국토교통부), 개발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 승인(국토교통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구 지정 시,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세·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는 지역은 해당지역뿐 아니라 특구 입주기업과 연관된 국내 산업분야 및 기업들에도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업무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주요 경협사업 주체 관리

(1) 경협 기업·단체 관리

코로나19로 북한 및 중북 접경지역의 봉쇄상황이 이어지면서 2023년에도 민간 차원의 경협·교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경협·교역의 주체인 기업·단체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와 경협 중단


통일부장관-경협기업 단체 간담회(3.17.)


남북관계관리단장-경협기업인 단체 면담(5.1.)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지원하였다.

(2) 개성공단 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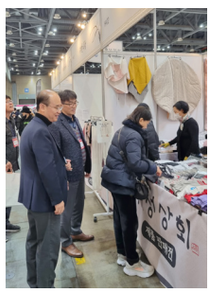
정부는 2023년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간 양극화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경영 현황을 조사하여 경영 애로 기업 대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입주기업의 혁신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모집공고를 통해 '위기기업 재도약 지원사업'으로 1개 사에 2천만 원, '맞춤형 기업 안정화 지원사업'에 36개사 3억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판로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2023 메가쇼」(소비재 박람회)에 1차(6개사), 2차(5개사) 참여를 지원하였다. 또한 기업지원 및 법·세무지원 분야 등 제반사항에 대해 입주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담을 지속해 오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간담회(2.10.)



「2023 제1차 메가쇼」
(6.15.~18.)


「2023 제2차 메가쇼」
(11.9.~12.)

제3절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1 문화유산 교류

(1)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은 민족공동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남북 주민 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 추진되었다. 이후 8차례의 남북공동발굴 성과를 활용하여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manwoldae.org) 운영, 디지털 복원,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 전시'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디지털 기록관은 2020년 12월에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으며, 3D 복원영상 등의 유구·유물자료 12만 건을 공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영상·웹툰 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된 4편의 수상작과 '월간 만월대'를 포함한 각종 콘텐츠를 기록관에 게시하였다.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은 고려 황궁의 모습을 3D 데이터로 복원하여 만월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서부건축군(1~6건물지군)에 대한 고증연구와 「개성 만월대 디지털복원 학술대회」(4.28.), 「개성 만월대學의 지평 학술대회」(9.8.)를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공유하였으며, 복원 설계된 건축물을 VR콘텐츠로 개발하여 순회 전시회에 활용하였다.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 전시」는 12년간의 남북공동발굴조사 성과를 전 국민

대상으로 관람·체험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진행한 전시사업이다. 2023년에는 전주 역사박물관(5.2.~7.23.), 국회 의원회관(5.22.~26.), 롯데월드 민속박물관(7.4.~12.3.), 2023 새만금 잼버리 델타존(8.2.~8.)에서 진행하였다. 관람객은 약 14만 명이었으며, 관람객 만족도는 98%에 달하였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영상·웹툰 공모전 포스터
(4.10.~10.29.)


개성 만월대 열두 해 발굴 특별전
(7.4.~12.3,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2)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사업회)는 남과 북,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겨레말'을 집대성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2005년에 결성되었다. 사업회는 그간 서울, 평양, 금강산, 중국(베이징, 다롄) 등에서 총 25회의 남북공동편찬회의(이하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할 30만 7천 개의 표제어를 선정·집필하였다. 2015년 12월 이후 공동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2021년 3월 대북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10권 1질)을 제작하는 등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간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3년에는 『미리 만나는 겨레말 작은사전』(통합본)을 발간(6.28.)하여 전국의 시·도 교육청과 도서관, 통일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였으며, 제주(6.7.), 강원(9.13.)에서는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겨레말 나들이」 온·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유네스코와 함께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제4회 국제학술포럼」을 개최(11.7.~8.)하였다.



『겨레말큰사전』 가제본 국회 전시
(2021.4월부터 상설 전시)



제4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 포럼 개최
(11.7.~8, 페럼타워 페럼홀)

2 종교 교류

기독교, 천주교 등 우리 종교단체들이 조선종교인협의회와 같은 북한의 종교단체들과 대화를 이어가고자 했으나 북한은 호응해오지 않았다. 나아가 북한은 우리 단체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군사도발을 지속하면서 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사회문화교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교류 재개 시에 대비하기 위해 종교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통일부장관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각 종단 지도자들을 예방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종교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면담을 통해 정부는

통일정책에 대한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력 의사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2023년에는 통일부차관 주재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를 출범(12.13.)시켜 소통·협력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 외에도 종교분야 협의체 소통대화(6.29.), 민족종교 분야 소통 세미나(11.24.), 간담회 개최 등 교류협력 추진 동력 유지를 위한 실무적 노력을 병행하였다.



통일부장관,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 예방(8.17.)



통일부차관, 「통일부·기독교 정례 협의회」 출범회의 참석(12.13.)

3 체육 교류

북한은 코로나19를 이유로 「2020 도쿄 하계올림픽」(2021.7.23.~8.8.)에 불참함으로써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2022년 말까지 자격정지 제재조치를 받았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2023년에 해제되었으나, 국제사회 도핑 준수 문제 등으로 북한은 각종 국제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한편 북한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2023.9.23.~10.8.)에 185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였으나, 남북 간 유의미한 접촉과 교류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4 DMZ 연계 사업 추진

(1) DMZ 실태조사 추진

정부는 DMZ 그린평화지대화 실현과 산림생태계 현황파악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2022년부터 DMZ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정부는 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DMZ 내 약 400여 개의 마을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연천, 양구, 고성, 철원 지역 마을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주민 면담 이외에도 문헌조사, 구술 등을 통해 DMZ 일대 사라진 마을에 대한 흔적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책자와 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이를 사이버 공간에서 메타버스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정부는 사라진 마을에 대한 보다 생생한 실태조사를 위해 2024년 상반기에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 민간·지자체 협업으로 DMZ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정부는 DMZ 직접 체험을 통해 안보와 평화의 가치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DMZ 평화의 길'로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개방하였다. 2019년 '평화의 길' 파주, 철원, 고성 구간 개방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4월부터 11월까지 기존 개방구간과 함께 외곽지역에 조성된 강화, 김포, 고양, 연천, 화천, 양구, 인제 구간 개방을 추진하여 6,915명이 방문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DMZ를 보다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여 2022년에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의 도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철원 구간에서는 집중호우로 유실된 비마교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 보조금을 지원하여 「2023 DMZ 통일걷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2023년에는 「DMZ 자유·평화 대장정」이란 이름으로 관계 부처(통일부·행안부·국방부·문체부·보훈부) 및 광역단체(인천시·경기도·강원도)와 합동으로 행사를 개최하였다. 통일부는 가장 먼저 7~8월에 12박 13일의 횡단 코스를 2회 운영하였다. 이 행사에는 대학생·외국인유학생·보훈자녀를 포함한 2030 청년세대의 적극적 참여하에 총 140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까지 동서횡단 구간을 12박 13일 동안 걸으면서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특히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협업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관계부처·광역단체는 9~11월까지 공동주관(1기 행안부·강원도, 2기 국방부·경기도, 3기 문체부·인천시)으로 2차 대장정(6박 7일, 6회)을 실시하였다.



1차 「DMZ 자유·평화 대장정」(7.3.~15.)



2차 「DMZ 자유·평화 대장정」(7.24.~8.5.)

(3) DMZ 통합시스템 구축

정부는 DMZ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체험 공간, 지리·역사·생태 정보, 출입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통일부는 2022년 구축한 'DMZ 유니버스' 누리집(www.universe.go.kr)에 2023년에는 DMZ 일원 사라진 마을 4곳을 추가하고 판문점 가상체험 공간을 구성하였다. 사라진 마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의 고유한 특성을 메타버스 배경 및 인물로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통일과 평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DMZ의 지리·역사·생태 기초자료와 남북 접경지역의 생활관광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한 웹 기반의 DMZ 평화지도(peacemap.universe.go.kr)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DMZ 출입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를 신속하게 협의하기 위해 구축한 출입시스템을 공공분야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DMZ 유니버스 초기화면



DMZ 가상체험(평화역)

제4절 대북협상 역량 강화

1 남북 연락채널의 정상화 촉구

정부는 2021년 10월 4일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된 이후 2023년 4월 6일까지 남북 직통 전화를 통한 정례적인 소통·연락체계를 유지하여, 2023년 북한 측과 유선 정례협의(9시 개시, 17시 마감)를 118회 진행하였다. 그러나 4월 7일부터 북한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돌연 우리 측의 유선 정례협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무응답에도 북한 측에 매일 유선 정례협의 시간(9시 개시, 17시 마감)에 계속해서 통화를 시도하는 등 남북 연락 채널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남북 연락 채널 복구에 대한 통일부 입장' 등 대외 입장 발표(11.2.)를 통해 남북 간 연락채널 유지는 인도적 사안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는 등 계기 시마다 북한에 남북 연락채널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2 남북회담 대비 역량강화

정부는 남북대화 중단 상황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호응할 시 언제든지 남북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회담역량 유지·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 회담 상황을 가정하여 남북환경협력 모의회담을 개최(6.29.)함으로써 남북 접경지역 재난재해(수해, 방역, 산림병해충 등) 공동대응을 위한 회담 의제를 정비하고 회담 전 과정에 대한 운영절차도 점검하였다. 또한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4.28.)하여 회담 의제와 회담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회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남북회담 유관기관 워크숍(4.28.)



남북환경협력 모의회담(6.29.)

이와 함께 남북회담 상황실 설치, 남북통신망 점검, 행사진행 모의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남북회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자문제도를 운영하였다. 남북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원로들로 구성된 남북회담 전략자문단, 남북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기반으로 회담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협상의제를 보완하였다.

또한 남북회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대북협상 능력과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상연구포럼을 총 6회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남북회담 유경험자 강연 및 토론, 각 회담별 담당 실무자들의 회담연구 사례발표 등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갔다.



남북협상 연구포럼(7.26.)



남북회담 전략자문단 회의(12.4.)

3 남북회담사료 공개를 통한 국민 알권리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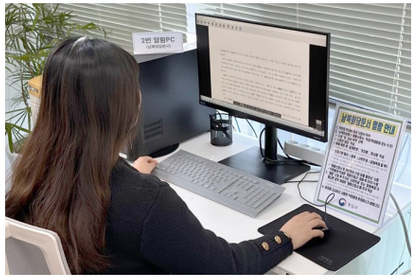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및 접수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 문서를 공개해오고 있다. 회담사료 공개는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에 따라 전직 회담 유경험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을 통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정부는 2023년에도 남북회담사료를 2차례(7.6, 12.28.) 공개하였다. 7월에 공개된 문서에는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전 비밀접촉(1971.11.~1972.6.), 7·4 남북공동성명 발표(1972.7.),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1972.10.~11.) 등 1971년 11월부터 1979년 2월까지의 정치분야 남북회담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되었다. 12월에는 1979년 초반 남북 간 변칙접촉(1979.2.~3.), 남북 간 탁구협회 회의(1979.2.~3.), 1980년 초반 남북 간 총리회담 실무대표접촉(1980.2.~8.) 등 1979년 1월부터 1981년 12월까지의 정치 및 체육 분야 남북회담 진행 과정과 회의록을 공개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회담사료를 공개(총 2,643쪽)함으로써 국민들이 사료를 통해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반 남북 간에 진행된 주요 회담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자들에게도 남북회담 연구를 위한 자료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남북회담사료 열람실은 남북관계관리단,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국회도서관 등 4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면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남북회담문서 열람

부록

APPENDIX

Ⅰ. 통일방안 관련 대통령 연설문

Ⅱ. 남북관계 주요 일지

Ⅲ.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

Ⅳ.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Ⅴ.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I 통일방안 관련 대통령 연설문

1. 노태우 대통령 국회 특별연설 (1989.9.11.)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47회 정기국회의 개회를 축하합니다.

이번 국회는 파란과 성취가 교차한 1980년대를 마무리짓고 희망의 90년대를 여는 뜻깊은 정기국회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많은 결실이 이번 국회에서 거두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민족사의 소망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밝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시련으로 시작된 20세기를 영광으로 마무리지어야 할 이 세기의 마지막 세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이 모자라 끝내 나라를 잃고 만 우리 민족의 해방의 날을 맞았음에도 그 불운의 연장선상에서 국가분단과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민족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열어 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양단한 이 분단의 아픔은 우리들 다음 세대, 다음 세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레의 뜻과 열망을 한데 모아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고 민족통일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이야말로 우리의 넘치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역사적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정치·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당당한 힘을 쌓았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불바다가 되었던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무역국가에 들어선 신흥산업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력 속에 서울올림픽을 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렀습니다.

동서남북 세계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 서울의 한마당에 모인 이 인류화합의 대축제는 국제질서 속에서 피동적인 존재로 비켜서 있던 우리 민족이 세계에 화해의 물결을 주도한 위업이었습니다.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같은 성취에 힘입어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협력하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 동구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일고 있는 개방과 개혁의 물결은 그들 내부 체제와 정책의 변화는 물론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 주었고 그것을 40여년 고착시켰던 세계의 질서와 힘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같은 거대한 안팎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작년 7월 남북한이 더 이상 적대·대결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향해 협력해 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상을 전 세계에 밝혔습니다.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개방으로 이끌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정책은 동서세계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4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 스스로와 세계를 바꾸어 놓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장애가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으며 긴장과 대결은 늦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천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네 번을 거듭하여도 북한을 지배해 온 경직된 체제는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공산화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기본전략이나, 모든 것이 통제된 북한사회 내부도 아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은 뜨겁지만 우리가 맞고 있는 분단현실은 이처럼 냉엄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북한은 도도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는지는 모르나, 결코 이 물결을 끝내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폐쇄노선에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은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 끝내는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앞당겨지도록 돕고 이끌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땀과 인내, 겨레의 슬기와 뭉친 힘이 들어가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쏟아 그들이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작년 10월 4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겨레의 뜻을 모아 새로운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밝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국민들의 광범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공청회를 거쳐 겨레의 소망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저는 남북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형태는 온전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분단 40여 년간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적대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 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5천 년의 긴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전통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공동체야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분단은 좌우익 간의 유혈투쟁과 6·25남침으로 인한 동족 간의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로 심화되었습니다.

적대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 온 남북의 겨레는 생활양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로 회복·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 간의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 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헌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연합은 최고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대표로 구성된 '남북각료회의'와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 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남북 간에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번영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 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의 기초과정에서 통일국가의 정치이념·국호·국가형태 등을 논의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시기·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남북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헌법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일조국의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우리 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남북의 현시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새 공화국 출범 이후 저는 남북 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헌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헌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 속이 이같은 민족공동체 헌장이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사에 통일을 이룩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유럽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함께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프랑스·서독·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지난날의 적대와 대결을 동반자의 관계로 바꾸어 1992년 완전한 경제통합체를 이루며 정치적 통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지켜 왔던 우리가 분단의 벽을 넘어 수천 년 이어온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유와 인권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의사를 대표하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난 보편적 가치입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 북한 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고는 개방의 길로 나설 수도 없고, 우리와 교류·협력·연합하여 민족공동체에 합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적화통일노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자주·평화·민주적 통일의 길은 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이 같은 일을 실천할 경우 남북한관계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분단의 장벽이 높고 두터운 만큼 통일의 길은 험난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비극이 큰 만큼, 그것을 가시게 하는 데는 우리의 더 큰 역량과 지혜, 무한한 참을성과 피땀을 쏟아야 합니다.

이 모든 준엄한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환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조국의 통일이 아니라 겨레의 더 긴 시련일 뿐입니다.

민족문제를 해결할 통일에 관한 한, 우리의 내부적인 이견과 갈등, 반목과 분열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여 무쇠와 같은 민족의 통일의지를 창조해내어야 합니다.

민주번영으로 우리의 통일역량이 더한층 커질 때 분단의 벽은 무너질 것이며, 겨레의 단합된 힘이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이겨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겨레의 보람 위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렸듯이, 온 민족의 지성이 응집되어 통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을 담은 통일방안을 밝히면서 통일의 빛나는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7천만 동포 모두와 함께 힘차게 열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1994.8.15.)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제49주년 광복절을 국민과 더불어 경축합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조국의 장래에 대해 희망과 용기에 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변화와 개혁, 개방과 전진을 향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깨끗한 정부'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상해 임정 청사를 복원하고, 애국선열들의 유해를 고국 땅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졌습니다.

민족의 정기는 되살아나고 있으며, 우리는 민족진운의 역사를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맞추어, 새로운 문명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아시아·태평양 시대, 새로운 문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나 헤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원기를 한군데로 모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되어,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는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7천만 민족의 안전과 생존, 그리고 통일과 번영에 대한 책임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7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사와 남북관계의 흐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나는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자 합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민주주의가 꽃피고, 번영이 넘치는 통일된 나라를 이룩할 때 완성됩니다.

세계사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하였고,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주의의 기틀이 이 땅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이렇듯 어렵게 이룩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될 것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기본 철학 역시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 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주 없이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법전과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만 합니다.

통일은 어떻게 권력을 분배하느냐보다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 중심의 이념보다도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가공적인 국가 체제의 조립보다도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건설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은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일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서 반목과 불신을 쌓아온 남과 북이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하나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남과 북은 적대와 대립의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예멘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고도 내전을 치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외형만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존공영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남북연합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해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통일의 중간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1민족 1국가로 통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통일의 길은 민주와 번영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된 조국은 7천만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이제 한반도에서도 냉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체제 경쟁도 이미 끝났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험이 실패로 귀결된 20세기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인류는 이미 냉전 대신에 자유화, 복지화,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대세 앞에 한반도만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구시대적 대남 적화전략을 마땅히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을 개선하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기본적인 인권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억류자 문제의 해결에도 지체없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허한 이념의 대결 대신에 민족의 복리 증진을 남북관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를 하나씩 갖추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정권 탄생 이후 처음으로 권력승계 작업을 진행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안정 속에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같은 민족으로서 할 수 있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이 협력 속에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때, 자연스런 통일,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결코 민족공동체의 선진국 진입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의 첫걸음은 신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신뢰는 서로가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실천에 옮기는 데서 생겨납니다.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세계와 민족 앞에 그 실천을 약속한 화해와 협력의 대장전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핵문제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준수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를 위배하는 상호 비방은 중지되어야 하며,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군사적 신뢰 구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속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의 고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을 무기로 하는 폐쇄 지향의 모험을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핵 에너지의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민족 발전 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통일은 결국 남과 북의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 발전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부터 모범적인 민주공동체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에의 영광과 환희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의 문제는 곧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의연하고 한결 같은 자세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반세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벅찬 감동과 함께 부끄러운 반성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남북에서 우리 민족이 걸어온 고난의 역정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내년에 맞는 광복 50주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는 광복 50주년을 한마음 한뜻으로 '7천만의 한민족 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을 것을 내외동포 앞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족은 식민시대의 압제를 들고 민족의 광복을 성취해 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해 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냈습니다.

그 연장선 위에서, 이제 우리는 민주와 번영이 넘쳐흐르는 통일조국, 신한국을 기필코 창조해내야 합니다.

선열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는 제2의 광복을 위해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열과 우리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꿈꾸어 왔던 통일되고 번영된 조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문명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제2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우리 모두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II 남북관계 주요 일지

1월

- **1.1.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양 용성 일대)**
- **1.19. 제32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서면)**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 △DMZ 통합시스템 관리 운영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개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 사업비·운영비 지원 등
- **1.23. 美 바이든 대통령,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지명**

2월

- **2.2. 北 외무성, 한미연합훈련 관련 비난 담화**
- **2.7. 통일부,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 발표**
- **2.8. 北, 건군절 75주년 계기 열병식 개최(2.9, 노동·중통)**
- **2.10. 정부,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4명, 기관 7개)**
- **2.17. 통일부, 北 개성공단 내 우리측 시설 무단사용 관련 입장 발표**
  -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측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
  -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향후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하는 바임."
- **2.18.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양 순안 일대)**
- **2.19.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대남 비난 담화(중통)**
- **2.20.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핵·미사일 위협 담화(중통)**
- **2.20.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남 숙천 일대)**

• 2.20.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4명, 기관 5개)

• 2.23. 北,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주장(2.24, 노동·중통)

• 2.26.~3.1. 北,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2.27.~3.2, 노동·중통)

• 2.28.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3월

• 3.1. 美 재무부, 대북 제재 지정(개인 2명, 기관 3개)

• 3.7.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대미 위협 담화(중통)

• 3.9. 北,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 발사(평남 남포 일대)

• 3.10.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신설

• 3.12. 北,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5차 확대회의 개최(노동·중통)

• 3.12. 北, 해상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SLCM) 발사(함남 신포 인근)

• 3.13.~23.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 3.14.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황남 장연 일대)

• 3.16.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양 순안 일대)

• 3.16. 한일 정상회담(도쿄)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
-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

• 3.19.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북 동창리 일대)

• 3.20. 유엔 안보리, 北 ICBM 발사(3.16.) 관련 공개회의(뉴욕, 현지 시각)

• 3.21. 외교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개인 4명, 기관 6개)

• 3.21.~23. 北, 수중공격무기체계('해일') 시험(함남 해안 일대)

• 3.22. 北,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함남 함흥 일대)

• 3.24. 대통령,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연설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
-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

• 3.25.~27. 北, 수중전략무기체계('해일') 시험

• 3.27.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황북 중화 일대)

• 3.30.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4월

• 4.4.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제네바, 현지 시각)

• 4.4.~7. 北, 수중전략무기체계('해일') 시험

• 4.7. 北, 남북연락사무소 및 동·서해 軍 통신선 정기통화 무응답

• 4.10. 北,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6차 확대회의 개최(4.11, 노동·중통)

• 4.11. 통일부장관, 남북통신선 무응답 및 개성공단 무단사용 관련 대북 성명
-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함."
-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

• 4.13. 北,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양 인근)

• 4.15. 北 경비정, 서해 NLL 침범

• 4.16.~18. 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채택(日 나가노현 가루이자와)
- "ICBM 등 북한의 전례 없이 많은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함."

• 4.17. 北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유엔 안보리 비난 입장 발표(중통)

• 4.21. 北 외무상, 북핵 관련 담화(중통)

• 4.24. 외교부·美 재무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개인 1명)

• 4.26. 한미 정상회담(워싱턴 D.C., 현지 시각)
-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 재확인 및 북한의 협상 복귀 촉구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북한 내 인권 증진 및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 4.28.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한미 정상회담 관련 비난 입장 발표(4.29. 중통, 4.30. 노동)

5월

• 5.7. 한일 정상회담(서울)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함."
–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담 등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5.21. 한독 정상회담(서울)
–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 발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아갈 것임."

• 5.22. 한·EU(상임의장·집행위원장) 정상회담(서울)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5.23. 정부, 북한 IT 인력·조직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7명, 기관 3개)

• 5.23. 美 재무부, 대북 독자제재 지정(개인 1명, 기관 4개)

• 5.31. 北, 우주발사체(군사정찰위성) 1발 발사 및 실패 발표(평북 동창리 일대)(중통)

6월

• 6.1.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위성 발사 권리 주장 및 재발사 시사 담화(중통)

• 6.2. 유엔 안보리,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공개회의(뉴욕, 현지 시각)

• 6.2. 한미, 北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 보안권고문 발표
– 정부, '김수키(Kimsuky)' 대북 독자제재 지정(6.2.)

• 6.4.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비난 담화(중통)

• 6.7.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공개본(국·영문) 발간

• 6.14. 정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피해액(447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6.15. 대통령,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주관(경기 포천)

• 6.15. 北 국방성,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대한 경고입장 발표(중통)

• 6.15.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양 순안 일대)

• 6.15. 美 재무부, 北 불법조달 네트워크 관련 대북 제재 지정(개인 2명)

• 6.19. ICAO 정기 이사회, '北 미사일 발사 규탄' 결정 채택(몬트리올, 현지 시각)

• 6.20. 한불 정상회담(파리, 현지 시각)
–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북한의 반복된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불법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음."

• 6.23. 한베 정상회담(하노이, 현지 시각)
– "북한 핵·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위협으로서 아세안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임."

• 6.28. 정부, 北 불법 금융활동 지원 관련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2명, 기관 2개)

7월

• 7.1. 北 외무성, 현대아산 포함 南 모든 인사의 방북 불허 담화(중통)

• 7.6. 통일부, 남북회담문서 대국민 공개
– 7·4 남북공동성명 협의 과정 등 1971년 11월~1979년 2월간 정치 분야 남북회담문서

• 7.7.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

• 7.12.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양 일대)

• 7.14.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유엔 안보리 北 '화성-18형' 발사(7.12.) 관련 공개회의(7.13.) 비난 담화(중통)

• 7.14. 외교부,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4명, 기관 3개)

• 7.17.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한미 확장억제 강화 비난 담화(중통)

• 7.18.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서울)
– 美 전략 핵잠수함(SSBN) 켄터키호 42년 만에 한국 기항

• 7.18. 미군 병사 1명, 판문점 견학 중 월북

• 7.19.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양 일대)

• 7.20. 北 국방상, 한미 핵협의그룹(NCG) 및 美 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7.18.) 관련 담화(중통)

• 7.22. 北,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 발사

• 7.24.~25.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양 일대)

• 7.27. 北, 정전협정체결 70주년 야간 열병식 개최(노동·중통 등)

8월

• 8.9. 北,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7차 확대회의 개최(8.10, 노동·중통)

• 8.11. 통일부, 北 황강댐 무단방류 관련 입장 발표

• 8.15. 대통령, 78주년 광복절 경축사
-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나갈 것임."

• 8.15.~31. 한미 연합훈련(UFS : 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

• 8.17. 美 재무부, 러북 무기거래 관련 대북 제재 대상 지정(기업 3개)

• 8.17.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관련 공개회의(뉴욕, 현지 시각)

• 8.18. 한미일 정상회담(美 캠프 데이비드, 현지 시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통일 한반도 비전("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에 대한 지지 확인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수익 차단을 위한 3국 공조 본격화 △한미일 고위급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 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 8.18. 北, 동해상으로 수상함에서 순항미사일 발사

• 8.23. 美 재무부, 北 가상화폐 세탁 조력자 제재 대상 지정

• 8.24. 北, 우주발사체(군사정찰위성) 1발 발사 및 실패 발표(평북 동창리)

• 8.24. 北 국방상, 한미일 정상회담(8.18.) 비난 담화(중통)

• 8.30. 韓·美·日·英, 러북 간 무기거래 시도 규탄 공동성명

• 8.30.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양 순안 일대)

9월

• 9.1.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5명, 기관 1개)

• 9.2. 北 당 중앙군사위원회, '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 진행(9.3, 노동·중통)
-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

• 9.8. 통일부 조직 개편

• 9.8. 北, 정권수립 75주년 민방위무력 열병식 개최(9.9, 노동·중통)

• 9.13.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양 순안 일대)

• 9.13. 러북 정상회담(러 보스토치니 우주비행장, 현지 시각)

• 9.20.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뉴욕, 현지시각)
-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북 간 군사 거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임."
-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

• 9.21.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10명, 기관 2개)

• 9.26. 대통령,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음."
-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정권을 종식시킬 것임."

• 9.26. 헌법재판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 위헌 결정

• 9.26.~27. 北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핵무력정책' 헌법 명시(9.28, 노동·중통)

10월

• 10.8. 통일부, 北 억류 10년 김정욱 송환 촉구 및 反인륜적 조치 규탄 성명

• 10.13. 통일부, 재중 북한이탈주민 북송 보도 관련 입장 발표
- "중국서 다수의 북한 주민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로 파악, 이와 같은 상황 유감스럽게 생각"

• 10.18.~19. 러시아 외무장관 방북

• 10.19. 한미, 北 IT 인력 합동주의보 발령(韓 외교부·국정원·경찰청, 美 국무부·FBI 공동)

• 10.24. 北 주민 일가족, 동해 NLL 해상 귀순

• 10.26. 한미일 외교장관, 러북 무기거래 규탄 공동성명

• 10.28. 北 외무상,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10.26.) 관련 비난(중통)

11월

• 11.2. 통일부, 남북 연락채널 관련 대북 입장 발표
– "북한은 긴급 상황들에 대한 상호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연락채널을 정상화 할 것을 촉구"

• 11.7.~8. G7 외교장관 회의, '북핵 및 러북 무기거래 규탄' 공동성명(도쿄)

• 11.13.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서울)

• 11.15. 北 미사일총국,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고체연료엔진 시험(노동·중통)

• 11.20. 합참,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동향 관련 대북 경고 메시지 발표

• 11.21. 北, 우주발사체(군사정찰위성) 1발 발사(평북 동창리 일대)

• 11.22.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국무회의 심의 및 대북 통보
–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임.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이며,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

• 11.22. 한영 정상회담(런던 다우닝가, 현지 시각)
–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목표를 지지함."
–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대화와 노력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11.22. 한미일 등 10개국, 北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대북 규탄 공동성명

• 11.22. 北, 미상탄도미사일 1발 발사 실패(평양 순안일대)

• 11.22.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 방문(노동·중통)

• 11.23. 北 국방성, '남북 군사합의 파기 및 최전선에 신형 무기 배치' 위협 성명(중통)

• 11.27. 유엔 안보리, 北 우주발사체(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회의

• 11.30.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힘을 통한 평화' 비난하며 '대결 준비' 주장 담화

• 11.30. 美 재무부, 대북 제재 지정(개인 8명, 조직 1개)

12월

• 12.1. 정부, 北 우주발사체(군사정찰위성) 발사(11.21.) 관련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개인 11명)

• 12.4. 유엔총회,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제네바, 현지 시각)

• 12.12. 美 국무부, 러북 무기거래 관련 제재 대상 지정(기업 3개, 선박 3척)

• 12.13.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 "핵이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
–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12.15.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워싱턴 D.C., 현지 시각)

• 12.18.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양 일대)

• 12.19.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뉴욕, 현지 시각)

• 12.19. G7 외교장관, 北 ICBM 발사 규탄 공동성명

• 12.21. 北 김여정 부부장, 유엔 안보리의 北 ICBM 관련 공개회의 관련 비난 담화(중통)

• 12.26. 정부,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발표

• 12.26.~30. 北,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노동·중통)

• 12.27.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개인 8명)

III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

1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현황

① 귀환국군포로 현황

(단위: 명)

연도	'94	'97	'98	'99	'00	'01	'02	'03
인원	1	1	4	2	9	6	6	5

연도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인원	14	11	7	4	6	3	1	**80**

② 납북자 현황

전시납북자

(단위: 명)

납북자 결정	납북자 비결정	판단불능 결정	합계
4,777	138	460	**5,375**

※ 2010.12.13.부터 2017.6.12.까지 활동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에 따르면, 전시납북자 규모는 10만 명 내외로 추산

※ 남북피해신고 접수건수 5,505건 중 중복 신청 등 130건을 제외한 5,375건을 심사한 결과, 최종 4,777명을 납북자로 결정

전후납북자

(단위: 명)

구분		합계	어선원	KAL기	군·경	기타
피랍		**3,835**	3,729	50	30	26
귀환	송환	**3,310**	3,263	39	–	8
	탈북	**9**	9	–	–	–
미귀환		**516**	457	11	30	18

③ 억류자 현황(6명)

성명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	○○○	○○○
억류 시기	'13.10.	'14.10.	'14.12.	'16.5월 (추정)	'16.3월 (추정)	'16.3월 (추정)
비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2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

① 유엔 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

연도	표결결과 (찬성:반대:기권)	우리 입장
인권위원회		
'03(59차)	28:10:14	불참
'04(60차)	29:8:16	기권
'05(61차)	30:9:14	기권
인권이사회		
'08(7차)	22:7:18	찬성
'09(10차)	26:6:15	공동제안
'10(13차)	28:5:13	공동제안
'11(16차)	30:3:11	공동제안
'12(19차)	무투표	공동제안
'13(22차)	무투표	공동제안
'14(25차)	30:6:11	공동제안
'15(28차)	27:6:14	공동제안
'16(31차)	무투표	공동제안
'17(34차)	무투표	공동제안
'18(37차)	무투표	공동제안
'19(40차)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0(43차)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1(46차)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2(49차)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3(52차)	무투표	공동제안

② 유엔 총회

연도	표결결과(찬성:반대:기권)		우리 입장
	제3위원회	본회의	
'05(60차)	84:22:62	88:21:60	기권
'06(61차)	91:21:60	99:21:56	찬성
'07(62차)	97:23:60	101:22:59	기권
'08(63차)	95:24:62	94:22:63	공동제안
'09(64차)	97:19:65	99:20:63	공동제안
'10(65차)	103:18:60	106:20:57	공동제안
'11(66차)	112:16:55	123:16:51	공동제안
'12(67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13(68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14(69차)	111:19:55	116:20:53	공동제안
'15(70차)	112:19:50	119:19:48	공동제안
'16(71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17(72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18(73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19(74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0(75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1(76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2(77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23(78차)	무투표	무투표	공동제안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

결의안	계기	주요 내용
1718호 ('06.10.14.)	1차 핵실험 ('06.10.9.)	• 7대 무기류·대량살상무기 품목·사치품 통제, 금수품 관련 기술지원 금지 • 대량살상무기 관련 개인·단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설치
1874호 ('09.6.12.)	2차 핵실험 ('09.5.25.)	• 모든 무기(소형무기 제외) 관련 물자 통제 • 대량살상무기·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 가능한 금융거래 금지
2087호 ('13.1.22.)	장거리 미사일 발사 ('12.12.12.)	• 군사전용 의혹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catch-all) 적용 •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시 중대한 조치 천명
2094호 ('13.3.7.)	3차 핵실험 ('13.2.12.)	•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 경우 자국 영토 내 북한 행·발 또는 북한이 중개·알선한 화물 검색 의무화, 공해상 선박이 검색 거부 시 자국 내 입항 거부 의무 •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항공기 자국 진입 금지 • 제재대상 개인·단체와 관련된 자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 적용 • 금지활동에 기여 가능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 대량현금(bulk cash) 포함 금융 및 기타 자산·재원 이전 금지 의무화 • 제재 회피에 기여 가능 무역 및 공적 금융지원 금지
2270호 ('16.3.2.)	4차 핵실험 ('16.1.6.)	• 석탄·철·철광 수출 제한(민생용 제외), 금·희토류 등 광물 수출 금지 및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 등 • 북한 행·발 화물 전수 조사,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 및 제재대상 선박의 이착륙·영공통과/입항 금지, OMM 선박 자산동결 • 북한 은행 해외지점 개설 금지
2321호 ('16.11.30.)	5차 핵실험 ('16.9.9.)	• 석탄 수출 상한제, 은·동·아연·니켈 및 조형물 금수 •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화 •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및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 대북무역 관련 금융지원 금지
2356호 ('17.6.2.)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17.5.29.)	• 제재 대상(개인 14명, 단체 4개) 추가 지정
2371호 ('17.8.5.)	탄도미사일 발사 ('17.7.4, 7.28.)	• 북한의 석탄·철·철광석·해산물·납·납광석 전면 금수(원산지 무관) • 북한 해외 노동자 수 동결(제재위 승인 시 예외) • 신규 북한과의 합작·합영사업 금지(제재위 승인 시 예외) • 제재위가 제재 선박 지정, 회원국은 입항 불허(제재위가 인도적 사유 결정 시 예외) • 대금정산 금지, 일반 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 불가 • 인터폴에 제재대상자 관련 특별공지(Special Notice) 발부 요청
2375호 ('17.9.11.)	6차 핵실험 ('17.9.3.)	• 북한의 섬유 금수(원산지 무관, 유예기간 90일) • 북한 해외 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금지(계약기간 만료 시 연장 금지) • 신규·기존 북한과의 합작·합영사업 금지(120일 내 폐쇄) •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원유 공급량 현 수준 동결(결의 채택일 기준 과거 1년간 공급량 초과 금지) △정제유 공급량 감축(상한 연 200만 배럴) △콘덴세이트(condensate) 및 액화천연가스(LGL) 공급 금지 • 공해상 선박 검색 거부 시 제재위가 등록취소 지정 • 제재위는 결의상 어떤 조치도 필요 시 사안별로 예외 조치 가능
2397호 ('17.12.22.)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17.11.29.)	• 대북 유류 공급 제한 강화 – 원유 공급 연 400만 배럴로 제한, 정제유 공급 연 50만 배럴로 제한 • 북한의 식료품·농산품·기계류·전기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의 수출 금지 (원산지 무관, 결의 채택 이전 서면계약의 경우 유예기간 30일) • 북한의 수산물 수출 금지에 조업권 거래 금지 포함 • 산업용 기계류·운송수단·철강 및 여타 금속류의 대북 수출 금지 •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 해상차단 강화 – 회원국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선박의 나포·검색·동결 의무화 – 회원국에 영해에 있는 금지행위 연루 선박의 나포·검색·동결 권한 부여 – 북한에 대한 모든 선박(신규, 중고)의 이전 금지 • 제재 대상(개인 16명, 단체 1개) 추가 지정 • 제재위는 결의상 어떤 조치도 필요 시 사안별로 예외 조치 가능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①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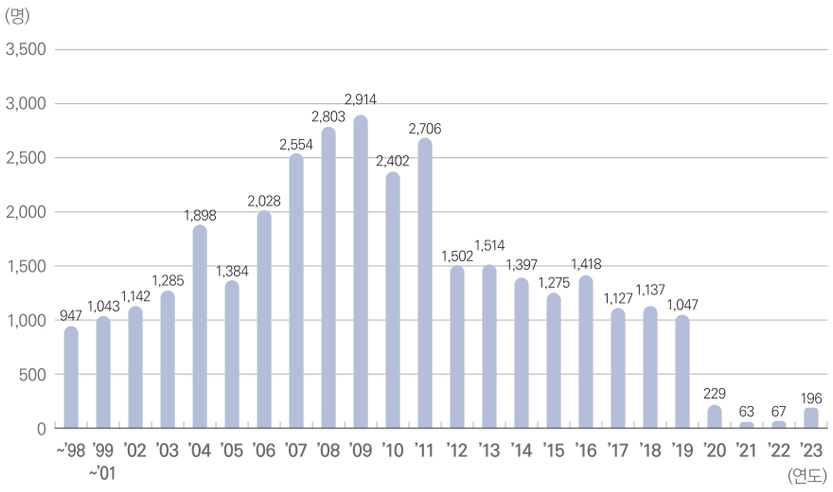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 연도	~'98	'99 ~'01	'02	'03	'04	'05	'06	'07	'08
남성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여성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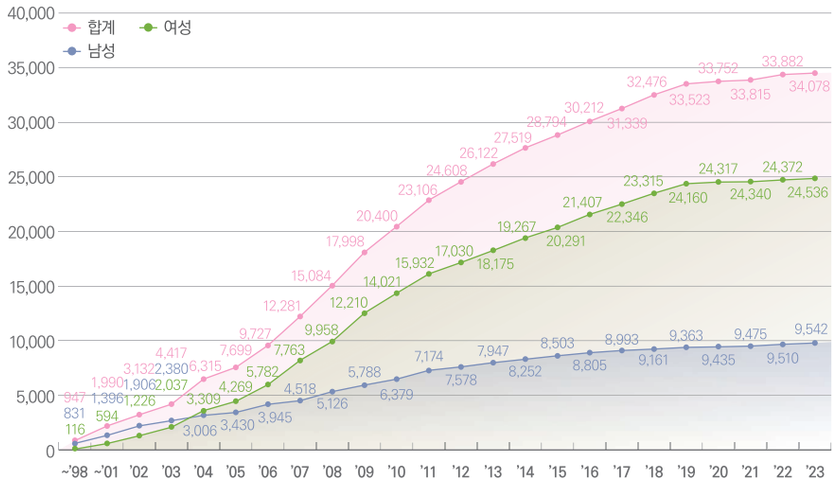
구분 \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남성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여성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합계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여성 비율	77%	75%	71%	73%	76%	78%	80%	79%	83%

구분 \ 연도	'18	'19	'20	'21	'22	'23	합계
남성	168	202	72	40	35	32	9,542
여성	969	845	157	23	32	164	24,536
합계	**1,137**	**1,047**	**229**	**63**	**67**	**196**	**34,078**
여성 비율	85%	81%	69%	37%	48%	84%	72%

※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센터 입소 기준으로 집계



입국인원 누계



입국 당시 연령

(2023.12월 말 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남	652	1,707	2,636	2,173	1,406	595	358	9,527
여	646	2,111	6,990	7,598	4,646	1,469	1,002	24,462
합계	**1,298**	**3,818**	**9,626**	**9,771**	**6,052**	**2,064**	**1,360**	**33,989**
비율	3.8%	11.2%	28.3%	28.7%	17.8%	6.1%	4.0%	10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직업별 입국자 현황

(2023.12월 말 기준)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아동·학생 등	합계
남	413	724	4,199	3,218	94	84	241	554	9,527
여	141	165	9,273	11,982	1,469	223	531	678	24,462
합계	**554**	**889**	**13,472**	**15,200**	**1,563**	**307**	**772**	**1,232**	**33,989**
비율	1.6%	2.6%	39.6%	44.7%	4.6%	0.9%	2.3%	3.6%	10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학력별 입국자 현황 (2023.12월 말 기준)

구분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소학교 (인민 학교)	중학교 (초급, 고급)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 (북)	기타 (불상 등)	합계
남	419	135	806	5,765	862	1,139	360	41	9,527
여	404	216	1,511	17,793	2,703	1,224	515	96	24,462
합계	**823**	**351**	**2,317**	**23,558**	**3,565**	**2,363**	**875**	**137**	**33,989**
비율	2.4%	1.0%	6.8%	69.3%	10.5%	6.9%	2.6%	0.4%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해당 학력별 재학·중퇴자는 포함

출신 지역별 입국자 현황 (2023.12월 말 기준)

구분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남	225	77	1,562	79	465	379	497
여	379	89	4,484	166	660	511	351
합계	**604**	**166**	**6,046**	**245**	**1,125**	**890**	**848**
비율	1.8%	0.5%	17.8%	0.7%	3.3%	2.6%	2.5%

구분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불상 등)	합계
남	778	4,860	275	186	46	98	9,527
여	2,114	15,042	210	286	33	137	24,462
합계	**2,892**	**19,902**	**485**	**472**	**79**	**235**	**33,989**
비율	8.5%	58.6%	1.4%	1.4%	0.2%	0.7%	10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②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현황

직업교육 실적 (단위: 명)

구분	수료 인원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여성	1,002	843	1,018	785	904	807	726	788	260	38	15	74
남성	361	254	262	168	198	150	116	165	97	31	21	37
합계	**1,363**	**1,097**	**1,280**	**953**	**1,102**	**957**	**842**	**953**	**357**	**69**	**36**	**111**

탈북아동·청소년 교육생 수료 현황 (단위: 명)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유치반	19	53	54	63	70	69	42	38	28	28
초등반	97	104	107	142	118	179	124	97	87	49
청소년반	169	232	276	220	192	198	114	106	90	68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유치반	25	36	20	23	7	-	1	5	**581**
초등반	46	43	49	57	19	1	-	0	**1,319**
청소년반	86	116	108	105	52	3	5	8	**2,148**

심화 및 직무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심화교육			직무교육	
	과정수	수료	자격증 취득	과정수	수료
'14	5	103	85	11	440
'15	6	117	72	10	521
'16	8	247	206	8	315
'17	7	291	251	7	290
'18	7	335	292	8	305
'19	7	385	314	8	247
'20	3	18	18	4	28
'21	6	42	40	4	128
'22	8	49	40	10	189
'23	23	195	177	5	130

※ 화천 분소 심화교육 운영 종료('20.5.8. 남북하나재단으로 업무 이관)

③ 주택 알선 현황

(단위: 세대)

연도	'11	'12	'13	'14	'15	'16	'17
세대수	1,815	1,320	1,027	1,232	969	1,096	1,044

연도	'18	'19	'20	'21	'22	'23	합계
세대수	868	1,062	438	97	59	133	**11,160**

④ 정착금 지급 현황

정착금 지급 세부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기준		금액
기본금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 분할지급금은 분기별로 3회 지급	1인(초기 700, 분할 300)		1,000
		2인(초기 900, 분할 700)		1,600
		3인(초기 1,100, 분할 1,000)		2,100
		4인(초기 1,300, 분할 1,300)		2,600
		5인(초기 1,500, 분할 1,600)		3,100
		6인(초기 1,700, 분할 1,900)		3,600
		7인 이상(초기 2,000, 분할 2,200)		4,100
주거 지원금		1인		1,600
		2~4인		2,000
		5인 이상		2,300
지방거주 장려금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지역 : 인천 외 광역시 ㉰지역 : ㉮㉯ 외 지역	1인	㉯ 지역	160
			㉰ 지역	320
		2~4인	㉯ 지역	200
			㉰ 지역	400
		5인 이상	㉯ 지역	230
			㉰ 지역	460
정착장려금	취업장려금	6개월	(수도권) 200	(지방) 250
		1년차	(수도권) 500	(지방) 600
		2년차	(수도권) 600	(지방) 700
		3년차	(수도권) 700	(지방) 800
		총액(최고액)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새출발장려금	6개월	200만 원	
		총액(최고액) 600만 원(200만 원씩, 3회)		
가산금	고령 가산금	만 60세 이상		800
	장애 가산금	장애정도	중증	1,540
			경증	360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보건복지부 고시)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입원		개월 수 X 80 (최대 9개월)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		400(세대당)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산금	제3국 출생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		〈226기~263기〉 자녀 1인당 X 400 〈264기부터〉 자녀 1인당 X 450 (2명 이내)

구분		기준	금액
고용 지원금	북한이탈주민 고용주에게 지급	임금의 1/2, 월 50만 원 한도,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지원	연 600 (최고 2,400)

* 2014.11.29. 이후 입국자부터 미래행복통장 제도 적용으로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장려금과 자격취득 장려금 지원제도 폐지

** 가산금은 사회진출 1년 이후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 분할 지급(최대 16회 분할)
- 단, 장기치료가산금은 예외

기본금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11	'12	'13	'14	'15	'16	'17
인원	2,417	1,524	1,307	1,601	1,171	1,311	1,221
기본금	13,815	12,167	9,173	9,429	7,609	8,277	8,612

연도	'18	'19	'20	'21	'22	'23
인원	1,015	1,125	446	74	219	302
기본금	6,574	8,267	4,723	921	316	895

주거지원금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11	'12	'13	'14	'15	'16	'17
인원	2,417	1,524	1,307	1,601	1,171	1,311	1,221
주거지원금	26,997	25,516	21,454	23,288	19,530	19,983	18,201

연도	'18	'19	'20	'21	'22	'23
인원	1,015	1,125	446	74	673	777
주거지원금	16,880	18,824	9,934	4,809	2,846	3,866

지방거주 장려금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11	'12	'13	'14	'15	'16	'17
인원	369	744	752	555	420	443	353
지급액	805	2,323	1,806	1,172	857	952	721

연도	'18	'19	'20	'21	'22	'23
인원	414	352	201	212	122	16
지급액	828	678	511	541	325	50

장려금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우선선정직종		취업장려금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1	726	1,181	819	1,638	352	704	2,406	11,813	**4,303**	**15,336**
'12	1,118	1,916	1,472	2,944	496	992	3,455	17,204	**6,541**	**23,056**
'13	774	1,221	952	1,904	266	532	3,304	16,608	**5,296**	**20,265**
'14	706	1,082	879	1,757	181	362	3,631	18,238	**5,397**	**21,439**
'15	516	753	733	1,466	135	270	2,844	14,272	**4,228**	**16,761**
'16	252	360	455	910	64	128	2,483	12,078	**3,254**	**13,477**
'17	98	137	202	404	12	24	2,092	10,024	**2,404**	**10,589**
'18	61	82	131	262	14	28	1,720	8,021	**1,926**	**8,393**
'19	33	46	46	92	11	22	1,620	7,542	**1,710**	**7,702**
'20	3	4	5	10	-	-	1,482	7,048	**1,490**	**7,062**
'21	2	3	2	4	1	2	1,424	7,497	**1,429**	**7,506**
'22	0	0	0	0	0	0	1,120	6,051	**1,120**	**6,051**
'23	0	0	0	0	0	0	891	4,733	**891**	**4,733**

가산금

(단위: 백만 원)

구분		'12	'13	'14	'15	'16	'17
가산금	장애	315	243	212	140	110	80
	고령	671	795	658	602	457	327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568	717	631	570	475	385
	장기치료	57	40	43	29	10	10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	-	-	-	-	-
합계		**1,611**	**1,795**	**1,544**	**1,341**	**1,052**	**802**

구분		'18	'19	'20	'21	'22	'23
가산금	장애	46	135	130	88	91	86
	고령	279	205	206	194	161	131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318	218	147	85	36	27
	장기치료	5	19	10	20	7	9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79	223	394	496	450	322
합계		**727**	**800**	**887**	**883**	**745**	**575**

고용지원금

(단위: 개, 명, 백만 원)

연도	'12	'13	'14	'15	'16	'17
업체수	2,915	2,824	2,659	2,670	2,084	1,552
인원	3,976	4,206	3,966	3,501	2,679	1,872
지급액	15,335	15,742	14,615	13,304	10,268	7,393

연도	'18	'19	'20	'21	'22	'23
업체수	964	552	245	77	37	7
인원	1,089	612	269	81	37	7
지급액	4,299	2,346	978	277	52	8

교육지원금

(단위: 개, 명, 백만 원)

구분	'12	'13	'14	'15	'16	'17
대학수	183	200	253	218	239	232
인원	1,570	1,704	1,894	2,006	1,934	1,844
지급액	3,294	3,747	4,212	4,555	4,216	4,120

구분	'18	'19	'20	'21	'22	'23
대학수	231	235	227	230	213	203
인원	1,885	1,889	1,938	1,944	1,857	1,680
지급액	4,154	4,329	4,410	4,855	5,050	4,663

5 남북 왕래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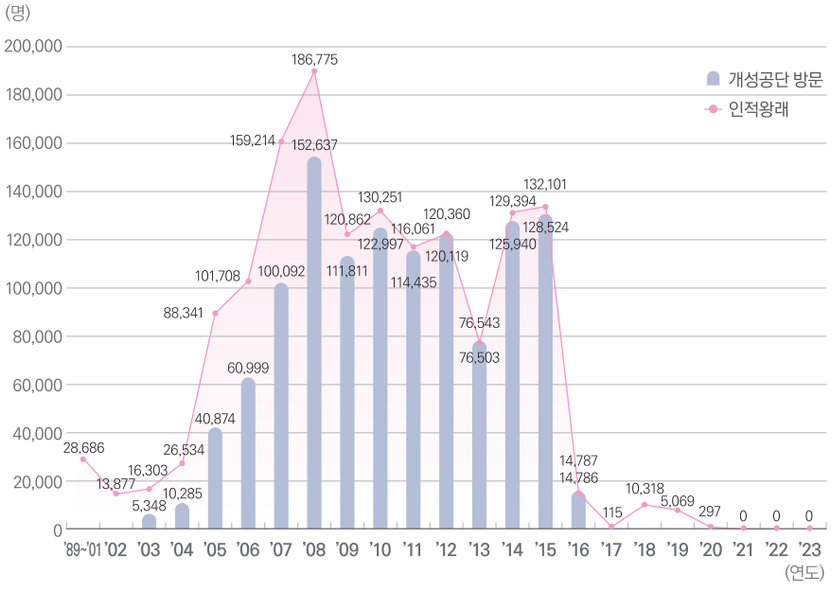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 연도	'89~'01	'02	'03	'04	'05	'06	'07	'08
남→북(방북)	27,152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북→남(방남)	1,534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합계	**28,686**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구분 \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남→북(방북)	120,616	130,119	116,047	120,360	76,503	129,028	132,097	14,787
북→남(방남)	246	132	14	-	40	366	4	-
합계	**120,862**	**130,251**	**116,061**	**120,360**	**76,543**	**129,394**	**132,101**	**14,787**

구분 \ 연도	'17	'18	'19	'20	'21	'22	'23	합계
남→북(방북)	52	9,509	5,069	297	-	-	-	1,468,433
북→남(방남)	63	809	-	-	-	-	-	9,163
합계	**115**	**10,318**	**5,069**	**297**	**-**	**-**	**-**	**1,477,596**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 '18·'19·'20년 방북인원 정정



6 남북교역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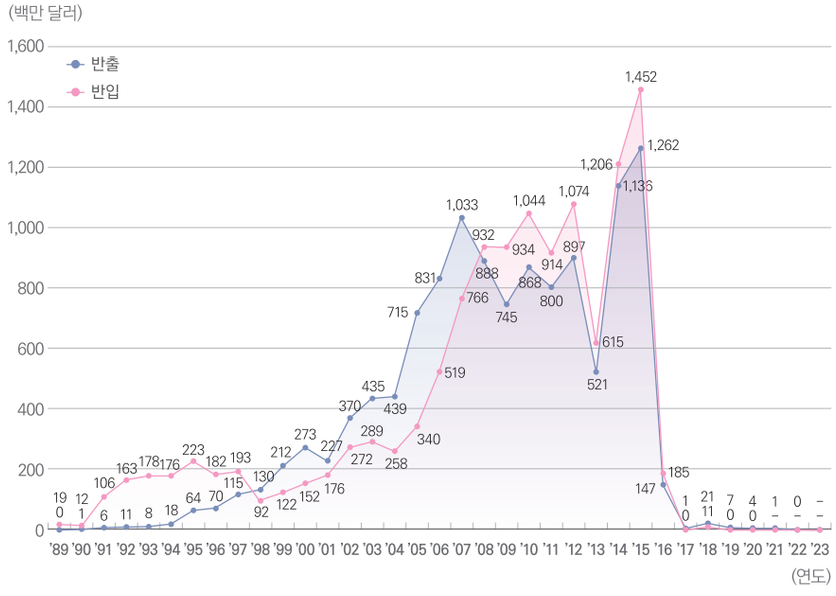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반출	0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합계	**19**	**13**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구분 \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반입	176	272	289	258	340	519	766	932	934	1,044	914	1,074
반출	227	370	435	439	715	831	1,033	888	745	868	800	897
합계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9**	**1,820**	**1,679**	**1,912**	**1,714**	**1,971**

구분 \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반입	615	1,206	1,452	185	0	11	0	0	-	-	-	12,605
반출	521	1,136	1,262	147	1	21	7	4	1	0	-	12,256
합계	**1,136**	**2,342**	**2,714**	**332**	**1**	**32**	**7**	**4**	**1**	**0**	**-**	**24,861**

※ 반올림으로 인해 각 연도의 반입/반출 '소계'와 '합계'가 다를 수 있음.
교역액 1백만 달러 미만은 '0'으로, 없을 경우 '-'으로 표시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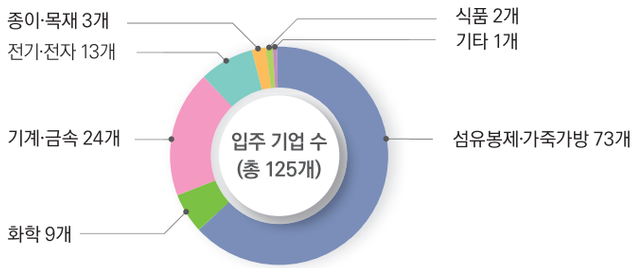
7 개성공단사업 현황

※ 개성공단 통계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2016.2.10.)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작성

① 개성공단 입주 기업수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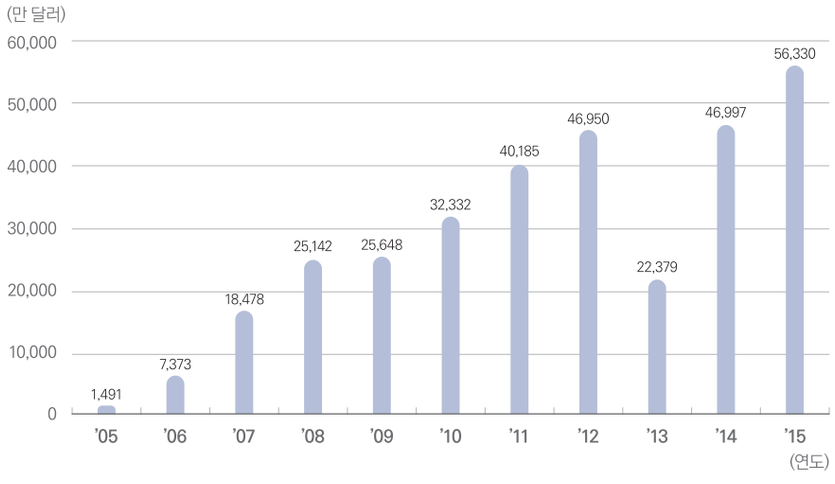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입주 기업수	18	30	65	93	117	121	123	123	123	125	125



② 개성공단 생산액 현황

(단위: 만 달러)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22,379	46,997	56,330	**323,305**



8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①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정부차원						민간차원 (무상)C	총 지원액 (A+B+C)
	무상지원				식량차관 B	지원액 A+B		
	당국차원 (a)	민간단체 기금지원 (b)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c)	지원액 A (a+b+c)				
'95	1,854	–	–	1,854	–	1,854	2	**1,856**
'96	–	–	24	24	–	24	12	**37**
'97	–	–	240	240	–	240	182	**422**
'98	–	–	154	154	–	154	275	**429**
'99	339	–	–	339	–	339	223	**562**
'00	944	34	–	977	1,057	2,034	386	**2,421**
'01	684	63	229	976	–	976	782	**1,757**
'02	832	65	243	1,140	1,510	2,650	578	**3,228**
'03	811	81	205	1,097	1,510	2,607	766	**3,373**
'04	949	102	262	1,314	1,359	2,673	1,558	**4,231**
'05	1,221	120	19	1,360	1,787	3,147	780	**3,926**
'06	2,000	133	139	2,273	–	2,273	709	**2,982**
'07	1,428	220	335	1,983	1,505	3,488	909	**4,397**
'08	–	241	197	438	–	438	726	**1,164**
'09	–	77	217	294	–	294	377	**671**
'10	183	21	–	204	–	204	201	**405**
'11	–	–	65	65	–	65	131	**196**
'12	–	–	23	23	–	23	118	**141**
'13	–	–	133	133	–	133	51	**183**
'14	–	–	141	141	–	141	54	**195**
'15	–	23	117	140	–	140	114	**254**
'16	–	1	1	2	–	2	28	**30**
'17	–	–	–	–	–	–	11	**11**
'18	12	–	–	12	–	12	65	**77**
'19	–	–	106	106	–	106	170	**277**
'20	–	7	118	125	–	125	23	**149**
'21	–	5	–	5	–	5	26	**31**
'22	–	6	–	6	–	6	20	**26**
'23	–	1.5	–	1.5	–	1.5	7	**9**
합계	**11,258**	**1,200**	**2,969**	**15,427**	**8,728**	**24,154**	**9,285**	**33,440**

※ 세부항목 금액의 단수 반올림 처리로 합계에서 차이 발생

②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 연도	민간 차원				당국 차원				
	생사확인	서신교환	기타	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
'85	-	-	-	-	65 (157)	-	30 (81)	35 (76)	-
'90	35	44	-	6	-	-	-	-	-
'91	127	193	-	11	-	-	-	-	-
'92	132	462	-	19	-	-	-	-	-
'93	221	948	-	12	-	-	-	-	-
'94	135	584	-	11	-	-	-	-	-
'95	104	571	-	17	-	-	-	-	-
'96	96	473	-	18	-	-	-	-	-
'97	164	772	-	61	-	-	-	-	-
'98	377	469	-	109 (2)	-	-	-	-	-
'99	481	637	-	200 (18)	-	-	-	-	-
'00	447	984	-	152 (392)	792 (5,276)	39 (39)	201 (1,720)	202 (674)	-
'01	208	579	-	170 (493)	744 (4,937)	623 (623)	100 (899)	100 (343)	-
'02	198	935	-	208 (616)	261 (1,635)	9 (9)	-	398 (1,724)	-
'03	388	961	-	283 (677)	963 (7,091)	8 (8)	-	598 (2,691)	-
'04	209	776	-	188 (470)	681 (5,007)	-	-	400 (1,926)	-
'05	276	843	-	95 (261)	962 (6,957)	-	-	397 (1,811)	199 (1,323)
'06	69	449	-	54 (105)	1,069 (8,314)	-	-	594 (2,683)	80 (553)
'07	74	413	-	55 (167)	1,196 (9,121)	-	-	388 (1,741)	278 (1,872)
'08	50	228	-	36 (97)	-	-	-	-	-
'09	35	61	-	23 (51)	302 (2,399)	-	-	195 (888)	-
'10	16	15	-	7 (18)	302 (2,176)	-	-	191 (886)	-
'11	3	21	-	4 (14)	-	-	-	-	-
'12	6	16	-	3 (6)	-	-	-	-	-
'13	9	22	-	3 (5)	316 (2,342)	-	-	-	-
'14	6	11	-	5 (10)	-	-	-	170 (813)	-
'15	4	26	-	1 (4)	317 (2,155)	-	-	186 (972)	-
'16	6	43	-	3 (8)	-	-	-	-	-
'17	10	46	1	1 (2)	-	-	-	-	-
'18	7	36	1	1 (1)	292 (1,996)	-	-	170 (833)	-
'19	2	16	-	1 (1)	-	-	-	-	-
'20	-	4	-	-	-	-	-	-	-
'21	-	3	-	-	-	-	-	-	-
'22	-	3	-	-	-	-	-	-	-
'23	1	2	-	-	-	-	-	-	-
합계	**3,896**	**11,646**	**2**	**1,757 (3,418)**	**8,262 (59,563)**	**679 (679)**	**331 (2,700)**	**4,024 (18,061)**	**557 (3,748)**

※ 기타 : 성묘 방북

부록

9 남북회담 추진 현황

①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단위: 회)

구분 \ 연도	'7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정치	156	4	10	-	-	-	2	5	18	2	4	5	2	10
군사	-	-	-	-	-	-	-	-	4	2	9	6	5	3
경제	5	-	-	-	-	-	-	-	3	3	14	17	13	11
인도	111	-	-	3	-	4	1	-	2	1	3	7	2	4
사회·문화	34	-	-	-	-	-	-	-	-	-	2	1	1	6
합계	**306**	**4**	**10**	**3**	**-**	**4**	**3**	**5**	**27**	**8**	**32**	**36**	**23**	**34**

구분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합계
정치	5	13	-	-	-	-	-	1	2	3	-	19	-	261
군사	4	11	2		1	1	-	-	1	-	-	4	-	53
경제	8	22	3	4	3	-	-	22	3	1	-	4	-	136
인도	3	3	-	2	4	-	-	1	1	1	-	2	-	155
사회·문화	3	6	1	-	-	-	-	-	1	-	-	7	-	62
합계	**23**	**55**	**6**	**6**	**8**	**1**	**-**	**24**	**8**	**5**	**-**	**36**	**-**	**667**

※ 정치(장·차관급 회담 등) / 군사(장성급·군사실무회담 등)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등) / 인도·사회(적십자·체육 회담 등)
* 4자 회담 12회('97년 7회, '98년 2회, '99년 3회)를 별도로 분류함에 따라 해당 연도 통계에서 제외

②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현황

(단위: 건)

구분	'7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합의서 건수	40	-	2	1	-	2	1	1	18	4	23	31	20	23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합계
합의서 건수	10	39	5	1	1	-	8	2	3	-	23	-	258

※ 2019년 합의서 재분류에 따라 연도별 합의서 건수 조정

10 통일교육 및 연수 현황

① 국립통일교육원 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08년 이전	'09	'10	'11	'12	'13
인원	550,870	71,944	68,946	119,736	133,284	185,194

구분	'14	'15	'16	'17	'18	'19
인원	97,830	145,363	161,677	169,096	557,096	718,233

구분	'20	'21	'22	'23	합계
인원	838,778	1,009,203	861,887	855,336	**6,544,473**

②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19	'20	'21	'22	'23	합계
인원	665,483	887,608	972,852	997,537	1,082,349	**4,605,829**

*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2019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부문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 교육 의무화

③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연수 현황

(단위: 명)

구분	'14	'15	'16	'17	'18	'19
연수인원	3,401	38,226	39,565	38,242	39,999	23,289

구분	'20	'21	'22	'23	합계
연수인원	5,814	1,986	9,044	28,891	**228,457**

Ⅳ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1 기금 조성 실적

(단위: 백만 원)

연도	정부출연금	기타출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총 조성액
'91	25,000	–	–	237	**25,237**
'92	40,000	–	–	5,118	**45,118**
'93	40,000	3	–	4,778	**44,781**
'94	40,000	1	–	9,387	**49,388**
'95	240,000	119	–	14,589	**254,708**
'96	100,000	132	–	18,409	**118,541**
'97	50,000	288	–	27,874	**78,162**
'98	–	–	–	40,280	**40,280**
'99	–	3	149,831	23,013	**172,847**
'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7**
'01	500,000	1,079	310,000	29,406	**840,485**
'02	490,000	77	505,000	42,036	**1,037,113**
'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04	171,400	1	310,000	38,371	**519,772**
'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07	500,000	75	584,591	38,859	**1,123,525**
'08	650,000	52	147,500	49,274	**846,826**
'09	–	56	81,000	74,354	**155,410**
'10	–	–	875,000	51,238	**926,238**
'11	–	2	104,400	38,276	**142,678**
'12	112,800	2	400,000	51,236	**564,038**
'13	105,500	3	530,000	162,300	**797,803**
'14	93,400	–	228,600	47,304	**369,304**
'15	93,203	238	90,500	19,863	**203,804**
'16	92,500	1	207,000	27,399	**326,900**
'17	183,000	1	765,000	9,631	**957,632**
'18	63,711	11	278,400	12,153	**354,275**
'19	100,000	–	203,000	6,574	**309,574**
'20	150,000	11	548,600	22,524	**721,135**
'21	100,000	100	237,000	4,589	**341,811**
'22	100,000	12	105,500	3,313	**208,825**
'23	57,200	–	430,000	7,899	**495,099**
합계	**5,647,713**	**2,857**	**9,568,774**	**1,024,988**	**16,244,334**

2 기금 사용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주민왕래지원	-	-	-	-	-	-	-	-	-
문화·학술·체육협력	9	-	-	-	-	-	-	0.3	-
이산가족	-	6	-	-	-	-	-	0.1	4
인도적 지원(무상)	-	-	-	-	1,824	55	191	199	339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	-
남북경제협력(무상)	13	-	-	-	-	49	-	-	-
남북경제협력(유상)	-	-	-	-	-	-	-	675	-
경수로 대출	-	-	-	-	-	-	-	-	-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	-	-	-	-	-	-	-	-
원금상환	-	-	-	-	-	-	-	-	-
이자상환	-	-	-	-	-	-	-	-	-
기금관리비	3	3	3	3	2	2	2	2	2
합계	**25**	**9**	**3**	**3**	**1,826**	**106**	**193**	**876**	**345**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주민왕래지원	3	3	237	11	11	38	53	17	27
문화·학술·체육협력	21	1	-	7	32	75	74	69	38
이산가족	28	13	20	30	32	133	99	269	182
인도적 지원(무상)	977	976	1,226	1,501	1,225	1,866	2,125	2,272	597
인도적 지원(유상)	867	190	967	1,561	1,020	1,793	39	1,405	-
남북경제협력(무상)	146	898	368	763	760	2,045	1,521	1,725	1,101
남북경제협력(유상)	5	461	667	547	814	568	710	1,400	366
경수로 대출	3,259	3,003	3,009	3,287	870	227	89	-	-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190	391	2,124	3,250	3,895	3,658	8,713	6,337	1,512
원금상환	-	-	1,498	2,549	3,100	2,820	7,730	5,330	500
이자상환	190	391	626	701	795	838	983	1,007	1,012
기금관리비	3	5	6	8	12	16	18	19	21
합계	**5,499**	**5,941**	**8,624**	**10,965**	**8,671**	**10,419**	**13,441**	**13,513**	**3,844**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주민왕래지원	-	-	-	-	-	5	-	-
문화·학술·체육협력	30	21	26	23	21	28	61	23
이산가족	22	20	1	4	21	31	52	16
인도적 지원(무상)	294	192	102	24	132	148	122	7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
남북경제협력(무상)	415	177	167	421	2,037	441	283	4,489
남북경제협력(유상)	240	453	130	221	746	223	36	760
경수로 대출	-	-	-	-	-	-	-	-
공자기금 예수 원리금상환	1,159	9,306	1,086	5,161	6,388	3,882	1,836	2,982
원금상환	100	8,200	-	4,000	5,300	2,916	905	2,070
이자상환	1,059	1,106	1,086	1,161	1,088	966	931	912
기금관리비	39	29	27	28	30	30	30	26
합계	**2,199**	**10,198**	**1,539**	**5,882**	**9,375**	**4,788**	**2,420**	**8,303**

구분	'17	'18	'19	'20	'21	'22	'23	합계
주민왕래지원	1	25	0	-	-	-	-	**431**
문화·학술·체육협력	36	75	37	42	34	34	35	**852**
이산가족	7	51	44	12	23	10	10	**1,141**
인도적 지원(무상)	13	27	314	139	17	34	8	**16,945**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7,842**
남북경제협력(무상)	600	1,914	329	223	215	435	151	**21,686**
남북경제협력(유상)	27	26	26	26	23	267	20	**9,437**
경수로 대출	-	-	-	-	-	-	-	**13,744**
공자기금 예수 원리금상환	8,470	3,420	2,610	6,056	2,831	1,486	4,749	**91,492**
원금상환	7,650	2,784	2,030	5,486	2,370	1,055	4,300	**72,693**
이자상환	820	636	580	570	461	431	449	**18,799**
기금관리비	25	28	23	23	23	23	23	**537**
합계	**9,179**	**5,565**	**3,384**	**6,522**	**3,166**	**2,289**	**4,996**	**164,107**

※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 개별 합계액은 반올림으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V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대과제	실천과제	주요내용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1.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 추진	•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 수립 • 비핵화 단계를 고려한 경제협력 단계적 추진
	2.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추진 • 남북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계기 시 남북대화 추진
	3. 남북 간 단절과 대결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로 전환	•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 및 교류 추진 노력 • 사회문화교류 기반 구축
	4.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조성	• 산림·농업·수자원·환경 분야 협력 의제 개발 및 국내외 공감대 형성
	5.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중심의 통일담론 확산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보완 • 지역별 통일거점 설치·운영 및 사회적 대화 실시 • 통일 국제협력 활성화 등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 • 대국민 북한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
	6.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미래공간 구현	• 메타버스를 활용,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

대과제	실천과제	주요내용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	1. 원칙에 입각한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	• 북한 상황을 고려, 인도적 지원 실시 •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 구축
	2.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 이산가족 전면 생사확인·상봉 추진 및 교류기반 구축 •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송환 및 기념사업 등 추진
	3. 북한인권재단 정상적 출범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북한인권재단 출범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지원 확대 •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

찾아보기(INDEX)

*영어와 숫자는 한글 발음으로 정리

ㄱ

개성공단 238, 242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 243
겨레말큰사전 244~245
국군포로 65~70
국립북한인권센터 45, 53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66
국립통일교육원 184~187, 192~208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170~171

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239~240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0, 31, 236~238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33~34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33~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2~33
남북관계발전위원회 33
남북교류협력 232~2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2~235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23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33~235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176, 234~235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58~59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58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58
남북이산가족찾기 누리집 57, 60, 62
남북출입사무소 236~237
남북통합문화센터 114~120
남북하나재단 103~109
남북협력기금 175~178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176
남북회담 250~253
남북회담사료 252~253
납북자 28, 65~70, 150, 154
납북자대책위원회 69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69

ㄷ

담대한 구상 16~18, 21~29
대북지원정보시스템 74
DMZ 실태조사 247
DMZ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234, 248
DMZ 평화의 길 247

ㅁ

마음건강센터 94~95, 125
마음소리공감 상담센터 125~128
물망초 상징사업 70
미래행복통장 105, 110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34

ㅂ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171~172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25~26
북한 실상 알리기 137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83, 104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 121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 105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80~8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4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94, 104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104, 123~124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122~123
북한인권결의안 48
북한인권 국제대화 51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51, 163
북한인권기록센터 54
북한인권법 42, 53~54
북한인권보고서 42~55
북한인권 상호대화 45~53
북한인권재단 53
북한인권정책협의회 53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52~53
북한인권증진위원회 53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41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47
북한자료센터 168, 171
북한정보포털 167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16, 26~34

ㅅ

사이버 통일교육 185
사회적 대화 141~142, 147
사회통일교육 184, 186, 213
사회적응교육 83, 86~87

ㅇ

억류자 47~59, 65~70
영농정착 성공 패키지 109
우리말상담실 88
우리말어학실 88
워싱턴 선언 17, 22~32, 154
유엔군사령부 158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48~49
유엔인권이사회 48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48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65
이산가족 57~64
이산가족교류지원 176
이산가족법 62
이산가족 영상편지 60~61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60
이산가족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60
이산가족의 날 58, 62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57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73
인천통일+센터 146~148

ㅈ

정착금 102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59
지역적응센터 92, 98, 104
지역통일교육센터 202, 209~21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233~234

ㅊ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93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204
청소년 통일교육 204
7·4 남북공동성명 252

ㅋ

캠프 데이비드 정신 17, 23, 32
코로나19 61~63, 71~72

ㅌ

탈북청소년 93, 111~114
통일공공외교 159, 163~164
통일관 213~216
통일교육과정 185~189
통일교육 선도대학 206~210
통일교육연구센터 202
통일교육 연구학교 210
통일교육위원 212~213
통일교육주간 200~202
통일교육지원법 184, 209, 216
통일교육협의회 210
통일로가요 143~144
통일문화행사 139, 165
통일미래기획위원회 134~135
통일방송(UniTV) 151~153
통일법제 173~174
통일법제추진위원회 173
통일부 조직개편 173
통일+센터 145~148
통하나봄 139~147

ㅍ

판문점 견학 187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187
평화경제특구법 240

ㅎ

하나둘학교 91~92
하나센터 126~129
하나원 86~113
하나의원 93
하나원 프레스데이 100
학교통일 체험교육 204
한독통일자문위원회 159~160
한반도국제포럼(KGF) 161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24~2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219~220
핵협의그룹(NCG) 17, 22~23
화천 분소(제2하나원) 96~97

2024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WWW.UNIKOREA.GO.KR

인쇄일 2024년 5월
발행일 2024년 5월
발행처 통일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3
팩스 02-2100-5851





